

발간등록번호

2023-KIHF-218

# 저출생·고령화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방향성 연구

2023. 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저출생 · 고령화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방향성 연구

2023. 11.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진 미 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유 재 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딩 징 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연구 지원: 조 주 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목 차

<b>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b>제2장 지역별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b> .....	13
1. 지역별 인구 변화 .....	15
2. 지역별 가구·가족의 변화 .....	38
3. 지역의 인구 및 가구 특성 유형화 .....	62
4.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공급 .....	66
5. 지역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의 시사점 .....	70
<b>제3장 가족 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유관기관 분석</b> .....	75
1. 가족 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분석 .....	77
2. 가족 서비스 관련 기관 기능 및 전달체계 .....	97
<b>제4장 가족센터 조사 결과</b> .....	107
1. 센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09
2. 센터장 FGI 결과 .....	152
<b>제5장 종합 및 결론</b> .....	159
1. 연구결과 요약 .....	161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방향성 제언 .....	164
3.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	175

참고문헌 .....	177
부록 .....	181
설문지 .....	229

## 표 목 차

표 1-1   2023년 가족센터 영역별 수행사업의 대상 .....	7
표 1-2   지역별 센터 응답률 .....	10
표 1-3   센터장 FGI .....	11
표 2-1   2022년 전국 및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 수와 비율 .....	17
표 2-2   2022년 인구 규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19
표 2-3   2022년 유소년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21
표 2-4   2022년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23
표 2-5   2022년 고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25
표 2-6   2022년 시도별 인구이동 통계 .....	26
표 2-7   2022년 인구 순이동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28
표 2-8   2030년(추정) 인구 규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30
표 2-9   2030년 유소년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33
표 2-10   2030년(추정)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35
표 2-11   2030년 고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37
표 2-12   2022년 1인 가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43
표 2-13   2022년(2021년) 시도별 혼인 통계 .....	45
표 2-14   2022년 조혼인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47
표 2-15   2021년 다문화 혼인 비중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49
표 2-16   2022년 시도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	50
표 2-17   2022년 합계출산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52
표 2-18   2022년(2021년) 시도별 이혼 통계 .....	53
표 2-19   2022년 조이혼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55
표 2-20   2021년 다문화 이혼 비중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57
표 2-21   2020년 시도별 한부모가구 통계 .....	59
표 2-22   2020년 한부모가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61

표 2-23   인구 및 가구 특성 5개 시군구별 유형 군집분석 결과 .....	64
표 2-24   2020년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통계 .....	66
표 2-25   2020년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	69
표 3-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정책과제 .....	79
표 3-2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정책과제 .....	82
표 3-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정책과제 .....	85
표 3-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정책과제 .....	88
표 3-5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 정책과제 .....	90
표 3-6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정책과제 .....	91
표 3-7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정책과제 .....	94
표 3-8   한국보육진흥원 미션 및 정책과제 .....	97
표 3-9   아동권리보장원 미션 및 정책과제 .....	100
표 3-10   중앙사회서비스원 미션 및 정책과제 .....	103
표 3-11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황 .....	105
표 4-1   응답센터의 특성 .....	110
표 4-2   최다 및 최소 대상 가족 유형 .....	111
표 4-3   센터 이용자 특성 .....	113
표 4-4   지역 인구변화 체감 .....	115
표 4-5   지역 인구변화 체감: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16
표 4-6   인구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	117
표 4-7   인구변화가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20
표 4-8   지역 인프라의 수량 변화 .....	123
표 4-9   지역 인프라의 수량 변화: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24
표 4-10   인프라 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	126
표 4-11   인프라 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29
표 4-12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상황 .....	131
표 4-13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상황: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32

표 4-14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정도 .....	133
표 4-15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정도: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33
표 4-16   센터 회원 관리 .....	134
표 4-17   센터 회원관리와 성과보고서 작성 여부 .....	135
표 4-18   활용 통계 종류 .....	136
표 4-19   사업 계획 및 운영시 지역 통계 활용 여부 .....	136
표 4-20   인구변화 관련 가족관계 사업 방향성 .....	137
표 4-21   인구변화 관련 가족관계 사업 방향성: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38
표 4-22   인구변화 관련 가족돌봄 및 생활 사업 방향성 .....	139
표 4-23   인구변화 관련 가족돌봄 및 생활 사업 방향: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40
표 4-24   인구변화 관련 지역공동체 사업 방향성 .....	141
표 4-25   인구변화 관련 지역공동체 사업 방향: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42
표 4-26   인구변화 관련 서비스 운영방식 요구도 변화 .....	143
표 4-27   인구변화 관련 서비스 운영방식 요구도 변화: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45
표 4-28   인구변화 관련 여성가족부·한기원의 향후 과제 .....	148
표 4-29   인구변화 관련 여성가족부·한기원의 향후 과제: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	150
부록표 2-1   2022년 시군구별 인구구조 통계 .....	183
부록표 2-2   시도별 가구유형 규모, 2023년, 2030년 .....	189
부록표 2-3   2022년 시군구별 혼인 통계 .....	193
부록표 2-4   2022년 시군구별 출산 통계 .....	199
부록표 2-5   2022년 시군구별 이혼 통계 .....	205
부록표 2-6   2020년 시군구별 한부모가구 통계 .....	211
부록표 2-7   2022년 시군구별 인구이동 통계 .....	217
부록표 2-8   2020년 시군구별 사회복지시설 통계 .....	223

## 그림 목차

그림 2-1   1960~2070년 연령별 인구구조 .....	16
그림 2-2   2022년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18
그림 2-3   2022년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20
그림 2-4   2022년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22
그림 2-5   2022년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24
그림 2-6   2022년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27
그림 2-7   2030년(추정)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30
그림 2-8   2030년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32
그림 2-9   2030년(추정)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34
그림 2-10   2030년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36
그림 2-11   시도별 가구 증감, 2020년 대비 2050년 .....	38
그림 2-12   시도별 평균 가구원 수, 2000, 2020, 2050년 .....	39
그림 2-13   시도별 가구유형별 가구 구성비 추이, 2020-2050년 .....	39
그림 2-14   시도별 1인 가구 구성비, 2020, 2050년 .....	40
그림 2-15   시도별 부부가구 구성비, 2020, 2050년 .....	40
그림 2-16   시도별 부부+자녀가구 구성비, 2020, 2050년 .....	41

그림 2-17   시도별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구성비, 2020, 2050년	41
그림 2-18   2022년 시군구별 1인 가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42
그림 2-19   2022년 시군구별 조혼인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45
그림 2-20   2021년 시군구별 다문화 혼인 비중(%)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48
그림 2-21   2022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51
그림 2-22   2022년 시군구별 조이혼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54
그림 2-23   2021년 시군구별 다문화 이혼 비중(%)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56
그림 2-24   2020년 시군구별 한부모가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60
그림 2-25   시군구별 인구 및 가구 특성 군집분석 결과	63
그림 2-26   2020년 시군구별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67
그림 3-1   2009년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11-2020	82
그림 3-2   노후준비지원센터 전달체계	93
그림 5-1   시군구별 인구 및 가구 특성 군집분석 결과	162
그림 5-2   가족사업안내의 센터 유형	165



# 연구요약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구별 인구변화 및 가구·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여 가족 서비스 수요층의 변화를 전망하고 가족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임
- 가족 서비스와 관련 있는 기본계획과 유관기관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여성가족부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의 가족센터 운영과 지원, 가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가족센터 대상 설문조사와 센터장 FGI를 통해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센터 운영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가족 서비스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자 함

## II. 연구방법

- 연구 기간 : 2023년 7월 7일 ~ 11월 17일
- 통계청 자료 분석
  - 가구통계 및 인구동향 시계열 자료(2015~2022) 및 추계자료(~2030)를 시군구 단위로 재분석
  - 시군구별 인구 규모, 유소년인구비율, 혼인율, 이혼율, 합계출산율 등 지표를 활용하여 군집화
  - GIS 활용하여 공간적 군집성, 특이(과도, 과소)지역 도표화
- 문헌조사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제2차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에서 가족 서비스 관련 내용 검토
  -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서비스원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유사 관련 서비스기관 현황 및 사업 방향성 검토

- 가족센터 대상 설문조사
  -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센터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응답율: 105개소, 50%)
  - 조사 기간: 2023년 9월 11일 ~ 25일
- 센터장 FGI
  - 고령화 비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가족센터장 초점집단 면접조사(2팀)
- 전문가 자문
  - 인구문제 및 가족정책 전문가 자문(4명)

### III. 주요 결과

#### 1. 지역별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

- 인구 및 가구통계 분석 결과
  - 2022년 전체인구는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데, 특히 서울 송파구부터 경기 남부 성남, 부천, 수원, 용인, 화성, 충남 천안시까지 이어지는 권역은 2030년까지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가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 있음
  - 반대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 지역에서는 전체인구, 유소년인구는 감소 중이며 2030년까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전체인구 수는 앞으로 감소하지만, 2050년까지 경기, 인천, 충남, 세종, 충북, 강원 지역에서는 가구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 평균 가구원 수도 감소 중이며 2050년에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하면 2명 미만으로 더 낮아질 예정이라 가구 구성과 가정생활에도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함
-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공급
  - 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 부산, 울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음
- 시군구 군집분석 결과
  - 인구 규모, 유소년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합계출산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국제결혼 비율 등 인구학적 특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총 5개 유형)
    - 유형1은 인구 규모가 크고,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조혼인율은 높지만, 합계출산율은 낮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자치구 72개가 포함되는 유형

- 유형2는 인구는 많은 편이지만 유소년인구비율은 높지 않고,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이 모두 낮으며,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도권, 광역시와 인접하거나 중소도시인 59개 시군구 유형
- 유형3은 인구는 보통,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은 편이며, 합계출산율도 높은 편이지만, 조혼인율이 보통 수준이고 조이혼율은 다소 높은 편인 수도권,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54개 시군구 지역이 포함되는 유형
- 유형4는 전체인구는 적은 편이고, 유소년인구 비율도 낮은 편이며, 조혼인율도 낮은 편이지만,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내륙산간 또는 해안가의 28개 군 지역이 포함되는 유형
- 유형5는 전체인구가 많고,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고, 조이혼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시, 대도시의 일부 구 등 16개 시군구가 포함되는 유형

## 2. 센터 설문조사 및 FGI 결과

- 인구구조 변화 체감
  - 현재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영유아기 자녀 또는 학령기 자녀를 가진 30~40대 가족이며, 다문화가족이 주된 대상층인 센터가 약 60%임
  -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가 높으며, 특히 아동인구 및 청년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를 체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임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제공대상이 다양해지며 많아지고, 사업종류가 많아짐
    - 서비스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지역주민 리더 발굴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체감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요구는 점점 많아지는 상황임
    -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 인프라 및 다양한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센터 준비
  -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센터 준비도는 7.0점(0~10점 범위) 수준이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이나 새로운 대상 발굴을 시도하고 있음
    - 한가원의 관련 주제 교육에 참여하는 편이나 센터 내부적인 역량 강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가족 서비스의 변화 필요성
  - 기존 사업 중 가족상담, 부모역할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1인 가구 생활 지원 및 상담,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지역주민 간 교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수준 높음
  - 결혼이민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초기 정착 지원 및 취업지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등)은 축소, 유지, 확대 의견 비율이 비슷하여 지역별로 필요성이 다름
  - 서비스 제공 방식의 다양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도권 지역의 센터들은 비대면 교육, 상담, 문화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의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비수도권 지역의 센터들은 상대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소통교류공간 등 공간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FGI 결과, 지역의 특성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로 센터 운영과 사업의 자율성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함
  - 인구감소에 따라 전문인력 및 종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에 맞는 한 가원의 종사자 교육이 필요함
  - 사업 대상, 사업 유형, 행정 및 운영 등에서 자율성이 필요함

#### IV.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지역에 맞는 특화 모델 개발과 운영
  -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강조·확대하고 그 외 사업 중 수요가 낮은 사업은 최소화하거나 종료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전략으로 센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 대상으로 특화하는 모델: 기존에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지역의 가족센터 및 지역특화비자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에 적합
    - 중장년 가족 대상으로 특화하는 모델: 유형2의 일부지역과 유형4로 분류된 지역처럼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고 다문화혼인 비중이 낮은 지역에 적합
    - 영유아기/학령기 가족 대상으로 특화하는 모델: 유형1, 유형2의 일부지역, 유형5로 분류된 지역처럼 인구가 많고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적합

- 지역 인구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 지원
  - 1인 가구 사업의 다양성 모색
  - 센터의 행정 기능 강화 및 자율성 부여
  - 지역센터 평가지표 개선 및 자율성 제공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한가원의 역할
  - 저출생·고령화 대응기관으로서 홍보 및 자리매김
  - 지역 센터 상황에 맞는 사업방식 전환 및 전문인력 교육
  - 지역 센터 상황에 맞는 종사자 교육
  - 한가원의 연구조사 기능 강화 및 데이터 활용
  -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 지역 센터가 전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상황을 파악할 필요 있음
  - 지역 현장조사와 직급별 실무자 FGI를 통해 유형화 모델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사업안내의 구체적 사업의 적실성을 평가하여 센터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 있음



# 제1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인구변화 국면]

한국 사회는 2015년 이후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하여 새로운 인구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과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현상은 근대화 이후 계속되는 현상이라 새롭지 않지만,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16년부터 급감하여 2022년에는 0.78명으로 낮아졌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0.8%에서 2015년 12.8%로 2%p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17.9%로 5.1%p 증가하였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과 고령인구 수가 증가하는 것은 별개 현상이지만, 두 가지 현상이 합쳐져서 가족의 여러 변화를 초래한다. 첫 번째 변화는 함께 사는 가족 수가 줄어드는 소규모화와 분화 현상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90년 3.7명, 2000년 3.1명에서 2020년 2.3명으로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실제 같이 사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다인 가구가 1인 가구로 분화한 이유도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15년 27.2%로 3.3%p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34.5%로 7.3%p 대폭 증가하였다. 가족은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인데, 가족원 수가 감소하면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함께 사는 기간 총량이 짧아진다.

두 번째 변화는 가족의 노화 현상이다. 자녀 수가 줄어들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가족생애주기 중 형성기, 확대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축소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난다(진미정 외, 2014). 함께 살던 미성년자녀가 독립하여 1인 가구를 형성하면, 중장년기의 부부만 집에 남게 되므로 1세대 부부가구를 이루게 된다. 2010년 부부가구 중 60대 이상은 47.6%이었는데, 2020년에는 63.6%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82.9%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된다(통계청, 2022,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 부부가구로 살던 중 이혼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1인 가구가 되기 쉬운데, 2050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이 56.0%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된다. 가족의 노화 현상은 중장년기 이후 가족관계가 축소되면서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길어진다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진행 속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2023년 8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 10.8%, 경기도 15.2%, 울산광역시 15.2%인데 비해, 전라남도 25.8%, 경상북도 24.3%, 전라북도 23.8%, 강원특별자치도 23.6%로 모두 23%가 넘는다(통계청 KOSIS, 고령인구비율). 인구변화의 속도가 지역별로 달라서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저출생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재원을 지방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금은 광역 15개, 기초 107개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광역 25%, 기초 75%로 배분된다(기획재정부, 2022).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의 격차는 평균수명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별 이동을 및 출산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역별 분석이 필요하다.

## [인구변화와 가족정책 대응의 필요성]

새로운 인구변화를 초래하는 원인 행위인 혼인, 출산, 이주 등은 대부분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생애사건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정책은 가족의 욕구에

맞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생활, 관계, 제도 차원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인구변화와 가족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가족정책의 증장기 밑그림인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이다. 4차 기본계획은 가족 변화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족 변화 중에서도 가족의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전통적 가족 규범의 약화, 가족 다양성의 증가, 성평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부족하다(진미정, 2021).

건강가정기본계획 외에도 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이 여럿 있다. 먼저, 2006년부터 시작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시행 주기가 같아서 비슷한 시점에 수립되고,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3개 핵심 영역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은 가족정책과 중복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과 방향성이 가족정책의 내용 및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아동정책기본계획], [증장기보육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가족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가족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봄으로써 가족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서비스의 방향성]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센터라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도 운영과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가족센터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지역에서 가족 대상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며, 지역사회에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 가족센터 사업과 서비스는 크게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표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 사업영역의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돌봄 사업영역의 가족희망드림, 가족생활 사업영역의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영역의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가족사랑의 날 등 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대상이 가장 많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왔으며,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지역공동체 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해왔다. 대상과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진보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가속화하는 인구변화와 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구·가구 구성이 변화하면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가족의 구성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지역 및 회원의 인구학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족의 노화이다.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가족원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가족생애주기 후반부에 돌봄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주로 일자리, 노후준비, 요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필요한 돌봄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안전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반의존 상태의 노인과 노인 부부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노년기의 동거, 부부관계, 세대관계

등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는 공적 관심이 부족하여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가족센터에서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과 영역이다.

표 1-1 | 2023년 가족센터 영역별 수행사업의 대상

사업 영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생애 후반기 가족 대상
가족관계	임신출산(부모)지원 예비부부·부모 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자녀 성장 지원 이혼전후 가족지원 부부역할 지원	부부역할 지원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돌봄) 조부모 역할 지원
가족돌봄	가족희망드림 면접교섭 서비스	가족희망드림
가족생활	맞벌이 일·가정 양립 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인구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가족정책과 서비스가 지역의 인구·가구 변화, 가족 기능 변화에 부응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정책 및 서비스 필요성(수요)에 주목하여 향후 여성가족부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이 어떤 가족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인구 변화 및 가구·가족 변화 분석
  - 시간적 범위: 2015~2030년
  - 공간적 범위: 230개 시군구
  - 분석 내용: 총인구, 합계출산율, 혼인율, 유소년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다문화가족 비율 등 인구구성과 가족 변화 특성 및 추이 분석 및 인구 및 가구 부문 추계 파악
- 가족 서비스 이용층의 현황 및 변화 파악
  -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센터 서비스 이용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 센터 대상 설문조사 자료 활용
  - 센터장 대상 FGI 자료 활용
  -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가족 형태 및 가족 변화 등을 고려한 가족 서비스 내용 및 가족센터 운영 변화 방향성 전망
-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의 중장기 변화 방향성 도출
  - 가족 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유관기관 정책서비스 동향 파악
  - 지역별 변화의 인구 전망, 중장기적 가족센터 서비스 방향성 도출
  - 가족 서비스 방향성에 따른 한가원의 중장기적 대응 방안 논의

## 2) 연구방법

### (1)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 분석

- 가구통계 및 인구동향 시계열 자료(2015~2022) 및 추계자료(~2030)를 시군구 단위로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 추이 분석
- 시군구별 인구감소율, 유소년인구비율, 혼인율, 이혼율, 합계출산율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군집화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활용
  - 시군구별 주요 인구, 가족 통계지표를 지도로 구현하여 지리적 분포 파악
  - 공간적 군집성, 특이(과도, 과소)지역, 지역별 특징

### (2) 문헌조사

- 기본계획 등 행정계획 자료 검토
  - 유관기관 정책서비스 동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현황 및 관련 서비스 파악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보건복지부) 등에서 가족 서비스 관련 내용 검토
- 유사관련 서비스 기관 최근 사업 동향 검토
  -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서비스원(중앙-광역-센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유사 관련 서비스기관 현황 및 전달체계 검토

### (3) 가족센터 대상 조사

-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210개 가족센터 대상 설문조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 및 가족센터장 2명을 통해 조사 내용의 타당성과 응답 용이성에 관한 검토를 거친 후 조사를 시행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한가원에서 센터 대표 메일로 공문을 보낸 후 설문조사 참여 요청.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진에서 메일과 전화 연락을 통해 참여 독려)
- 조사 기간: 2023년 9월 11일 ~ 25일
- 응답자: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응답
- 응답율: 총 105개 센터(50.0%)

표 1-2 | 지역별 센터 응답률

(단위: 개, %)

	센터 수	응답 수	응답률		센터 수	응답 수	응답률
서울시	25	15	60.0	경기도	26	15	39.0
부산시	10	7	70.0	강원도	18	6	33.3
대구시	8	3	37.5	충청북도	11	3	27.3
인천시	9	8	88.9	충청남도	13	5	38.5
광주시	5	1	20.0	전라북도	13	4	30.8
대전시	2	1	50.0	전라남도	22	11	50.0
울산시	5	3	60.0	경상북도	21	12	57.1
세종시	1	1	100.0	경상남도	19	11	57.9
				제주도	2	0	0.0

- 조사 내용:
  - 최근 10년간 센터 이용층의 연령대, 성별, 가구구성, 다문화가족 비율 변화
  -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의 유형 및 역할 변화
  -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사업
  - 지역주민의 수요나 요구가 있는 사업
  - 서비스 사각지대
  -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축소 필요성
  - 지역 내 인구변화로 인한 센터 운영 및 사업 시 어려운 점

- 지역의 인구변화 대응 준비도와 내용
- 정기적 수요조사 시행 여부 및 활용도
- 향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과제 등

○ 고령화 비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가족센터장 초점집단 면접조사

- 일시: 2023년 10월 6일. 고령화 비율 높은 지역 1팀
- 일시: 2023년 10월 18일. 고령화 비율 낮은 지역 1팀
- 현장에서의 변화 관련 요구사항, 대상 및 서비스 사각지대 관련 내용 등

표 1-3 | 센터장 FGI

번호	소속	경력	번호	소속	경력
A	경상북도 ○○	10년 이상	E	서울시 ○○	10년 이상
B	인천시 ○○	3년 이하	F	경기도 ○○	5년 이상
C	강원도 ○○	10년 이상	G	강원도 ○○	15년 이상

○ 전문가 자문

- 인구문제 및 가족정책 전문가 대상 자문(4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경기여성가족재단,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소속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
- 자문 내용:
  - 인구구조 및 가족 변화에 따른 지역 격차
  - 지역별 인구변화 대응 노력 현황
  - 가족센터 및 서비스 방향성 등



## 제2장

# 지역별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

1. 지역별 인구 변화
2. 지역별 가구·가족의 변화
3. 지역의 인구 및 가구 특성 유형화
4.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공급
5. 지역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의 시사점



## 제2장 지역별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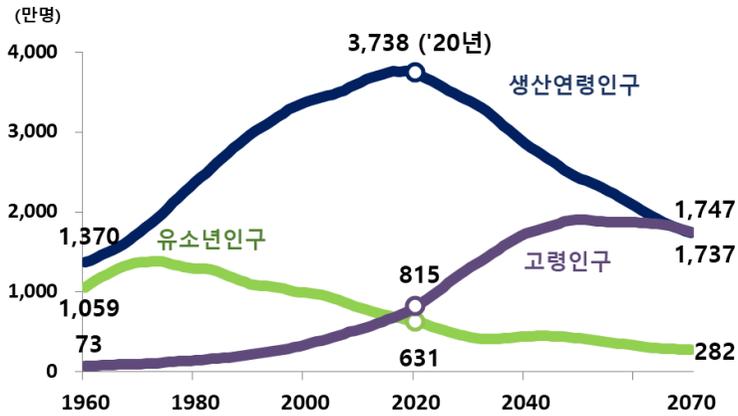
제2장에서는 통계청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인구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고, 가구통계를 통해 가족의 변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인구통계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급량을 확인하여 지역의 인프라 현황을 알아본다.

### 1 지역별 인구 변화

#### 1) 연령대별 인구구조와 규모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매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해왔고, 2020년대 초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림 2-1]을 통해 1960~2070년 연령별 인구구조 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1960년 1,370만 명에서 2020년 3,738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70년 1,747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1960년 73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유소년인구보다 많은 815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 약 1,8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유소년인구는 1970년대부터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 1960~2070년 연령별 인구구조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최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2022년 시도별 전체인구, 청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수와 비율을 보면, 전체인구 수는 경기(13,589,432명), 서울(9,428,372명), 부산(3,317,812명) 순으로 많다. 연령대별 인구 규모도 전체인구 규모 순위와 대체로 유사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비율로 보면, 청소년인구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19.2%), 제주(13.5%), 울산(12.7%)에서 높았다. 이와 달리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수도권인 서울(72.8%), 경기(72.7%), 인천(72.7%) 순으로 높았고, 전남(64.0%), 경북(65.6%), 강원(66.7%)에서 낮았다. 생산가능인구 비율과 반대로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5.2%), 경북(23.8%), 강원(22.8%) 순으로 높았고, 세종(10.5), 경기(14.7%), 울산(14.7%) 순으로 낮았다.

표 2-1 | 2022년 전국 및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 수와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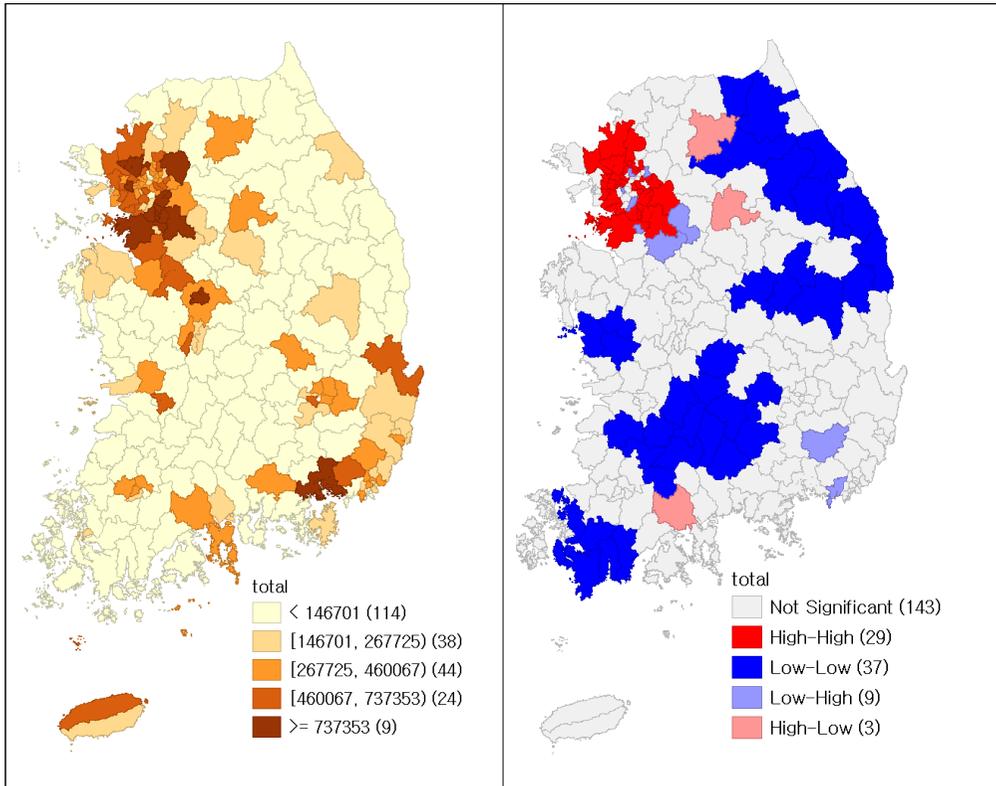
지역	전체인구(명)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국	51,439,038	5,890,594	11.5	36,281,154	70.5	9,267,290	18.0
서울	9,428,372	907,819	9.6	6,862,346	72.8	1,658,207	17.6
부산	3,317,812	340,589	10.3	2,264,811	68.2	712,412	21.5
대구	2,363,691	264,447	11.2	1,663,546	70.4	435,698	18.4
인천	2,967,314	346,269	11.7	2,157,195	72.7	463,850	15.6
광주	1,431,050	181,150	12.7	1,026,930	71.7	222,970	15.6
대전	1,446,072	170,784	11.8	1,042,625	72.1	232,663	16.1
울산	1,110,663	141,660	12.8	805,191	72.5	163,812	14.7
세종	383,591	73,508	19.2	269,864	70.3	40,219	10.5
경기	13,589,432	1,716,426	12.6	9,880,199	72.7	1,992,807	14.7
강원	1,536,498	160,725	10.5	1,025,899	66.7	349,874	22.8
충북	1,595,058	182,746	11.5	1,095,373	68.6	316,939	19.9
충남	2,123,037	255,585	12.0	1,430,557	67.4	436,895	20.6
전북	1,769,607	192,857	10.9	1,166,131	65.9	410,619	23.2
전남	1,817,697	195,765	10.8	1,164,451	64.0	457,481	25.2
경북	2,600,492	275,711	10.6	1,706,506	65.6	618,275	23.8
경남	3,280,493	393,068	12.0	2,248,624	68.5	638,801	19.5
제주	678,159	91,485	13.5	470,906	69.4	115,768	17.1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2]의 왼쪽 그림을 통해 2022년 인구 규모와 비율을 시군구별로 더 세분화해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시군구에서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 모두 인구 규모가 큰 빨간색이 군집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 모두 인구 규모가 작은 파란 색은 강원, 경북, 전북, 충남, 전남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적지만,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큰 경우는 경기, 충남, 경남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된다(전남 영광군, 인천 옹진군, 부산 영도구, 경남 거제시,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해당 지역 인구는 많지만, 인접 지역 인구는 적은 지역은 강원, 충북, 전남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전남 순천시, 강원 원주시, 강원 춘천시). [그림 2-2]에서 인구 규모가 특별히 크거나 작은 시군구는 <표 2-2>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림 2-2 | 2022년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가 크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함.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크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규모도 큼.

Low-Low: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작고, 인접 지역의 인구 규모도 작음.

Low-High: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작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큼.

High-Low: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크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작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상위 10개 시군구는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남 창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이다. 인구 규모가 가장 적은 10개 시군구 순위는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장수군, 강원 양구군, 경북 군위

군1), 강원 화천군, 전북 무주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이다.

표 2-2 | 2022년 인구 규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인구 규모 상위 1~10위 시군구		인구 규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경기 수원시	1위	경북 울릉군
2위	경기 용인시	2위	경북 영양군
3위	경남 창원시	3위	인천 옹진군
4위	경기 성남시	4위	전북 장수군
5위	경기 화성시	5위	강원 양구군
6위	충북 청주시	6위	경북 군위군
7위	경기 부천시	7위	강원 화천군
8위	경기 남양주시	8위	전북 무주군
9위	서울 송파구	9위	경북 청송군
10위	충남 천안시	10위	전북 진안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 (29개)	경기도 일대		
Low-Low지역 (37개)	강원, 경북, 충청, 전라 일대		
Low-High지역 (9개)	전남 영광군, 인천 옹진군, 부산 영도구, 경남 거제시,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High-Low지역 (3개)	전남 순천시, 강원 원주시, 강원 춘천시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크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규모도 큼.

Low-Low: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작고, 인접 지역의 인구 규모도 작음.

Low-High: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작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큼.

High-Low: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크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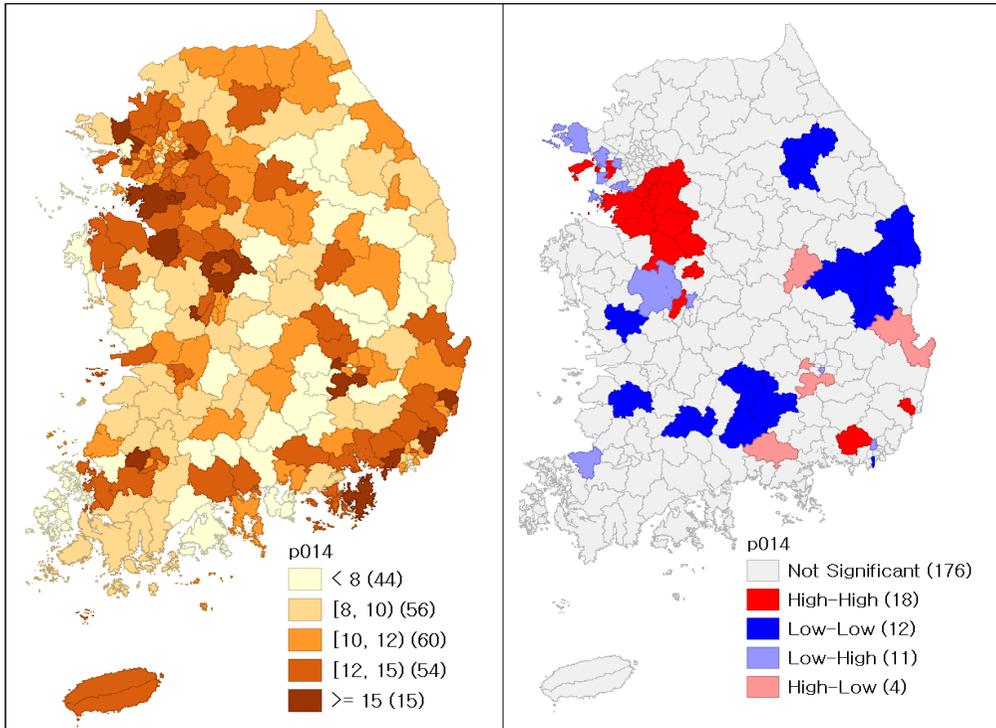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3]은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지역(오른쪽)을 보여준다. 유소년인구 비율은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높고, 대도시에서 먼 군 지역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소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시군구는 인천 미추홀구, 세종시, 부산 강서구, 경기 화성시, 인천 계양구, 울산 북구, 경기 김포시, 대구 달성군, 경남 거제시, 부산 기장군이다. 이와 반대로 유소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10개 시군구

1) 군위군은 2023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나 기존 통계자료에는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어 경상북도로 분류하여 제시함

는 경북 군위군, 부산 중구, 인천 서구, 경북 청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충북 괴산군, 경남 합천군, 경남 산청군, 전남 신안군이다.

그림 2-3 | 2022년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이 크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함.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높은 High-High 18개 지역은 경기 성남시, 경기 오산시, 경기 평택시,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인천 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충북 진천군, 대전 유성구, 경남 김해시, 울산 중구이다.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유소년

인구 비율도 낮은 Low-Low 12개 지역은 경남 합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산청군,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북 안동시,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강원 평창군, 부산 서구이다.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은 Low-High 11개 지역은 대구 남구, 인천 강화군, 인천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 북구, 인천 연수구, 인천 동구, 충남 공주시, 경기 안산시, 전남 함평군, 경기 부천시이다.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은 High-Low 4개 지역은 경북 예천군, 경남 진주시, 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시이다.

표 2-3 | 2022년 유소년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유소년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		유소년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인천 미추홀구	1위	경북 군위군
2위	세종시	2위	부산 중구
3위	부산 강서구	3위	인천 서구
4위	경기 화성시	4위	경북 청도군
5위	인천 계양구	5위	경북 의성군
6위	울산 북구	6위	경북 청송군
7위	경기 김포시	7위	충북 괴산군
8위	대구 달성군	8위	경남 합천군
9위	경남 거제시	9위	경남 산청군
10위	부산 기장군	10위	전남 신안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 (18개)	경기 성남시, 경기 오산시, 경기 평택시,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인천 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충북 진천군, 대전 유성구, 경남 김해시, 울산 중구		
Low-Low지역 (12개)	경남 합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산청군,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북 안동시,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강원 평창군, 부산 서구		
Low-High지역 (11개)	대구 남구, 인천 강화군, 인천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 북구, 인천 연수구, 인천 동구, 충남 공주시, 경기 안산시, 전남 함평군, 경기 부천시		
High-Low지역 (4개)	경북 예천군, 경남 진주시, 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시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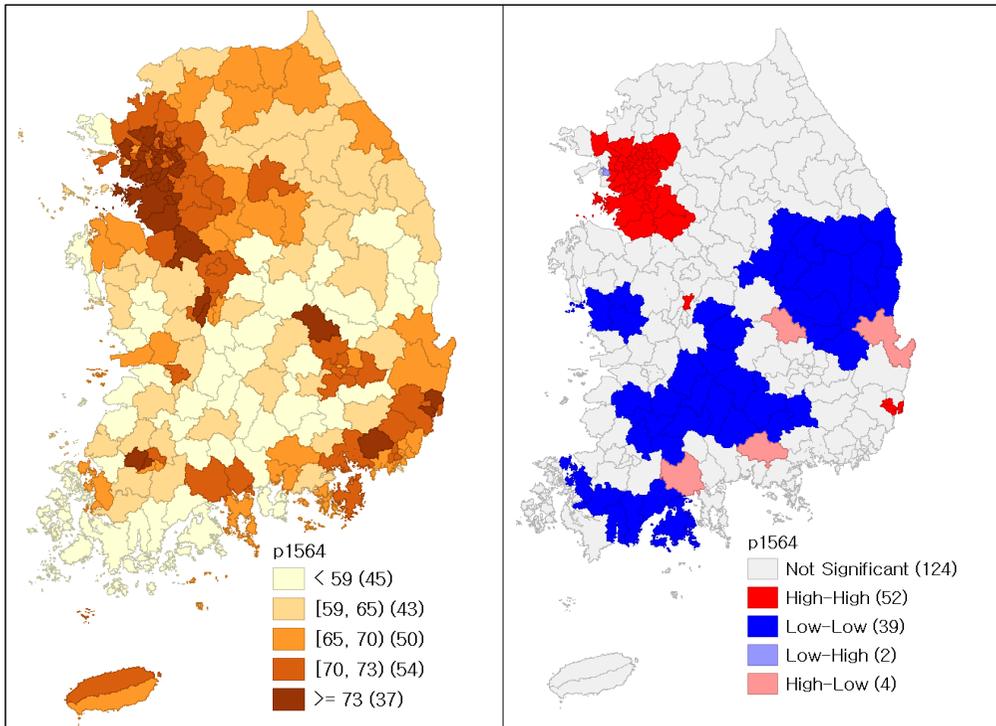
Low-High: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4]는 2022년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을 보여준다. 생산연령인구는 유소년인구에 비해서도 수도권, 광역시 집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 남부부터 충남 북부권까지 생산연령인구가 많은 지역이 군집화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중부권 이남에서도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 군집화되어 있다.

그림 2-4 | 2022년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크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함.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2-4〉는 2022년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와 특이지역을 보여준다.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경기 안산시,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서울 마포구, 대전 유성구, 경북 구미시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경북 군위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경북 영양군, 전북 임실군, 충남 서천군이다.

표 2-4 | 2022년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		생산연령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인천 서구	1위	경북 의성군
2위	인천 연수구	2위	전남 고흥군
3위	경기 안산시	3위	경남 합천군
4위	서울 관악구	4위	경북 군위군
5위	서울 광진구	5위	전남 보성군
6위	경기 수원시	6위	경북 영덕군
7위	경기 시흥시	7위	경남 남해군
8위	서울 마포구	8위	경북 영양군
9위	대전 유성구	9위	전북 임실군
10위	경북 구미시	10위	충남 서천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 (52개)	수도권 일대		
Low-Low지역 (39개)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중소도시(시) 및 농어촌(군)		
Low-High지역 (2개)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High-Low지역 (4개)	전남 순천시, 경북 구미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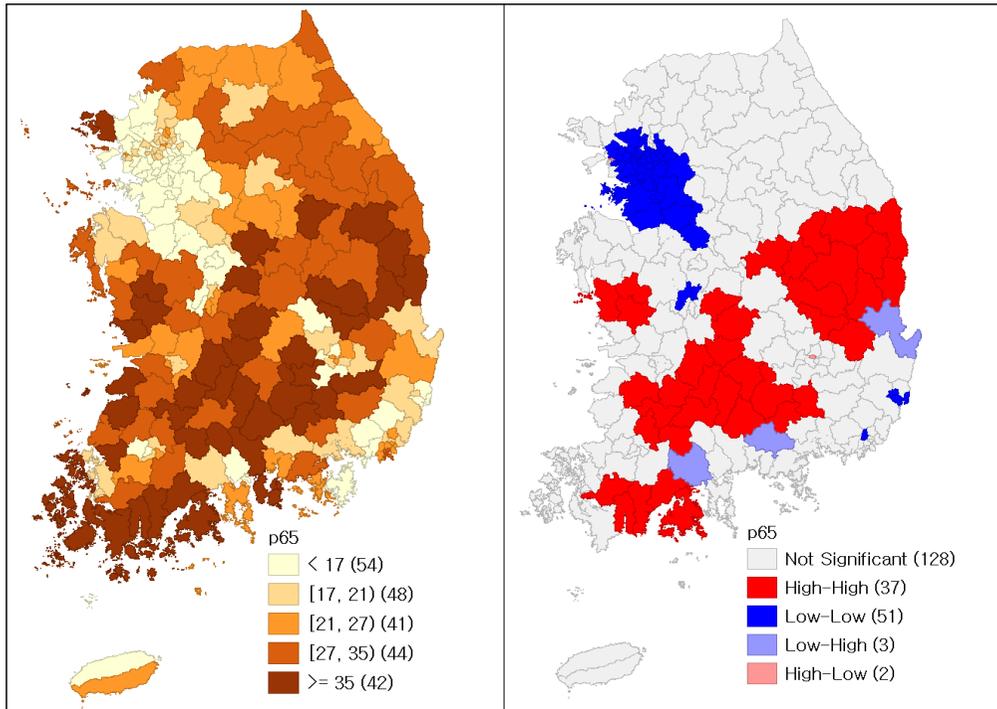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높은 High-High 52개 지역은 수도권 일대에 분포해 있다.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낮은 Low-Low

39개 지역은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중소도시(시) 및 농어촌(군)이었다.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은 Low-High 2개 지역은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이다.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은 High-Low 4개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북 구미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이다.

[그림 2-5]는 2022년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을 보여준다. 고령인구는 앞에서의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와 정반대의 분포를 보여준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북부권, 광역시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나머지 전 국토 대부분의 중소도시, 농어촌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 특히 중부 이남의 경상, 전라 일대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균집화되어 있다.

그림 2-5 | 2022년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이 크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함.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2-5〉는 2022년 고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와 특이지역을 보여준다. 고령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전남 보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송군, 경남 남해군, 경북 영양군이다. 고령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광주 광산구, 세종시, 경기 시흥시, 대전 유성구, 경기 오산시, 경북 구미시,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이다.

표 2-5 | 2022년 고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고령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		고령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경북 의성군	1위	울산 북구
2위	전남 고흥군	2위	경기 화성시
3위	경북 군위군	3위	광주 광산구
4위	경남 합천군	4위	세종시
5위	전남 보성군	5위	경기 시흥시
6위	경북 청도군	6위	대전 유성구
7위	경북 영덕군	7위	경기 오산시
8위	경북 청송군	8위	경북 구미시
9위	경남 남해군	9위	인천 연수구
10위	경북 영양군	10위	인천 서구
특이지역			
High-High지역 (37개)	수도권, 광역시와 안접하지 않은 중부 이남의 중소도시(시), 농어촌(군)		
Low-Low지역 (51개)	수도권, 세종시, 울산시		
Low-High지역 (3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High-Low지역 (2개)	부산 서구, 인천 동구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음.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높은 High-High 37개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중부 이남의 중소 도시(시), 농어촌(군)이었다.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낮은 Low-Low 51개 지역은 수도권, 세종시, 울산시였다.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은 Low-High 3개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였다.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은 High-Low 2개 지역은 부산 서구, 인천 동구였다.

〈표 2-6〉은 2022년 시도별 인구이동 통계를 보여준다.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순이동의 경우 경기 43,882명, 인천 28,101명, 충남 14,314명, 세종 10,128명, 강원 7,494명, 충북 5,201명, 제주 3,148명으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서 이동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서울 -35,340명, 경남 -18,547명, 부산 -13,562명, 대구 -11,519명, 울산 -9,536명, 경북 -

표 2-6 | 2022년 시도별 인구이동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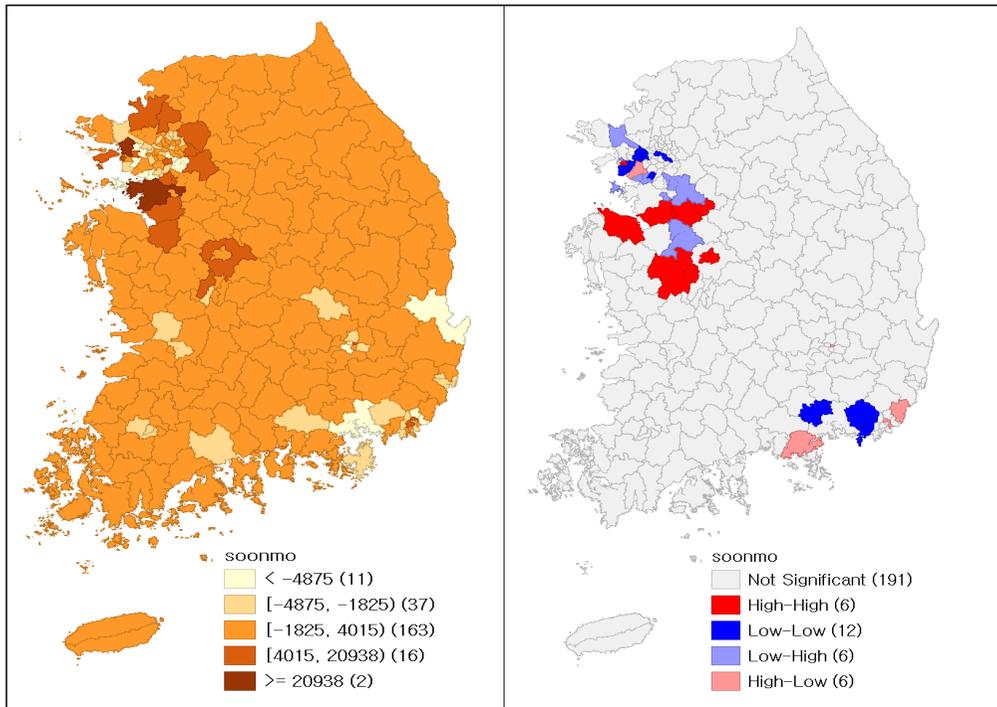
지역	인구이동		
	총전입(명)	총전출(명)	순이동(명)
전국	6,152,155	6,152,155	0
서울	1,201,527	1,236,867	-35,340
부산	383,848	397,410	-13,562
대구	265,354	276,873	-11,519
인천	395,140	367,039	28,101
광주	182,924	190,566	-7,642
대전	198,705	201,701	-2,996
울산	107,747	117,283	-9,536
세종	65,529	55,401	10,128
경기	1,645,990	1,602,108	43,882
강원	194,864	187,370	7,494
충북	185,419	180,218	5,201
충남	260,488	246,174	14,314
전북	199,432	204,547	-5,115
전남	191,956	192,301	-345
경북	263,156	270,822	-7,666
경남	323,211	341,758	-18,547
제주	86,865	83,717	3,148

자료: 통계청(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7,666명, 광주 -7,642명, 전북 -5,115명, 대전 -2,996명에서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적어서 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발생했다. 순이동이 0보다 큰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수도권과 인접 도 지역이고, 순이동이 0보다 작은 지역은 대도시, 수도권과 거리가 먼 도 지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6]은 2022년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지역을 보여준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은 순이동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이동이 컸다. 이와 반대로 서울, 경남에서는 전입이 전출보다 작은 순이동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 2-6 | 2022년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순이동=전입인구-전출인구  
 2)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3)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인구 순이동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순이동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인구 순이동이 낮고, 인접 지역의 인구 순이동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인구 순이동은 낮고, 인접 지역 인구 순이동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인구 순이동은 높고, 인접 지역 인구 순이동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2-7〉은 2022년 인구 순이동 상위·하위 시군구 10개와 특이지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특히 많은 순이동 상위 1~10위 시군구는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세종시, 인천 중구, 경기 광주시, 경기 수원시, 부산 동래구이다.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특히 많은 10개 시군구는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인천 남동구, 경남 창원시, 부산 해운대구, 경기 성남시, 서울 서초구,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경북 포항시이다.

표 2-7 | 2022년 인구 순이동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인구 순이동 상위 1~10위 시군구		인구 순이동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인천 서구	1위	경기 부천시
2위	경기 화성시	2위	경기 안산시
3위	경기 평택시	3위	인천 남동구
4위	경기 파주시	4위	경남 창원시
5위	충남 아산시	5위	부산 해운대구
6위	세종시	6위	경기 성남시
7위	인천 중구	7위	서울 서초구
8위	경기 광주시	8위	대구 달서구
9위	경기 수원시	9위	인천 계양구
10위	부산 동래구	10위	경북 포항시
특이지역			
High-High지역 (6개)	충남 당진시, 충남 공주시, 인천 미추홀구, 경기 평택시,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Low-Low지역 (12개)	서울 강남구, 서울 구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서구,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경기 부천시, 경기 군포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함안군		
Low-High지역 (6개)	인천 동구, 경기 안산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경기 김포시, 경기 오산시		
High-Low지역 (6개)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부산 기장군, 대구 중구, 경기 시흥시, 경남 고성군		

주: 1) 순이동=전입인구-전출인구

2) High-High: 해당 지역의 인구 순이동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순이동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인구 순이동이 낮고, 인접 지역의 인구 순이동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인구 순이동은 낮고, 인접 지역 인구 순이동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인구 순이동은 높고, 인접 지역 인구 순이동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해당 지역의 인구 순이동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순이동도 높은 High-High 6개 지역은 충남 당진시, 충남 공주시, 인천 미추홀구, 경기 평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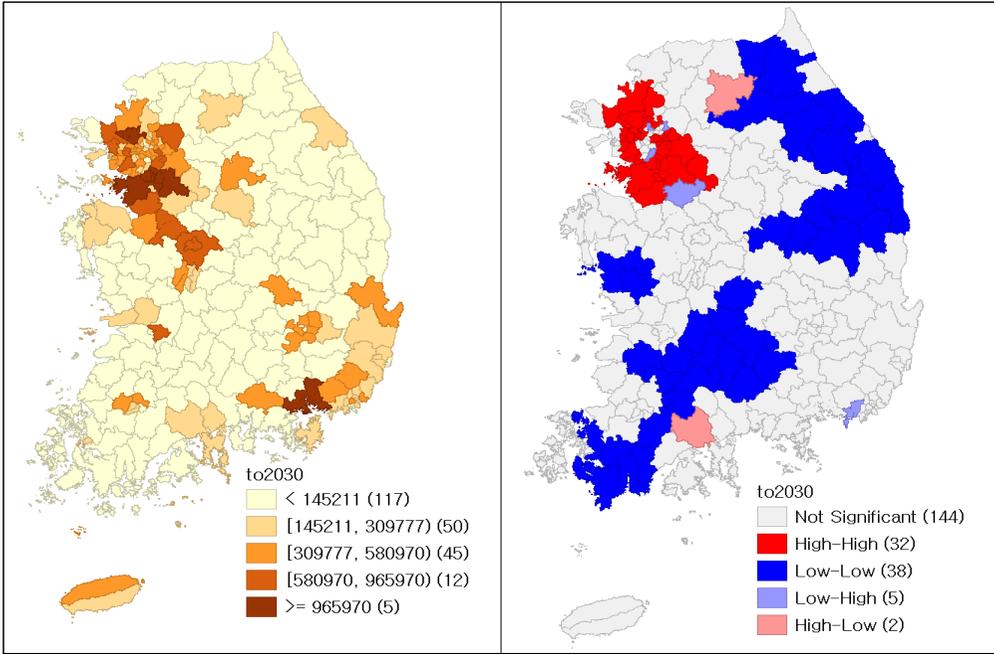
시,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이다. 해당 지역의 인구 순이동이 낮고, 인접 지역의 인구 순이동도 낮은 Low-Low 12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울 구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서구,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경기 부천시, 경기 군포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함안군이다. 해당 지역 인구 순이동은 낮고, 인접 지역 인구 순이동은 높은 Low-High 6개 지역은 인천 동구, 경기 안산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경기 김포시, 경기 오산시이다. 해당 지역 인구 순이동은 높고, 인접 지역 인구 순이동은 낮은 High-Low 6개 지역은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부산 기장군, 대구 중구, 경기 시흥시, 경남 고성군이다.

## 2)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계

[그림 2-7]은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2030년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지역(오른쪽)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2015년~2022년까지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 2022년 상황인 [그림 2-2]보다 지역 격차가 더 심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권에 인구 밀집은 심화되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든다. 심지어 부산과 울산 그 주변의 경남에서도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

〈표 2-8〉은 2030년(추정) 인구 규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와 특이지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했을 때, 인구 규모 상위 1~10위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이다. 인구 규모 하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강원 화천군, 인천 옹진군, 전북 무주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전북 임실군이다.

그림 2-7 | 2030년(추정)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임.  
 2)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가 크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전체인구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함.  
 3)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규모도 많음.  
 Low-Low: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적고, 인접 지역의 인구 규모도 적음.  
 Low-High: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적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많음.  
 High-Low: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많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적음.

표 2-8 | 2030년(추정) 인구 규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인구 규모 상위 1~10위 시군구		인구 규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경기 화성시	1위	경북 울릉군
2위	경기 수원시	2위	경북 영양군
3위	경기 용인시	3위	강원 양구군
4위	경기 고양시	4위	전북 장수군
5위	경남 창원시	5위	강원 화천군
6위	충북 청주시	6위	인천 옹진군
7위	경기 성남시	7위	전북 무주군
8위	경기 남양주시	8위	전남 구례군
9위	경기 부천시	9위	경북 청송군
10위	충남 천안시	10위	전북 임실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 (32개)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고 산간이나 해안인 강원,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일대
Low-Low지역 (38개)	경기도 일대
Low-High지역 (5개)	부산 강서구, 서울 종로구, 경기 구리시, 경기 의왕시, 경기 안성시
High-Low지역 (2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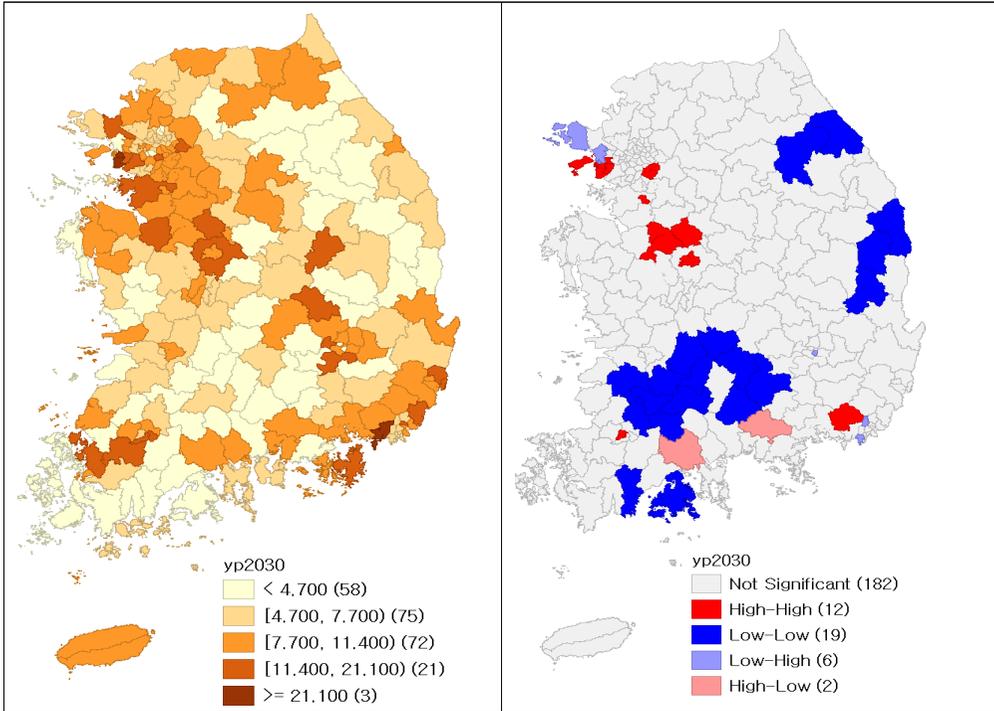
- 주: 1)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임.  
 2) High-High: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크고, 인접 지역의 인구 규모도 큼.  
 Low-Low: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작고, 인접 지역의 인구 규모도 작음.  
 Low-High: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작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큼.  
 High-Low: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크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작음.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크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규모도 많은 High-High 32개 지역은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고 산간이나 해안인 강원,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일대이다.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가 적고, 인접 지역의 인구 규모도 적은 Low-Low 38개 지역은 경기도 일대이다.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적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많은 Low-High 5개 지역은 부산 강서구, 서울 종로구, 경기 구리시, 경기 의왕시, 경기 안성시이다. 해당 지역 인구 규모는 크고, 인접 지역 인구 규모는 적은 High-Low 2개 지역은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이다.

[그림 2-8]은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질 때를 가정한 2030년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을 보여준다.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와 주변에 많지만, 전체인구처럼 군집화가 심하지는 않다. 다만, 강원, 경북, 전라도 일대에서는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 부분적으로 군집화되어 있다.

<표 2-9>는 2030년 유소년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와 특이지역을 보여준다. 유소년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부산 강서구, 세종시, 경북 예천군, 대구 달성군, 경기 김포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울산 북구이다. 이와 반대로, 유소년인구 비율 하위

그림 2-8 | 2030년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임.  
 2)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3)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음.

1~10위 시군구는 인천 서구, 부산 중구, 전남 보성군, 전북 진안군, 경남 산청군, 경북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남 하동군, 전남 곡성군, 서울 관악구이다.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높은 High-High 12개 지역은 경기 성남시, 경기 오산시,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광주 서구, 충북 진천군, 경남 김해시이다.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낮은 Low-Low 19개 지역은 강원 평창

군, 강원 강릉시,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무주군, 전북 진안군, 전북 진안군,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전남 장흥군, 전남 고흥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남 합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산청군이다.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은 Low-High 6개 지역은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남구, 인천 서구, 인천 강화군, 인천 동구이다.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은 High-Low 2개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이다.

표 2-9 | 2030년 유소년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유소년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		유소년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인천 미추홀구	1위	인천 서구
2위	인천 연수구	2위	부산 중구
3위	부산 강서구	3위	전남 보성군
4위	세종시	4위	전북 진안군
5위	경북 예천군	5위	경남 산청군
6위	대구 달성군	6위	경북 군위군
7위	경기 김포시	7위	인천 옹진군
8위	경기 하남시	8위	경남 하동군
9위	경기 과천시	9위	전남 곡성군
10위	울산 북구	10위	서울 관악구
특이지역			
High-High지역 (12개)	경기 성남시, 경기 오산시,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광주 서구, 충북 진천군, 경남 김해시		
Low-Low지역 (19개)	강원 평창군, 강원 강릉시,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무주군, 전북 진안군, 전북 진안군,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전남 장흥군, 전남 고흥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남 합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산청군		
Low-High지역 (6개)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남구, 인천 서구, 인천 강화군, 인천 동구		
High-Low지역 (2개)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주: 1)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임.

2) High-High: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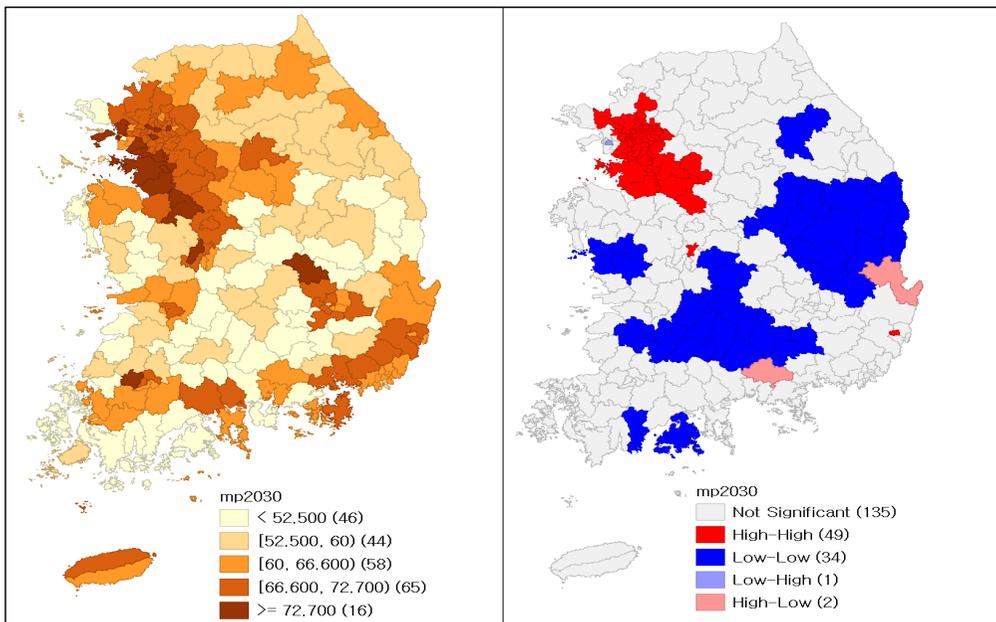
Low-Low: 해당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유소년인구 비율은 낮음.

[그림 2-9]는 2030년(추정)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지역(오른쪽)을 보여준다. 생산연령인구는 수도권, 광역시에 밀집해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도 경기 남부부터 충남 북부권까지 집중화가 심화된다. 이와 반대로, 강원, 경상, 전라 전역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보다 훨씬 줄어드는 경향이 강화되어 더 넓게 분포된다.

그림 2-9 | 2030년(추정)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추계 결과임.  
 2)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3)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음.

<표 2-10>은 2030년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했을 때,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

위 1~10위 시군구는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서울 관악구, 경기 안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화성시, 서울 마포구, 경기 수원시, 대전 유성구, 경기 평택시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인천 미추홀구, 경북 청도군, 경남 합천군, 경북 영덕군, 충남 서천군, 경북 청송군, 전남 보성군이다.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높은 High-High 49개 지역은 수도권 일대이다.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낮은 Low-Low 34개 지역은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중소도시(시) 및 농어촌(군)이다.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은 Low-High 1개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이다.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은 High-Low 2개 지역은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이다.

표 2-10 | 2030년(추정)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		생산연령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인천 서구	1위	경북 의성군
2위	광주 광산구	2위	전남 고흥군
3위	서울 관악구	3위	경북 군위군
4위	경기 안산시	4위	인천 미추홀구
5위	경기 오산시	5위	경북 청도군
6위	경기 화성시	6위	경남 합천군
7위	서울 마포구	7위	경북 영덕군
8위	경기 수원시	8위	충남 서천군
9위	대전 유성구	9위	경북 청송군
10위	경기 평택시	10위	전남 보성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49개)	수도권 일대		
Low-Low지역(34개)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중소도시(시) 및 농어촌(군)		
Low-High지역(1개)	인천 미추홀구		
High-Low지역(2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주: 1)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임.

2) High-High: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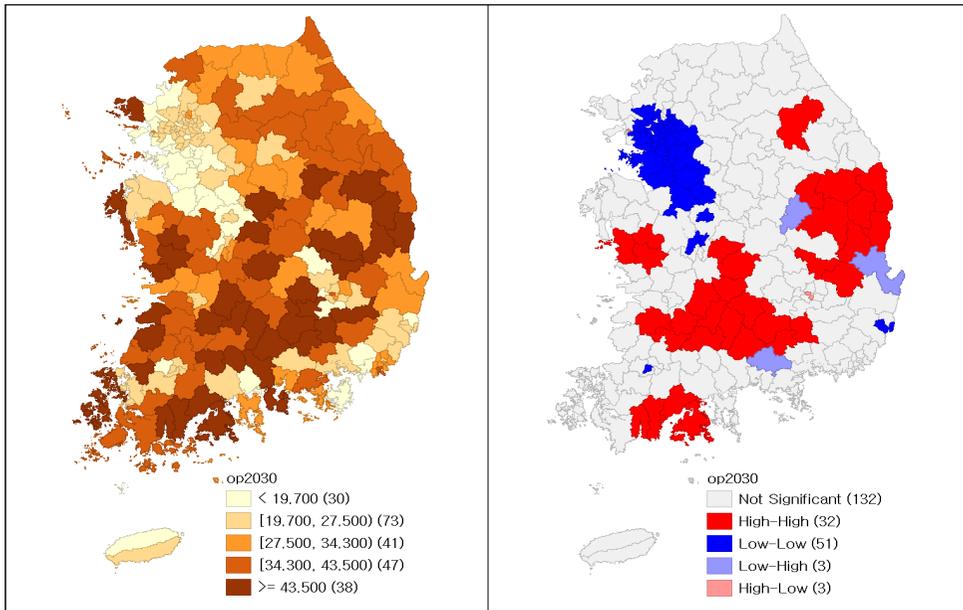
Low-Low: 해당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낮음.

[그림 2-10]은 2030년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 지역(오른쪽)을 보여준다.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고령인구 비율이 비수도권 전역에 걸쳐서 높아진다. 이뿐만 아니라 중부권 이남에서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을 경우 고령인구가 매우 낮은 지역이 2022년보다 더 군집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2-10 | 2030년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임.  
 2)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이 크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함.  
 3)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음.

보다 구체적으로, <표 2-11>은 2030년 고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을 보여준다.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질 경우 고령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경북 청도군, 전남 고흥군, 전남 보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충남 서천군이다. 이와 반대로 고령인

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세종시, 경기 화성시, 울산 북구, 광주 광산구, 경기 시흥시, 경기 평택시, 부산 강서구, 대전 유성구, 경기 오산시, 인천 연수구이다.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높은 High-High 32개 지역은 수도권에서 멀고, 광역시와도 인접하지 않은 군이다.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낮은 Low-Low 51개 지역은 수도권, 충남, 세종, 대전, 광주, 울산 일부 구이다.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은 Low-High 3개 지역은 경남 진주시, 경북 예천군, 경북 포항시이다.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은 High-Low 3개 지역은 인천 동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이다.

표 2-11 | 2030년 고령인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고령인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		고령인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경북 의성군	1위	세종시
2위	경북 군위군	2위	경기 화성시
3위	경남 합천군	3위	울산 북구
4위	경북 청도군	4위	광주 광산구
5위	전남 고흥군	5위	경기 시흥시
6위	전남 보성군	6위	경기 평택시
7위	경북 청송군	7위	부산 강서구
8위	경북 봉화군	8위	대전 유성구
9위	경북 영덕군	9위	경기 오산시
10위	충남 서천군	10위	인천 연수구
특이지역			
High-High지역 (32개)	수도권에서 멀고, 광역시와도 인접하지 않은 군 지역		
Low-Low지역 (51개)	수도권, 충남, 세종, 대전, 광주, 울산 일부 구		
Low-High지역 (3개)	경남 진주시, 경북 예천군, 경북 포항시		
High-Low지역 (3개)	인천 동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주: 1) 2015~2022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변화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임.

2) High-High: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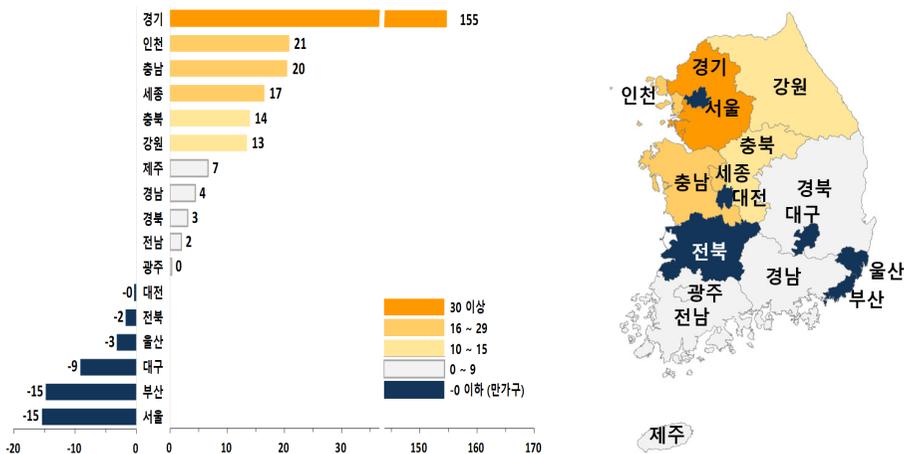
High-Low: 해당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낮음.

## 2 지역별 가구·가족의 변화

### 1) 가구유형과 규모

제1절의 인구변화에 이어서 제2절에서는 가구통계를 활용하여 가족의 변화를 알아본다. 우선, [그림 2-11]에서 2020년 대비 2050년 시도별 가구 증감 추계를 보면, 경기(155만 가구), 인천(21만 가구), 충남(20만 가구), 세종(17만 가구), 충북(14만 가구), 강원(13만 가구), 제주(7만 가구), 경남(4만 가구), 전남(2만 가구)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서울(15만 가구), 부산(15만 가구), 대구(9만 가구), 울산(3만 가구), 전북(2만 가구)에서는 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1 | 시도별 가구 증감, 2020년 대비 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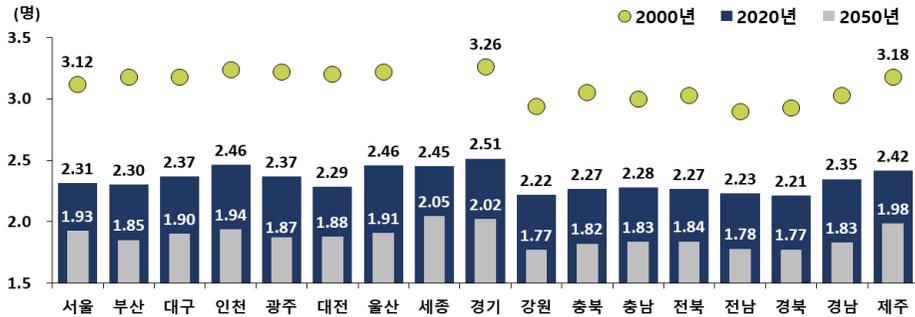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0. 2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2000년, 2020년, 2050년 시도별 평균 가구원 수를 비교해서 보면([그림 2-12] 참조), 2000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 2.3명으로 감소했고, 2050년에는 1.9명 정도까지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경기, 인천,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평균 가구원 수가 2.4명 이상으로 높았지만, 경북, 강원, 전남, 전

북, 충북, 충남, 대전에서는 2.3명 미만으로 낮았다. 2050년에도 시도별 가구원 수 격차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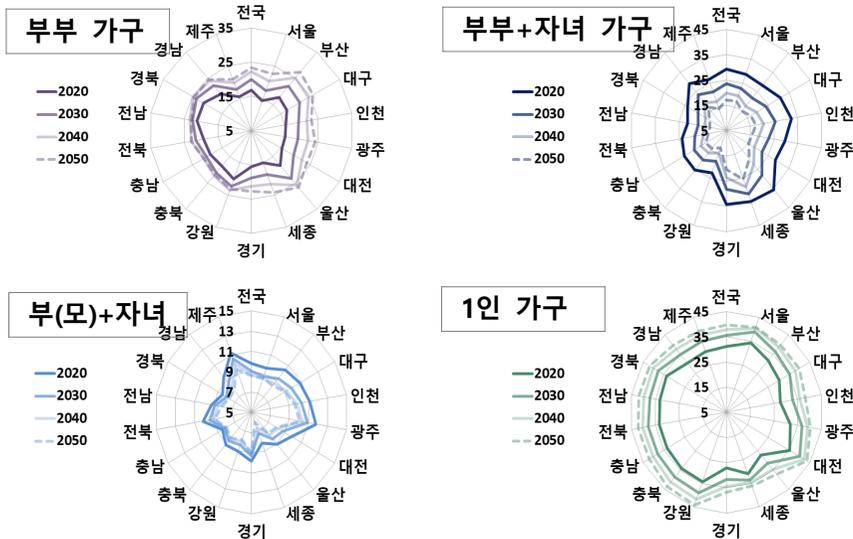
그림 2-12 | 시도별 평균 가구원 수, 2000, 2020, 2050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0. 2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2020~2050년 가구 구성비 추이를 보면([그림 2-13] 참조), 부부가구, 1인 가구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부부+자녀 가구, 부(모)+자녀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시도별로 구분해서 보면, 전국과 비교했을 때,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는 부부가구와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북,

그림 2-13 | 시도별 가구유형별 가구 구성비 추이, 2020-205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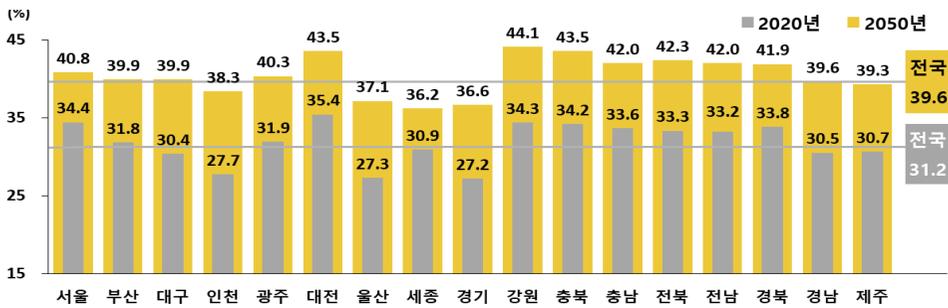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0. 2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전남, 강원과 같은 도 지역에서는 부부+자녀,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낮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를 더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림 2-14]와 같이 1인 가구는 전국 평균이 2020년 31.2%에서 2050년 39.6%로 높아진다. 그런데 2050년에 1인 가구의 비율이 특히 더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아닌 대전, 충북, 충남의 충청권과 고령자가 많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 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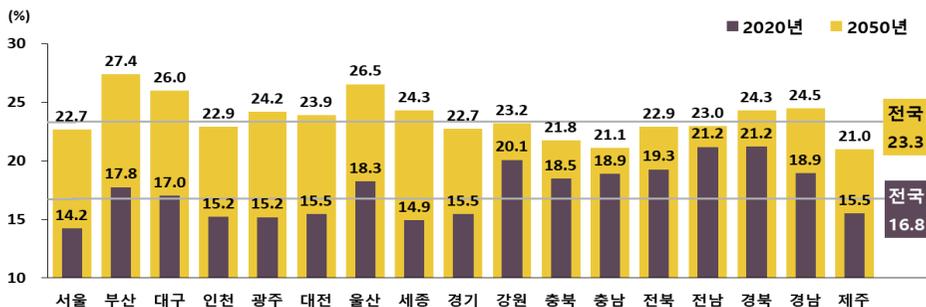
그림 2-14 | 시도별 1인 가구 구성비, 2020, 2050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0. 2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부부가구 구성비에 관한 [그림 2-15]을 보면, 전국 평균이 2020년 16.8%에서 2050년 23.3%로 상승한다. 1인 가구와 달리 부부가구 구성비 변화에서의 특징은 앞으로 30년 동안 시도별 편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와 같이 대도시이거나 비교적 고령자

그림 2-15 | 시도별 부부가구 구성비, 2020, 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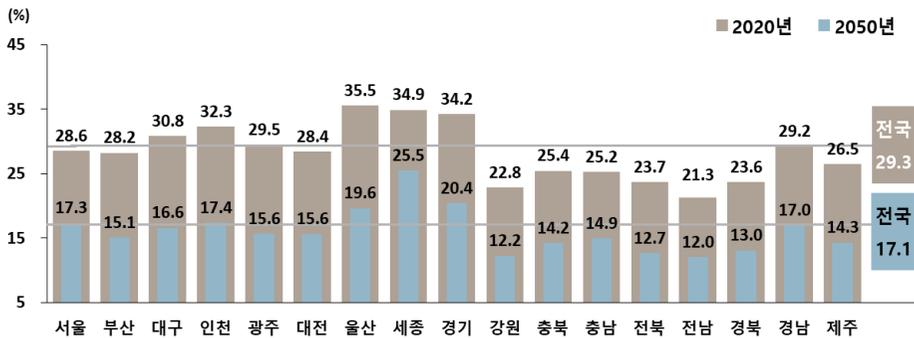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0. 2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부부가구 구성비 증가 폭이 클 것이다. 하지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소폭의 부부가구 구성비 증가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자녀가구 구성비를 [그림 2-16]에서 보면, 전국 평균이 2020년에는 29.3%에서 2050년 17.1%로 감소한다. 2020년에는 울산, 세종, 경기, 인천, 대구가 29.3%인 평균보다 높은 지역인데, 2050년이 되면 세종, 경기만 20%를 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부부+자녀가구 구성비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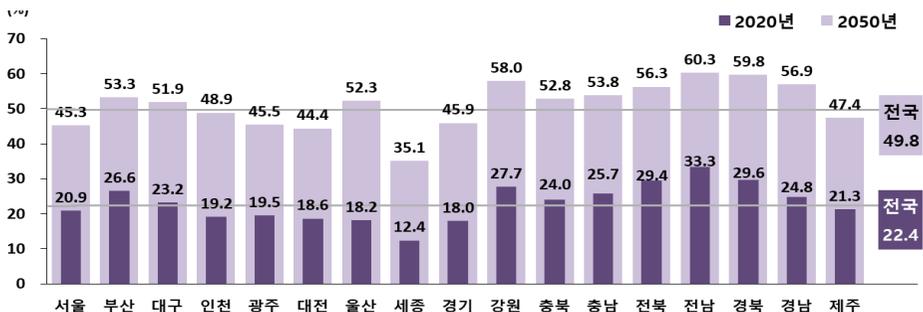
그림 2-16 | 시도별 부부+자녀가구 구성비, 2020, 2050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0. 2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그림 2-17]에서 고령자 가구 구성비를 보면, 전국 평균이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다시 말해, 2050년이 되면 전체

그림 2-17 | 시도별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구성비, 2020, 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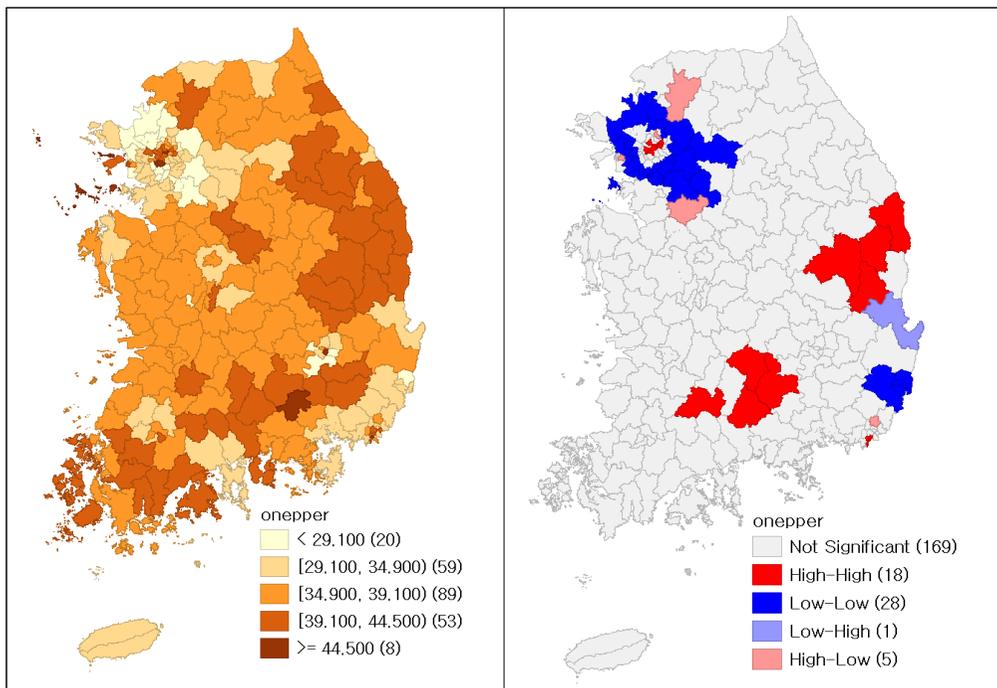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0. 2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가구의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되는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나 광주, 대전, 세종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 국토의 대부분에서 고령자 가구 비율이 50% 중후반에 이른다.

[그림 2-18]은 2022년 시군구별 1인 가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 지역(오른쪽)을 보여준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 충청, 경상, 전라 군 지역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다. 반면,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광역시의 일부 구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2-18 | 2022년 시군구별 1인 가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1인가구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1인가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1인가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1인가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1인가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1인가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1인가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1인가구 비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총조사.

〈표 2-12〉에서는 2022년 1인 가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서울 관악구, 부산 중구, 인천 옹진군, 대구 남구, 서울 금천구,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서울 광진구,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이다. 1인 가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 경기 의왕시, 경기 남양주시, 울산 북구, 경기 광명시, 경기 용인시, 충남 계룡시, 인천 연수구, 경기 광주시, 경기 안양시이다.

표 2-12 | 2022년 1인 가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1인 가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		1인 가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서울 관악구	1위	경기 과천시
2위	부산 중구	2위	경기 의왕시
3위	인천 옹진군	3위	경기 남양주시
4위	대구 남구	4위	울산 북구
5위	서울 금천구	5위	경기 광명시
6위	경북 울릉군	6위	경기 용인시
7위	경남 의령군	7위	충남 계룡시
8위	서울 광진구	8위	인천 연수구
9위	서울 종로구	9위	경기 광주시
10위	전남 곡성군	10위	경기 안양시
특이지역			
High-High지역 (18개)	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전북 남원시, 경북 안동시,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합천군, 경남 거창군		
Low-Low지역 (28개)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대구 서구, 인천 계양구,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평군, 경기 김포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군포시, 경기 시흥시		
Low-High지역 (1개)	경북 포항시		
High-Low지역 (5개)	서울 강북구, 부산 금정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1인 가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1인 가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총조사.

해당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1인 가구 비율도 높은 High-High 18개 지역은 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전북 남원시, 경북 안동시,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합천군, 경남 거창군이다. 해당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1인 가구 비율도 낮은 Low-Low 28개 지역은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대구 서구, 인천 계양구,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평군, 경기 김포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군포시, 경기 시흥시이다. 해당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높은 Low-High 1개 지역은 경북 포항시이다. 해당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낮은 High-Low 5개 지역은 서울 강북구, 부산 금정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이다.

## 2) 혼인, 출산,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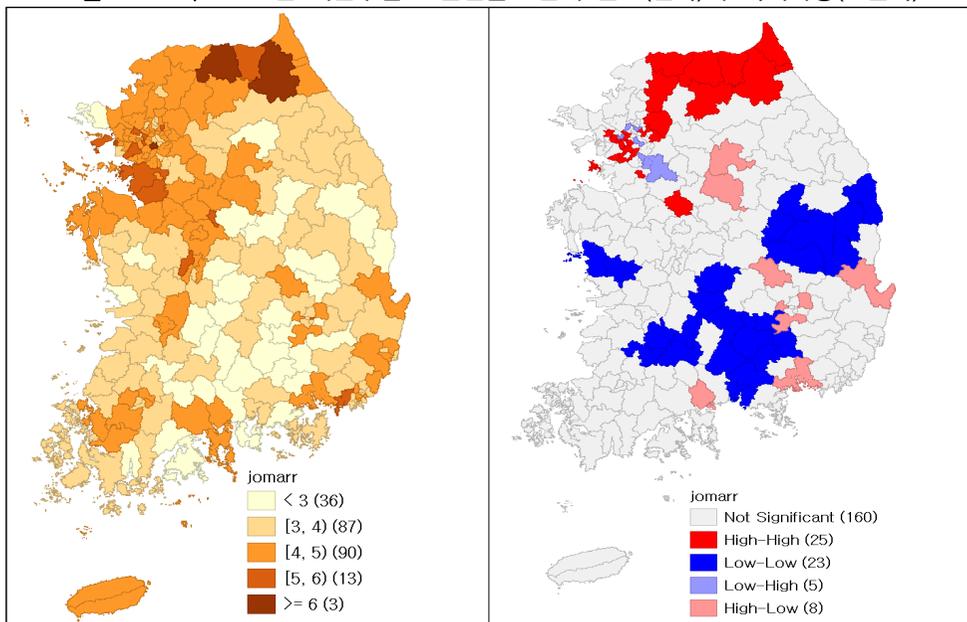
〈표 2-13〉은 2022년(2021년) 시도별 혼인통계를 보여준다. 2022년 전체 혼인건수는 191,690건이고,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은 경기 54,178건, 서울 35,752건, 인천 10,849건, 부산 10,618건 순으로 나타났다. 모집단 인구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조혼인율로 비교하면, 세종, 경기, 제주, 충북, 대전에서 조혼인율이 높았고, 전북, 경북, 경남, 부산, 대구에서는 조혼인율이 낮았다. 즉, 충청권보다 남부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혼인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비율까지도 적은 상황이다. 다문화 혼인 비중의 경우에도 서울(8.2%), 인천(8.0%), 충남(8.0%), 경기(7.8%)에서 높았고, 세종(4.2%), 대전(5.1%), 울산(5.2%), 부산(5.5%), 광주(5.5%)의 신도시나 광역시 지역에서 낮았다.

표 2-13 | 2022년(2021년) 시·도별 혼인 통계

지역	2022년		2021년	
	전체 혼인건수 (건)	전체 조혼인율 (천명당)	다문화 혼인 건수(건)	다문화 혼인 비중(%)
전국	191,690	3.7	13,926	7.2
서울	35,752	3.8	3,112	8.2
부산	10,618	3.2	614	5.5
대구	7,497	3.2	474	6.4
인천	10,849	3.7	887	8.0
광주	4,902	3.4	274	5.5
대전	5,662	3.9	278	5.1
울산	4,013	3.6	215	5.2
세종	1,664	4.4	69	4.2
경기	54,178	4.0	4,341	7.8
강원	5,572	3.6	317	5.6
충북	6,185	3.9	440	7.4
충남	8,017	3.8	649	8.0
전북	5,394	3.0	378	7.0
전남	6,181	3.4	436	7.0
경북	8,180	3.1	493	6.0
경남	10,504	3.2	661	6.2
제주	2,718	4.0	208	7.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19 | 2022년 시군구별 조혼인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조혼인율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조혼인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조혼인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조혼인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조혼인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조혼인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조혼인율은 낮고, 인접 지역 조혼인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조혼인율은 높고, 인접 지역 조혼인율은 낮음.
-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표 2-14〉에서는 2022년 조혼인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조혼인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서울 영등포구, 경기 평택시, 서울 금천구, 대구 중구, 강원 양구군, 서울 강서구이다. 조혼인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전남 곡성군, 전북 순창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함안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전북 진안군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강원, 경북, 전북, 전남의 군 지역은 인구가 작아 혼인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도 조혼인율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 화천군의 2022년 총 혼인건수는 151건이고, 조혼인율은 6.4건이다.

해당 지역의 조혼인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조혼인율도 높은 High-High 25개 지역은 강원 철원군, 강원 속초시, 충북 진천군, 강원 춘천시,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인제군,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경기 오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구리시, 경기 광명시, 경기 안양시, 인천 계양구,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경기 하남시, 서울 마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광진구이다. 해당 지역의 조혼인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조혼인율도 낮은 Low-Low 23개 지역은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무주군, 전북 남원시, 충남 부여군, 충남 보령시, 충북 영동군, 경북 영주시, 경북 울진군, 경북 예천군, 경북 고령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북 의성군, 경북 안동군, 경남 합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사천시, 경남 산천군, 경남 창녕군, 경남 의령군, 경남 진주시이다. 해당 지역 조혼인율은 낮고, 인접 지역 조혼인율은 높은 Low-High 5개 지역은 경기 용인시,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이다. 해당 지

역 조혼인율은 높고, 인접 지역 조혼인율은 낮은 High-Low 8개 지역은 경북 구미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대구 동구, 대구 달성군,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원주시이다.

표 2-14 | 2022년 조혼인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조혼인율 상위 1~10위 시군구		조혼인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경기 과천시	1위	경북 군위군
2위	강원 화천군	2위	경북 의성군
3위	강원 인제군	3위	경북 고령군
4위	충북 증평군	4위	전남 곡성군
5위	서울 영등포구	5위	전북 순창군
6위	경기 평택시	6위	경남 남해군
7위	서울 금천구	7위	경남 함안군
8위	대구 중구	8위	경북 봉화군
9위	강원 양구군	9위	전남 구례군
10위	서울 강서구	10위	전북 진안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 (25개)	강원 철원군, 강원 속초시, 충북 진천군, 강원 춘천시,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인제군,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경기 오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구리시, 경기 광명시, 경기 안양시, 인천 계양구,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경기 하남시, 서울 마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광진구		
Low-Low지역 (23개)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무주군, 전북 남원시, 충남 부여군, 충남 보령시, 충북 영동군, 경북 영주시, 경북 울진군, 경북 예천군, 경북 고령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북 의성군, 경북 안동군, 경남 합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사천시, 경남 산천군, 경남 창녕군, 경남 의령군, 경남 진주시		
Low-High지역 (5개)	경기 용인시,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High-Low지역 (8개)	경북 구미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대구 동구, 대구 달성군,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원주시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조혼인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조혼인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조혼인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조혼인율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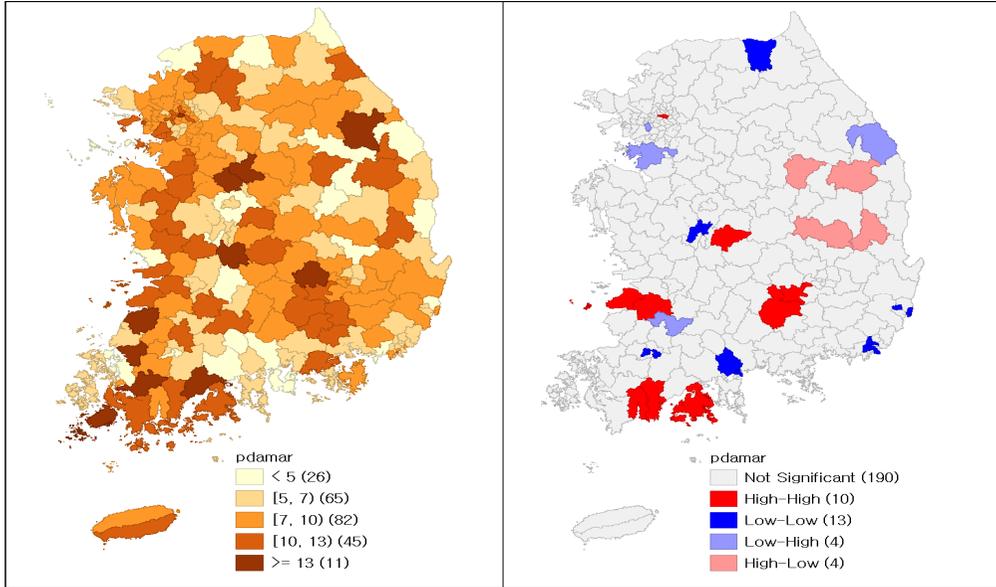
Low-High: 해당 지역 조혼인율은 낮고, 인접 지역 조혼인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조혼인율은 높고, 인접 지역 조혼인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2021년 시군구별 다문화 혼인 비중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은 [그림 2-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0]을 보면, 다문화 혼인 비중이 크거나 작은 지역은 특별한 패턴을 찾기 어렵고 전국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림 2-20 | 2021년 시군구별 다문화 혼인 비중(%)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다문화 혼인 비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함.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크고, 인접한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도 큼.  
 Low-Low: 해당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작고, 인접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도 작음.  
 Low-High: 해당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작고, 인접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큼.  
 High-Low: 해당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크고, 인접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작음.

자료: 통계청(2021년). 인구동향조사.

<표 2-15>는 2021년 다문화 혼인 비중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다문화 혼인 비중 상위 1~10위 시군구는 충남 금산군, 전남 보성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강원 정선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경북 성주군, 서울 용산구다. 이와 반대로 다문화 혼인 비중 하위 1~10위 시군구는 인천 미추홀구, 경남 남해군,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경북 예천군, 부산 연제구,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광주 남구, 울산 북구다.

해당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크고, 인접한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도 큰 High-High 10개 지역은 서울 성동구, 서울 중구, 충북 옥천군, 전남 강진군, 전남 장흥군, 전남 고흥군, 전북 부안군, 전북 정읍시,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이다. 해당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작고, 인접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도 낮은 Low-Low 13개 지역은 부산 북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광주 서구,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강원 양구군, 전남 광양시이다. 해당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작고, 인접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큰 Low-High 4개 지역은 경기 화성시, 경기 광명시, 강원 삼척시, 전북 순창군이다. 해당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크고, 인접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작은 High-Low 4개 지역은 경북 봉화군, 경북 청송군, 경북 의성군, 충북 단양군이다.

표 2-15 | 2021년 다문화 혼인 비중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 상위 1~10위 시군구		다문화 혼인 비중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충남 금산군	1위	인천 미추홀구
2위	전남 보성군	2위	경남 남해군
3위	충북 음성군	3위	경북 울릉군
4위	전북 고창군	4위	인천 옹진군
5위	전남 영암군	5위	경북 예천군
6위	강원 정선군	6위	부산 연제구
7위	전남 진도군	7위	경북 영주시
8위	전남 함평군	8위	경북 군위군
9위	경북 성주군	9위	광주 남구
10위	서울 용산구	10위	울산 북구
특이지역			
High-High지역 (10개)	서울 성동구, 서울 중구, 충북 옥천군, 전남 강진군, 전남 장흥군, 전남 고흥군, 전북 부안군, 전북 정읍시,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Low-Low지역 (13개)	부산 북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광주 서구,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강원 양구군, 전남 광양시		
Low-High지역 (4개)	경기 화성시, 경기 광명시, 강원 삼척시, 전북 순창군		
High-Low지역 (4개)	경북 봉화군, 경북 청송군, 경북 의성군, 충북 단양군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크고, 인접한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도 작음. Low-Low: 해당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작고, 인접 지역의 다문화 혼인 비중도 작음. Low-High: 해당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작고, 인접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큼. High-Low: 해당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크고, 인접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은 작음.

자료: 통계청(2021년). 인구동향조사.

〈표 2-16〉을 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인구가 많은 경기(75,323명), 서울(42,602명), 인천(14,464명), 부산(14,134명), 경남(14,017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3,209명), 제주(3,599명), 울산(3,209명), 전북(7,032명), 강원(7,278명), 광주(7,446명), 충북(7,452명), 대전(7,677명) 전남(7,888명)은 8,000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달리 합계출산율은 세종(1.12명), 강원(0.97명), 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와 같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높았고, 서울(0.59명),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의 대도시에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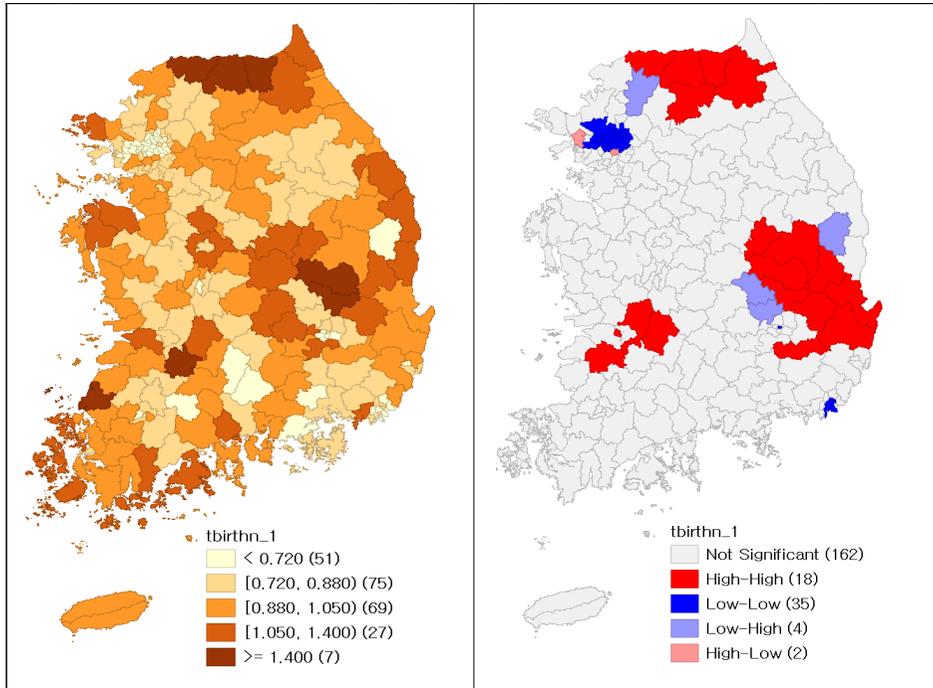
표 2-16 | 2022년 시도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지역	출생아수(명)	합계출산율(명)
전국	249,186	0.778
서울	42,602	0.593
부산	14,134	0.723
대구	10,134	0.757
인천	14,464	0.747
광주	7,446	0.844
대전	7,677	0.842
울산	5,399	0.848
세종	3,209	1.121
경기	75,323	0.839
강원	7,278	0.968
충북	7,452	0.871
충남	10,221	0.909
전북	7,032	0.817
전남	7,888	0.969
경북	11,311	0.930
경남	14,017	0.838
제주	3,599	0.91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21]은 2022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지역(오른쪽)을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낮고, 강원, 경상, 전라도의 군 지역에서 높고 이는 군집되어있다.

그림 2-21 | 2022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합계출산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합계출산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합계출산율은 낮고, 인접 지역 합계출산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합계출산율은 높고, 인접 지역 합계출산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2022년 합계출산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을 <표 2-17>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합계출산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전남 영광군, 전북 임실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 강원 인제군, 전남 신안군이다. 합계출산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서울 관악구, 대구 서구, 서울 광진구, 부산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남구, 대구 남구, 서울 마포구, 전남 곡성군이다.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합계출산율도 높은 High-High 18개 지역은 강원, 경북, 전남 일대이다.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

이 낮고, 인접 지역의 합계출산율도 낮은 Low-Low 35개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 일부(고양시, 부천시, 구리시) 인천 부평구, 대구 중구이다. 해당 지역 합계출산율은 낮고, 인접 지역 합계출산율은 높은 Low-High 4개 지역은 경기 포천시, 경북 칠곡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영양군이었다. 해당 지역 합계출산율은 높고, 인접 지역 합계출산율은 낮은 High-Low 2개 지역은 경기 과천시, 인천 서구이다.

표 2-17 | 2022년 합계출산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합계출산율 상위 1~10위 시군구		합계출산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전남 영광군	1위	서울 관악구
2위	전북 임실군	2위	대구 서구
3위	경북 군위군	3위	서울 광진구
4위	경북 의성군	4위	부산 중구
5위	강원 양구군	5위	서울 종로구
6위	강원 화천군	6위	서울 강북구
7위	강원 철원군	7위	서울 강남구
8위	경북 영천시	8위	대구 남구
9위	강원 인제군	9위	서울 마포구
10위	전남 신안군	10위	전남 곡성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 (18개)	강원, 경북, 전남 일대		
Low-Low지역 (35개)	서울, 부산, 경기 일부(고양시, 부천시, 구리시) 인천 부평구, 대구 중구		
Low-High지역 (4개)	경기 포천시, 경북 칠곡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영양군		
High-Low지역 (2개)	경기 과천시, 인천 서구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합계출산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합계출산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합계출산율은 낮고, 인접 지역 합계출산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합계출산율은 높고, 인접 지역 합계출산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표 2-18〉에서 2022년(2021년) 시도별 이혼 통계를 보면, 이혼건수는 인구가 많은 경기(24,864명), 서울(13,174명), 인천(6,045명), 부산(5,523명) 순으로 많았다. 모집단 인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조이혼율로 시도를

다시 비교하면, 제주(2.3건), 인천(2.1건), 충북(2.1건), 충남(2.1건), 강원(2.0건), 전남(2.0건), 경남(2.0건) 순이라 인천을 제외하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이혼비중은 전남 10.1%, 제주 9.5%, 서울 9.4%가 높았고, 세종 6.0%, 강원 6.1%, 부산 6.3%, 대구 6.4%, 울산 6.5%로 낮아서 시도 단위에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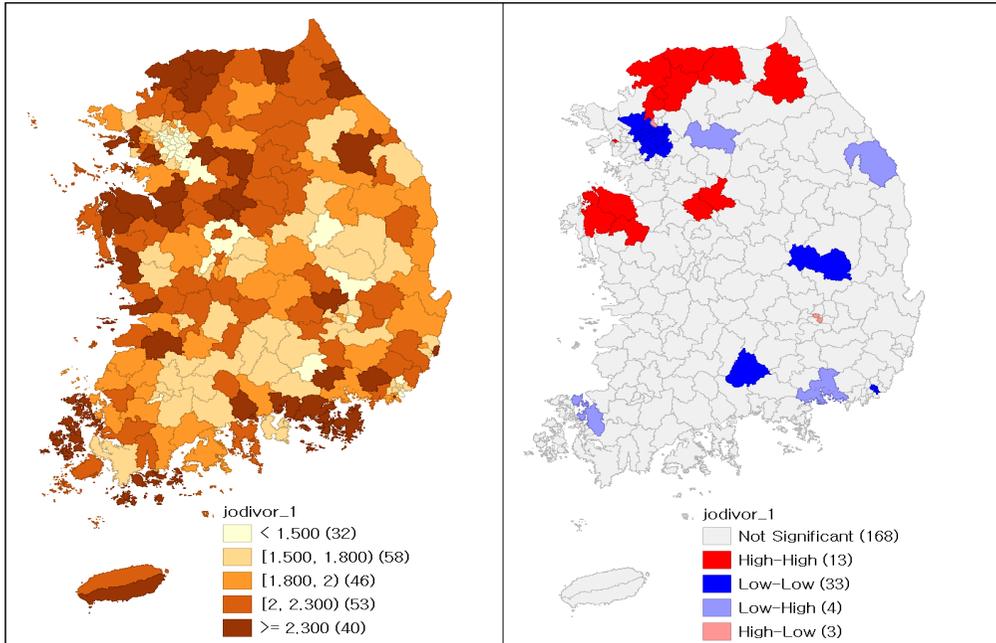
표 2-18 | 2022년(2021년) 시도별 이혼 통계

지역	2022년		2021년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다문화 이혼건수(건)	다문화 이혼비중(%)
전국	93,232	1.8	8,424	8.3
서울	13,174	1.4	1,454	9.4
부산	5,523	1.7	400	6.3
대구	3,675	1.6	264	6.4
인천	6,045	2.1	597	8.7
광주	2,360	1.6	186	7.2
대전	2,492	1.7	192	6.9
울산	2,165	1.9	158	6.5
세종	546	1.4	38	6.0
경기	24,864	1.8	2,431	8.8
강원	3,117	2.0	194	6.1
충북	3,271	2.1	296	8.9
충남	4,527	2.1	433	8.9
전북	3,377	1.9	318	8.4
전남	3,565	2.0	382	10.1
경북	4,911	1.9	393	7.6
경남	6,530	2.0	529	7.5
제주	1,564	2.3	143	9.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22]는 2022년 시군구별 조이혼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을 지도로 보여준다. 조이혼율은 강원도 북부권, 경기도 남부에서 대체로 높고, 서울,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낮는데 군집화 경향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그림 2-22 | 2022년 시군구별 조이혼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조이혼율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조이혼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조이혼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조이혼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조이혼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조이혼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조이혼율은 낮고, 인접 지역 조이혼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조이혼율은 높고, 인접 지역 조이혼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2022년 조이혼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을 <표 2-19>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조이혼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 충북 음성군, 경기 동두천시, 경기 포천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부산 중구, 인천 중구, 경기 평택시, 강원 속초시였다. 조이혼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 서울 서초구, 서울 마포구, 경남 의령군, 경북 군위군, 대구 수성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성동구, 경북 예천군이다.

해당 지역의 조이혼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조이혼율도 높은 High-High 13개 지역은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연천군, 경기 포천시, 강원 인제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예산군,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다. 해당 지역의 조이혼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조이혼율도 낮은 Low-Low 33개 서울, 경기, 부산 일대와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이었다. 해당 지역 조이혼율은 낮고, 인접 지역 조이혼율은 높은 Low-High 4개 지역은 경남 창원시, 전남 무안군, 강원 삼척시, 경기 양평군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조이혼율은 높고, 인접 지역 조이혼율은 낮은 High-Low 3개 지역은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서울 강북구이다.

표 2-19 | 2022년 조이혼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조이혼율 상위 1~10위 시군구		한부모가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경북 울릉군	1위	경기 과천시
2위	충북 음성군	2위	서울 서초구
3위	경기 동두천시	3위	서울 마포구
4위	경기 포천시	4위	경남 의령군
5위	강원 양구군	5위	경북 군위군
6위	충남 당진시	6위	대구 수성구
7위	부산 중구	7위	서울 동작구
8위	인천 중구	8위	서울 성북구
9위	경기 평택시	9위	서울 성동구
10위	강원 속초시	10위	경북 예천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 (13개)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연천군, 경기 포천시, 강원 인제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예산군,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Low-Low지역 (33개)	서울, 경기, 부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Low-High지역 (4개)	경남 창원시, 전남 무안군, 강원 삼척시, 경기 양평군		
High-Low지역 (3개)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서울 강북구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조이혼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조이혼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조이혼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조이혼율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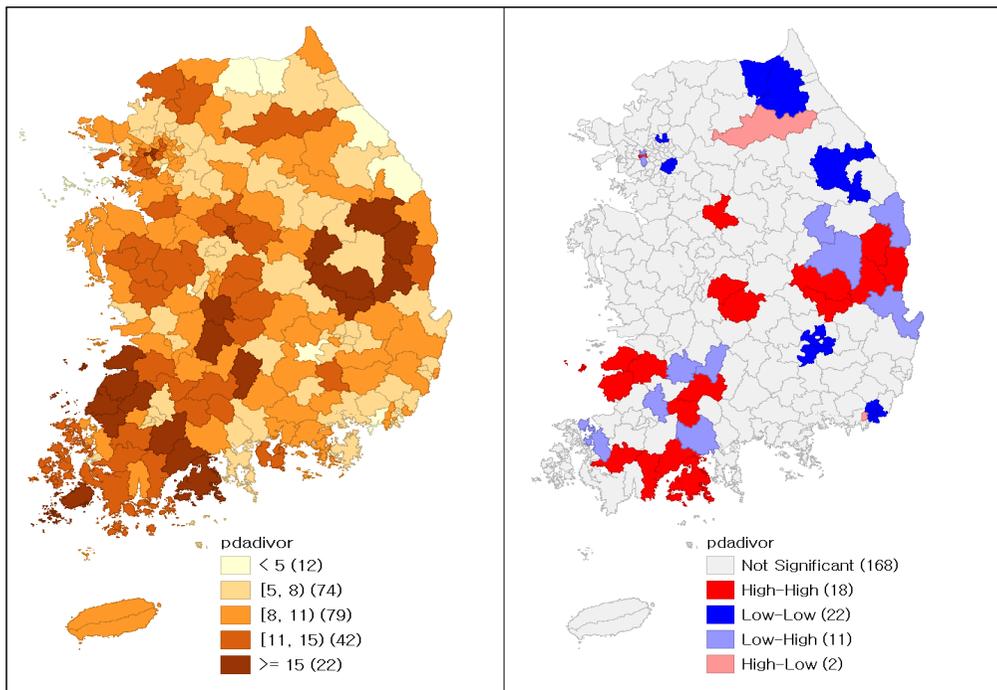
Low-High: 해당 지역 조이혼율은 낮고, 인접 지역 조이혼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조이혼율은 높고, 인접 지역 조이혼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2021년 시군구별 다문화 이혼 비중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은 [그림 2-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이혼 비중이 큰 지역은 경북, 전남, 전북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지만,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반대로 다문화 이혼 비중이 작은 지역도 강원, 경북, 부산에서 여러 곳 발견되지만, 군집화된 경향은 크지 않다.

그림 2-23 | 2021년 시군구별 다문화 이혼 비중(%)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다문화 이혼 비중이 크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다문화 이혼 비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함.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이 크고, 인접한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이 작고, 인접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도 작음.  
 Low-High: 해당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작고, 인접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큼.  
 High-Low: 해당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크고, 인접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작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2021년 다문화 이혼 비중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은 <표 2-20>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다문화 이혼 비중 상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청송군, 경북 봉화군, 전남 장성군, 전남 영광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보성군, 서울 금천구, 경북 예천군, 전북 부안군이다. 다문화 이혼 비중 하위 1~10위 시군구는 인천 옹진군, 경북 고령군, 강원 양구군, 충남 계룡시, 강원 삼척시, 강원 강릉시, 경북 울릉군, 부산 연제구, 강원 화천군, 부산 남구이다.

표 2-20 | 2021년 다문화 이혼 비중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 상위 1~10위 시군구		다문화 이혼 비중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경북 청송군	1위	인천 옹진군
2위	경북 봉화군	2위	경북 고령군
3위	전남 장성군	3위	강원 양구군
4위	전남 영광군	4위	충남 계룡시
5위	경북 군위군	5위	강원 삼척시
6위	경북 의성군	6위	강원 강릉시
7위	전남 보성군	7위	경북 울릉군
8위	서울 금천구	8위	부산 연제구
9위	경북 예천군	9위	강원 화천군
10위	전북 부안군	10위	부산 남구
특이지역			
High-High지역 (18개)	서울 구로구,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전북 부안군, 전북 남원시, 전북 고창군, 전북 정읍시, 전남 장흥군, 전남 보성군, 전남 고흥군, 전남 영암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Low-Low지역 (22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구, 경기 성남시,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북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금정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부산 동구, 강원 인제군, 강원 태백시, 강원 양구군, 강원 정선군, 강원 동해시,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북구, 대구 중구		
Low-High지역 (11개)	서울 양천구, 경기 광명시, 경북 포항시,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 경북 울진군, 전남 무안군,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울진군		
High-Low지역 (2개)	강원 홍천군, 부산 사상구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이 크고, 인접한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도 큼.

Low-Low: 해당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이 작고, 인접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도 작음.

Low-High: 해당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작고, 인접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큼.

High-Low: 해당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크고, 인접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작음.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해당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이 크고, 인접한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도 큰 High-High 18개 지역은 18개: 서울 구로구,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전북 부안군, 전북 남원시, 전북 고창군, 전북 정읍시, 전남 장흥군, 전남 보성군, 전남 고흥군, 전남 영암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이다. 해당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이 작고, 인접 지역의 다문화 이혼 비중도 작은 Low-Low 22개 지역은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구, 경기 성남시,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북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금정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부산 동구, 강원 인제군, 강원 태백시, 강원 양구군, 강원 정선군, 강원 동해시,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북구, 대구 중구이다. 해당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작고, 인접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큰 Low-High 11개 지역은 서울 양천구, 경기 광명시, 경북 포항시,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 경북 울진군, 전남 무안군,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울진군이다. 해당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크고, 인접 지역 다문화 이혼 비중은 작은 High-Low 2개 지역은 강원 홍천군, 부산 사상구이다.

〈표 2-21〉은 2020년 시도별 한부모가구 통계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9.5%인데, 광주(11.6%), 부산(11.2%), 인천(11.1%), 서울(10.6%)의 대도시에서 대체로 높았고, 충남(7.8%), 경북(8.0%), 세종(8.3%), 강원(8.4%), 충북(8.3%)에서 낮았다. 한부모가구를 미혼 한부모, 유배우 한부모, 사별 후 한부모, 이혼 후 한부모로 구분하면, 전국 평균으로는 이혼 3.1%, 유배우 2.4%, 사별 2.2%, 미혼 1.8% 순으로 높았고,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다.

표 2-21 | 2020년 시도별 한부모가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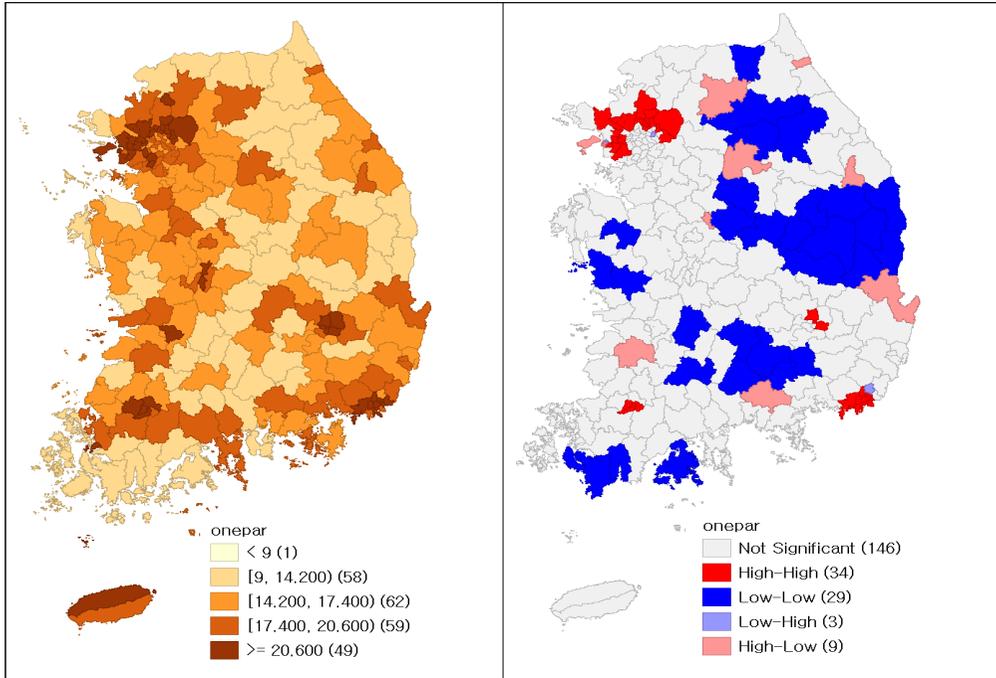
(단위: %)

지역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국	9.5	1.8	2.4	2.2	3.1
서울	10.6	1.7	2.6	2.8	3.5
부산	11.2	1.7	3.4	2.5	3.6
대구	10.8	1.5	3.1	2.5	3.7
인천	11.1	2.0	2.5	2.1	4.4
광주	11.6	1.4	4.2	2.2	3.8
대전	9.9	1.4	3.2	1.9	3.4
울산	8.6	1.0	2.6	1.9	3.1
세종	8.3	1.0	3.9	1.1	2.3
경기	9.6	1.7	2.6	1.8	3.6
강원	8.4	1.1	2.6	2.0	2.6
충북	8.3	1.2	2.4	1.9	2.8
충남	7.8	1.1	2.3	1.8	2.6
전북	9.5	1.2	3.0	2.3	2.9
전남	8.7	1.2	2.7	2.3	2.5
경북	8.0	1.1	2.4	2.3	2.3
경남	8.9	1.1	2.6	2.2	3.0
제주	10.3	1.1	3.3	2.4	3.5

자료: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그림 2-24]는 2020년 시군구별 한부모가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지역(오른쪽)을 보여준다. 한부모가구 비율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일부 지역에서 높은 경향이 군집화되어 나타났다. 반면, 강원, 경북, 전라 곳곳에서는 한부모가구 비율이 낮은 군 지역 곳곳에 산개되어 있다.

그림 2-24 | 2020년 시군구별 한부모가구 비율(%) 5단계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한부모가구 비율이 높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한부모가구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표 2-22>는 2020년 한부모가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을 자세히 보여준다. 한부모가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는 광주 남구, 인천 계양구, 서울 강북구, 경기 의정부시, 전남 목포시, 인천 미추홀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이다. 한부모가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경북 청송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경북 군위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양군, 충북 보은군이다.

해당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도 높은 High-High 지역은 34개로 많았고 수도권, 광역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도 낮은 Low-Low도 29개로 많았고, 전국의 군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해당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높은 Low-High 3개 지역은 부산 금정구, 인천 동구, 서울 광진구이다. 해당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낮은 High-Low 9개 지역은 인천 중구, 강원 원주시, 강원 속초시, 강원 태백시, 강원 춘천시, 충북 증평군, 전북 정읍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다.

표 2-22 | 2020년 한부모가구 비율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한부모가구 비율 상위 1~10위 시군구		한부모가구 비율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광주 남구	1위	경북 울릉군
2위	인천 계양구	2위	인천 옹진군
3위	서울 강북구	3위	경북 청송군
4위	경기 의정부시	4위	전남 고흥군
5위	전남 목포시	5위	경북 의성군
6위	인천 미추홀구	6위	경남 산청군
7위	서울 노원구	7위	경북 군위군
8위	서울 도봉구	8위	전남 보성군
9위	인천 남동구	9위	경북 영양군
10위	인천 부평구	10위	충북 보은군
특이지역			
High-High지역 (34개)	수도권, 광역시		
Low-Low지역 (29개)	전국의 군 지역에 분산		
Low-High지역 (3개)	부산 금정구, 인천 동구, 서울 광진구		
High-Low지역 (9개)	인천 중구, 강원 원주시, 강원 속초시, 강원 태백시, 강원 춘천시, 충북 증평군, 전북 정읍시, 경남 진주시, 경북 포항시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이 높고, 인접한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도 높음.

Low-Low: 해당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이 낮고, 인접 지역의 한부모가구 비율도 낮음.

Low-High: 해당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낮고, 인접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높음.

High-Low: 해당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높고, 인접 지역 한부모가구 비율은 낮음.

자료: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 3 지역의 인구 및 가구 특성 유형화

시군구별 주요 인구 및 가구 특성을 종합해서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시군구별 유형화를 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된 변수는 전체인구 수,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조혼인율, 한부모가구 비율, 합계출산율, 조이혼율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과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간 부적인 상관관계가 큰데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서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을 활용했다. 비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유형화에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시군구별 유형화는 인접한 지역과의 공간가중치를 고려한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군집분석은 투입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유형 내 동질성과 유형 간 이질성을 최대화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군집분석 결과에서 지표별 평균값이 5개 유형 중 가장 큰 경우를 매우 높음, 두 번째로 큰 경우를 높음, 세 번째(평균)인 경우 보통, 네 번째인 경우 낮음, 다섯 번째로 큰 경우 매우 낮음이라는 특징으로 해석하겠다.

분석 결과 유형1(하늘색)은 72개 시군구가 포함되었고, 전체인구 수 많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높고, 조혼인율 높고, 한부모가구 비율 높고, 합계출산율 매우 낮고, 조이혼율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유형1에는 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광역시의 구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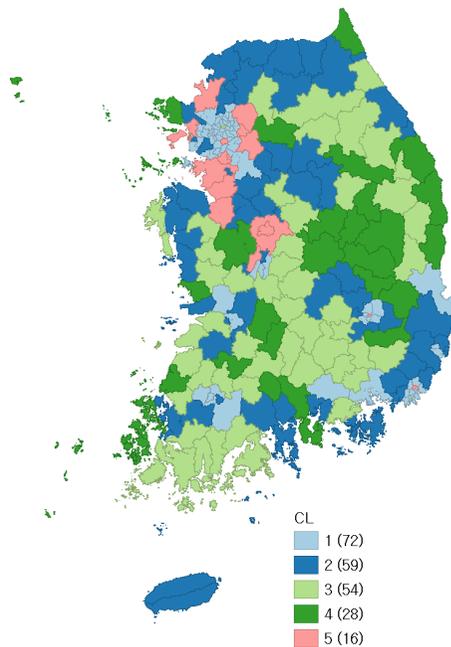
유형2(파랑색)는 59개 시군구가 포함되었고, 전체인구 많은 편이고, 조혼인율 낮고, 한부모가구 비율 높은 편이고, 합계출산율 낮은 편이고, 조이혼율 낮은 편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주로, 수도권, 광역시에서 인접하거나 중소도시인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3(연두색)은 54개 시군구가 해당되며, 전체인구 수 보통,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높은 편, 조혼인율 보통, 한부모가구 비율 낮은 편, 합계출산율 높은 편, 조이혼율 높은 편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유형3은 수도권,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분포한다.

유형4(초록색)는 28개 시군구가 해당되며, 전체인구수 적은 편,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낮은 편, 조혼인율 낮은 편, 한부모가구 비율 보통, 합계출산율 높은 편, 조이혼율 높은 편이다. 유형4에는 내륙산간 또는 해안가의 군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림 2-25 | 시군구별 인구 및 가구 특성 군집분석 결과



- 주: 1) 유형1(하늘색)은 전체인구 수 매우 많음,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매우 높음, 조혼인율 매우 높음, 한부모가구비율 매우 높음, 합계출산율 매우 낮음, 조이혼율 매우 낮음.  
 2) 유형2(파랑색)는 전체인구 많은 편임, 조혼인율 매우 낮음, 한부모가구비율 높은 편임, 합계출산율 낮은 편임, 조이혼율 낮은 편임.  
 3) 유형3(연두색)은 전체인구 수 보통,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높은 편임, 조혼인율 보통, 한부모가구비율 낮은 편임, 합계출산율 높은 편임, 조이혼율 높은 편임.  
 4) 유형4(초록색)는 전체인구수 적은 편임,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낮은 편임, 조혼인율 낮은 편임, 한부모가구비율 보통, 합계출산율 높은 편임, 조이혼율 높은 편임.  
 5) 유형5(분홍색)는 전체인구 수 많음,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높음, 조혼인율 매우 높음, 한부모가구비율 매우 낮음, 합계출산율 매우 높음, 조이혼율 매우 높음.

유형5(분홍색)는 16개 시군구가 포함되며, 전체인구 수 많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높고, 조혼인율 높고, 한부모가구 비율 낮고, 합계출산율 높고,

조이혼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시, 대도시의 일부 구에서 발견된다.

표 2-23 | 인구 및 가구 특성 5개 시군구별 유형 군집분석 결과

유형(수)	시군구
유형1 (72개)	전체인구 수 매우 많음,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매우 높음, 조혼인율 매우 높음, 한부모가구 비율 매우 높음, 합계출산율 매우 낮음, 조이혼율 낮음.
	-서울: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부산: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금정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부산진구, 영도구, 동구, 서구
	-대구: 달서구, 수성구, 북구, 남구, 서구, 동구
	-인천: 서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광주: 광산구, 북구, 남구, 서구,
	-대전: 중구, 동구
	-울산: 남구, 중구
	-경기: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구리시, 광명시, 의정부시
	-전북: 전주시, 익산시
	-전남: 화순군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유형2 (59개)	전체인구 많은 편임, 조혼인율 매우 낮음, 한부모가구비율 높은 편임, 합계출산율 낮은 편임, 조이혼율 낮은 편임.
	-부산: 기장군, 강서구
	-대구: 달성군
	-인천: 미추홀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울산: 울주군, 북구, 동구
	-경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안성시, 이천시, 시흥시, 오산시, 동두천시
	-강원: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충북: 증평군, 진천군, 제천시, 충주시
	-충남: 천안시, 당진시, 홍성군, 계룡시, 서산시, 보령시
	-전북: 완주군, 정읍시, 군산시
	-전남: 무안군, 광영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경북: 칠곡군,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경남: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p>유형3 (54개)</p>	<p>전체인구 수 보통,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높은 편임, 조혼인율 보통, 한부모가 구 비율 낮은 편임, 합계출산율 높은 편임, 조이혼율 높은 편임.</p> <p>-서울: 중구 -부산: 중구 -대구: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 홍천군, 태백시 -충북: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남: 태안군,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논산시 -전북: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무주군, 김제시, 남원시 -전남: 진도군, 완도군, 함평군,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담양군 -경북: 봉화군, 성주군, 고령군, 영양군, 청송군 -경남: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밀양시</p>
<p>유형4 (28개)</p>	<p>전체인구수 적은 편임,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낮은 편임, 조혼인율 낮은 편임, 한부모가구 비율 보통, 합계출산율 높은 편임, 조이혼율 높은 편임.</p> <p>-인천: 옹진군, 강화군 -경기: 양평군 -강원: 영월군, 삼척시 -충남: 서천군, 고성군, 공주시 -전북: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신안군, 영광군, 구례군 -경북: 울릉군, 울진군, 예천군, 청도군, 영덕군, 의성군, 군위군, 문경시, 상주시, 영천시, 영주시, 안동시 -경남: 하동군, 남해군</p>
<p>유형5 (16개)</p>	<p>전체인구 수 많음, 0~14세 유소년인구 비율 높음, 조혼인율 매우 높음, 한부모가 구 비율 낮음, 합계출산율 높음, 조이혼율 높음.</p> <p>-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인천: 서구, 중구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 광주시, 화성시, 파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과천시, 평택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p>

## 4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공급

2020년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공급 통계는 <표 2-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류가 다양하고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통계청에서 집계하여 발표하는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지표(국가승인통계)를 활용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급이 많지만, 인구 대비 수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구 십만명당 시설 수를 활용하면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지표에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이 포함된다.

표 2-24 | 2020년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통계

지역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	사회복지시설수(개)
전국	15.5	8,026
서울	8.0	775
부산	6.4	218
대구	14.9	361
인천	19.2	566
광주	10.2	148
대전	14.4	211
울산	8.8	100
세종	8.6	21
경기	18.1	2,432
강원	29.0	447
충북	25.0	400
충남	21.1	447
전북	19.9	359
전남	24.6	455
경북	21.6	571
경남	12.9	430
제주	15.7	106

주: 1)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총 사회복지시설수÷주민등록인구)×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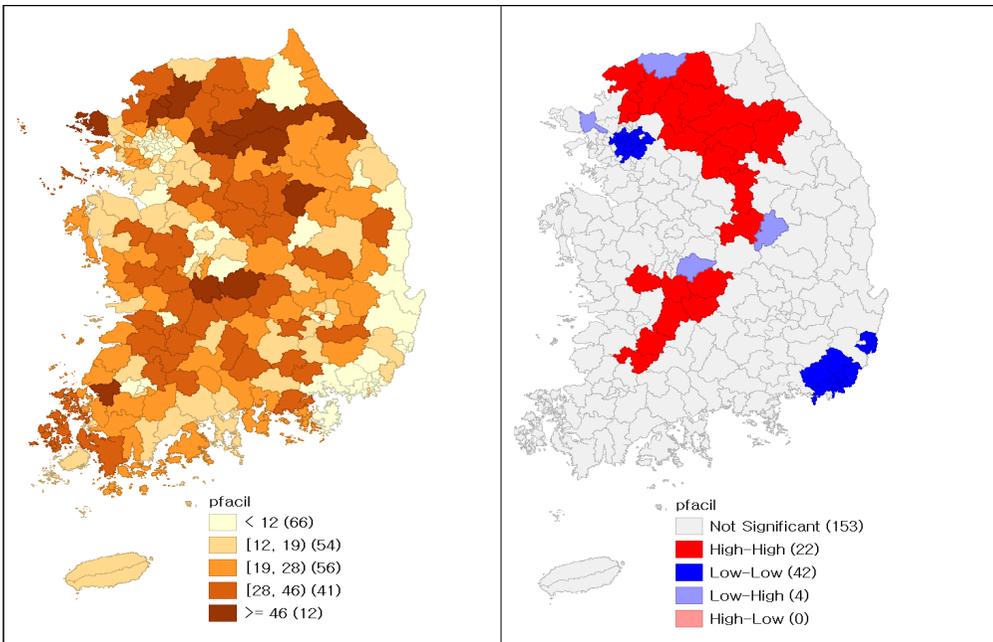
2)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을 포함

자료: 통계청(2020).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이 아닌 도 지역인 강원 29.0개, 충북 25.0개, 전남 24.6개, 경북 21.6개, 충남 21.1개 순으로 많았다. 이와 반대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적은 지역은 부산 6.4개, 서울 8.0개, 세종 8.6개, 울산 8.8개, 광주 10.2개로 신도시인 세종을 제외하면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로 나타났다. 즉,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대비 사회복지 인프라 공급이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프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6]은 2020년 시군구별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분포(왼쪽)와 특이지역(오른쪽)을 보여준다.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공급이 특히 많은 지역은 강원, 경기, 충청 일부 지역인데, 군집화된 경향이 강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일부, 부산, 울산,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 공급이 저조했다.

그림 2-26 | 2020년 시군구별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분포(왼쪽)와 특이사항(오른쪽)



- 주: 1) 왼쪽 그림은 색깔이 진할수록 시군구별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고, 색깔이 흐릴수록 시군구별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
- 2) 오른쪽 그림에서 High-High: 해당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도 많음.  
 Low-Low: 해당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적고, 인접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도 적음.  
 Low-High: 해당 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적고, 인접 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많음.  
 High-Low: 해당 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많고,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적음.

자료: 통계청(2020).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2020년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은 <표 2-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상위 1~10위 시군구는 인천 강화군, 경기 포천시,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경기 양주시, 충북 단양군, 전남 함평군, 강원 강릉시다.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하위 1~10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부산 부산진구, 서울 마포구, 울산 동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하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과천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도 많은 High-High는 22개였고, 경기 외곽,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중소도시 및 군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적고, 인접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도 적은 Low-Low 42개 지역은 서울 전역, 부산 전역, 울산, 경기 및 경남 일부이다. 해당 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적고, 인접 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많은 Low-High 4개 지역은 경기 김포시,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경북 예천군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사회복지시설 수는 많고, 인근 지역 시설 수는 적은 High-Low 지역은 없었다.

표 2-25 | 2020년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상위·하위 시군구 10개, 특이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상위 1~10위 시군구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하위 1~10위 시군구	
1위	인천 강화군	1위	서울 강남구
2위	경기 포천시	2위	서울 서초구
3위	충북 영동군	3위	서울 성동구
4위	충남 금산군	4위	부산 부산진구
5위	강원 횡성군	5위	서울 마포구
6위	경기 양평군	6위	울산 동구
7위	경기 양주시	7위	부산 수영구
8위	충북 단양군	8위	부산 사하구
9위	전남 함평군	9위	부산 해운대구
10위	강원 강릉시	10위	경기 과천시
특이지역			
High-High지역 (22개)	경기 외곽,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중소도시 및 군 지역		
Low-Low지역 (42개)	서울 전역, 부산 전역, 울산, 경기 및 경남 일부		
Low-High지역 (4개)	경기 김포시,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경북 예천군		
High-Low지역 (0개)	-		

주: High-High: 해당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고, 인접한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도 많음.

Low-Low: 해당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적고, 인접 지역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도 적음.

Low-High: 해당 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적고, 인접 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많음.

High-Low: 해당 지역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많고,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적음.

자료: 통계청(2020).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5 지역 인구 및 가구·가족 변화의 시사점

인구와 가족 변화를 파악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빈도와 비율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인구 규모가 큰 규모는 인구 대비 비율의 증감이 크지 않지만,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소수의 변화가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고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 한두 명이 더 태어나거나 덜 태어나는 것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구 및 가족 변화를 파악할 때 두 가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지역별 인구 변화

2022년 시도별 전체인구는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데, 특히 서울 송파구부터 경기 남부 성남, 부천, 수원, 용인, 화성, 충남 천안시까지 이어지는 권역에서의 시군구 인구가 상위 10위 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변화의 추세를 볼 때, 이러한 지역들은 2030년까지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가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도 늘어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 폭이 적어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이혼(예방) 및 한부모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 지역에서는 전체인구, 유소년인구는 2022년 현재도 나머지 시도 및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상황인데, 2030년까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인구가 축소되는 변화에 발맞춰 조직, 인력,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참여자 수 확보를 위해서는 유소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2022년 현재도 그렇고 2030년까지 고령인구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령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유소년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생산가능인구처럼 단순하게 경기 남부

(화성시, 김포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인천 미추홀구, 계양구, 세종시, 부산 강서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북구, 경남 거제시, 부산 강서구, 기장군처럼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으로 전국 곳곳에 산개되어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30년까지 유소년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유입(전입)된 유소년인구가 한동안 유지되고 그에 비해 다른 사회복지시설 공급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미성년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역에서도 203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유소년인구 수가 감소하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기보다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간제 및 기간제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응이 적합할 수 있다.

## 2) 지역별 가구·가족의 변화

가구유형 구성, 변화에서는 전체인구, 연령대별 인구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전체인구 수는 앞으로 감소하지만, 2050년까지 경기, 인천, 충남, 세종, 충북, 강원 지역에서는 가구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서울, 경상, 전라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입해오는 경우와 더불어 만혼(비혼)화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한편, 수도권에서 먼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도 지역보다도 오히려 광역시에서 가구 수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20년 3명 이상에서 2020년 이미 2명 초반대로 감소했는데, 2050년에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하면 2명 미만으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가구 구성과 가정생활에도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가족센터의 서비스 대상자와 함께 가족생활교육에서 다루는 콘텐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 수, 가구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가구유형 중에서는 특히 2세대의 부부+자녀 가구, 부(모)+자녀 가구가 2050년까지 2020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도 및 가구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부부, 부부+자녀, 부(모)+자녀, 1

인 가구처럼 앞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형태도 발견된다.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폭은 모든 시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부부가구 구성비 증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에서 크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서 작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전국 공통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상담 등 부부가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대도시, 경기, 세종, 제주에 중점을 두고 제공되어야 한다.

혼인, 출산(다문화 별도), 이혼(다문화 별도), 한부모, 인구이동(전입, 전출, 순이동)을 알아본 결과, 이러한 가족 및 인구 현상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다채로운 차이가 나타났다. 조혼인율의 경우 하위 10개 시군구는 경상과 전라에 쏠려 있지만, 이와 반대로 상위 10개 시군구는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북의 시군구에서 뚜렷한 패턴 없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을 봐도, 상위 10개 시군구, 하위 10개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발견된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도 지역에서는 서로 구분해서 둘 모두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출생아 수는 인구 수가 많은 지역과 거의 동일한데, 이와 달리 합계출산율은 인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낮고 오히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서 높기 때문이다. 지역 가족센터에서 영유아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수요를 판단할 때는 합계출산율과 함께 전입, 전출의 인구이동, 출생아 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이혼, 한부모가구 비율도 전국 곳곳에서 산개되어 있다. 여러 인구 및 가족 특성을 종합해서 시군구 유형을 도출한 결과는 [그림 2-24]와 <표 2-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족센터 관리자, 사업 담당자는 이러한 해당 지자체의 인구 및 가족 특성과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객관적 실태에 기반해서 기관의 운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3)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공급

시도 및 시군구별 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서울, 부산, 울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고, 경기, 강원, 충북, 충

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십만명당 시설 수가 가장 적은 지역(부산, 6.4개)과 가장 많은 지역(강원, 29.0개) 사이에 약 5배 차이가 난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미 공급된 인프라는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 울산 등 인구 규모가 크고 밀집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공급이 적은 상황이므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가족센터를 추가 설치,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 제3장

# 가족 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유관기관 분석

1. 가족 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분석
2. 가족 서비스 관련 기관 기능 및 전달체계



## 제3장 가족 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유관기관 분석

제3장에서는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가족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가의 사회정책 기본계획과 유관기관의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므로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중기적 대응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의 실태는 한가원과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인구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한가원의 향후 대응방안 수립에 참고점을 제공할 수 있다.

### 1 가족 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분석

본 장에서 가족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부처의 최신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파악하려 한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및 가족정책과 관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중장기보육기본계획],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건강가정기본계획

##### [기본계획 내용과 강조점]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2006년에 수립한 후 2009년에 보완하여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 ‘다양

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및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등 6개 핵심영역에서 남녀간, 세대간 조화의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제정 당시 가족 규모의 축소, 세대구성의 단순화 및 맞벌이 가구의 보편화 등 가족형태 변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및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등 5개 핵심영역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취약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현장 실천 강화 등을 목표로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등 6개 핵심영역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3-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취지로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및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 추진계획과 세부적 사업을 마련하였다.

##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이처럼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제1차부터 제4차까지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기초와 세부 정책은 조금씩 달라졌

으나 가족 변화 중 주로 가족 가치관의 변화나 가족 다양성 증가에 초점을 맞춰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사실혼·동거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그중에서도 고령화, 가구 규모 축소, 지역 소멸 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여, 전반적 인구감소와 가족의 고령화에 대해 시의성 있게 대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년기 돌봄 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노년기 가족관계가 다양해지고, 연명치료와 존엄사 결정에 가족 이슈가 발생하고, 사회적 고립사가 증가하는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족정책 관점의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3-1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비전	“2025 세상 모든가족함께” 모든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li> <li>•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li> <li>•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li> </ul>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li> <li>•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 여건 조성</li> <li>•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체계 구축</li> </ul>
목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li> <li>•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li> <li>•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li> </ul>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li> <li>•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li> </ul>

## 2)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내용과 강조점]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에 걸쳐 발표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2010-2012)은 향후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증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등 5개 핵심영역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 상승,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와 이혼·사별 등 다문화가족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정책추진체계 정비’등 6개 영역별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은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할 목적으로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사회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등 5개 영역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다문화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인권보호 및 차별해소’,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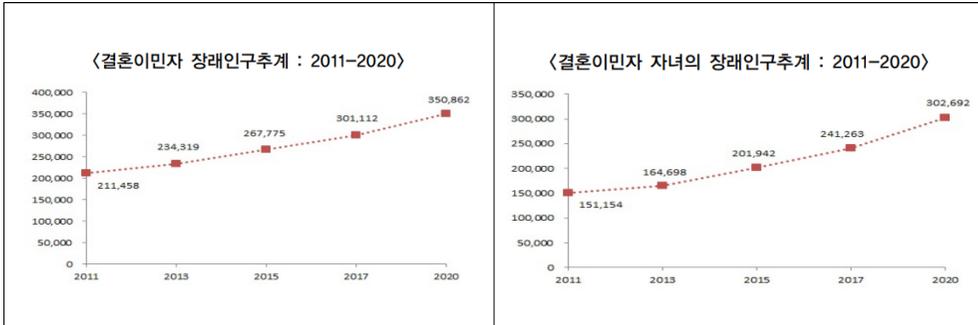
개 핵심영역별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에 부응하여 결혼이민자에서 전체 가족, 이주배경 자녀로 강조점을 달리 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에 기여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된 기본계획을 보면 대상이 되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구통계적 전망이 정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제2차 기본계획 수립(2013년) 당시 추계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미래 전망을 보면, 2020년이 되면 결혼이민자 약 35만명, 한국인 배우자 35만명, 자녀 3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 인용한 실제 2021년 통계청의 다문화가구 현황 통계를 보면, 결혼이민자 174,122명, 한국인 배우자 161,395명, 자녀 286,848명으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수는 추계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국제결혼이 실제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제결혼은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관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문화가족의 출산율도 내국인 가족의 출산율과 비슷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가구의 비율은 2015년 33.2%에서 2021년 42%로 늘었고, 평균 자녀 수도 2015년 1.02명, 2018년 0.95명, 2021년 0.88명으로 감소하여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루어진 국제결혼 부부가 출생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배경의 학생이 증가하고, 만7~18세 자녀는 총 17.5만 명에 달해 다문화가족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계속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3-1 | 2009년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11-2020



자료: 설동훈 외(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여성가족부  
출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p16.

표 3-2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비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li> <li>•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li> <li>•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li> <li>•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li> </ul> </li> <li>2.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li> <li>•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li> <li>•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li> <li>•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li> </ul> </li> </ol>
목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li> <li>•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li> <li>•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li> </ul> </li> <li>4.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li> <li>•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li>•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li> </ul> </li> </ol>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내용과 강조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사회·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기본계획이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마다 발표된 총 4차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사회·인구구조의 변화에 반응하여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구축을 목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등 3개 핵심영역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은 1차 계획 당시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 필요 등 고려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등 3개 핵심영역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과거 10년간의 미시적 접근을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목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및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등 4개 저출산에 대응 전략과 ‘노후 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경제로 도약’등 4개 고령사회에 대응 전략을 세워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은 인구감소 시점 단축에 따른

개개인의 역량 제고 및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등 4개 핵심영역에서 20개 세부과제를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3-3〉 참조).

제4차 기본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하나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로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비혼·저출산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저출산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영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하는 핵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차별 없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모든 연령대의 통합적 사회를 위한 논의 본격화, 다양한 노동 포용 및 개인 단위 소득보장 등을 통한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 기반 구축 등 지역통합 모색,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및 고령친화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령친화경제로 도약 등 과제를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밑그림이 되는 계획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확대해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었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패러다임도 변화시켜왔다.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의 정리,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조정도 기본계획을 통해 사전에 조율됨으로써 부처간 갈등 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소관하는 정책 중심

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이 기존의 정부 사업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하여 다름으로써 두 가지 현상의 복합적 결과로 나타난 지방 인구감소 대응이 늦어진 문제점을 초래한 한계가 있다. 저출산 정책에서는 가족 관점이 반영되어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가족생애과정에 대한 고려가 있으나, 고령화 관련 정책은 가족 관점이 부족하여 노년기 가족관계의 특성, 돌봄과 주거에 관련된 가족 문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생애 주기적 접근 등이 없어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표 3-3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가 누리는 워라벨</li> <li>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li> <li>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li> <li>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li> <li>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li> </ul> </li> </ol>
	개인의 삶의 질 향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li> <li>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li> <li>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li> <li>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li> <li>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li> </ul> </li> </ol>
목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li> <li>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li> <li>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li> <li>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li> <li>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li> </ul> </li> </ol>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li> <li>연령통합적 사회 준비</li> <li>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li> <li>지역상생 기반 구축</li> <li>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li> </ul> </li> </ol>

#### 4) 아동정책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내용과 강조점]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절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2015년에 처음 수립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은 ‘아동 행복’,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두 가지 정책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표 3-4>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영역에서는 ‘아동 행복’, ‘권리주체로서 아동관점 강화’실현을 위해 법·제도적 체계 정비,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하며, 아동 참여, 의견 청취, 부모교육 등 각종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영역에서는 과도한 학업 경쟁이 아닌, 놀이와 학습이 균형있게 조성된 환경에서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유활동으로 아동 행복을 향상시키며, 창의, 융합, 공감 등 미래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강조한다.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영역의 중점 과제는 국가가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아동중심의 보호·돌봄체계 구축’과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적 지원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라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 관련 가정-지역사회 돌봄지원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가정에 필요 서비스 지원, 중도입국의 이주배경 아동의 입국초기 적응 서비스 지원 등 세부 사업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에서는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와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종합적인 가정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며, 재난 등 긴급상황에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정내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가능한 지역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부모교육을 강화하며,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하에서 아동이 가정, 지역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강조하였다.

###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보육(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부, 교육부), 청소년(여성가족부, 교육부) 정책이 분절된 우리나라 행정구조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누락되었던 아동 중심의 포괄적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기본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수립되어 이제 2차 기본계획이 시행중이다. 아동을 복지의 대상, 교육의 대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시민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 수 감소라는 인구학적 현실, 아동발달을 위한 지역환경의 편차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아동 수가 감소할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아동 권리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측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출생율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가 감소하는 등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 변화가 아동 권리 실현과 양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분석이 없다. 특히, 아동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있는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다루지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중장기적 전망을 하기 어렵고, 실행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아동정책은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나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계획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그런 지점들이 보이지 않는다. 보육, 아동, 청소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사회정책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인구변화를 고려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표 3-4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1. 권리주체 아동 권리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li> <li>• 생활 속 아동 권리 실현</li> </ul>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li> <li>•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li> <li>•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li> </ul>
목표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li> <li>•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li> </ul>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li> <li>•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li> </ul>

## 5) 중장기보육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내용과 강조점]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이라는 비전하에 보육정책 과제를 설계하였다. 기본계획은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촘촘한 양육·보육지원 체계 구축’, ‘미래 대응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부모의 신뢰도 제고’,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동등한 출발선 보장’등 3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등 총 4대 중점전략과

16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표 3-5〉 참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영역에서는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부모급여 도입, 시간제보육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영역은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평가제도의 개편, 보육과정 내실화,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 세부과제를 통해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영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별 편차의 완화를 위해 ‘수행기능’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 확대·재구조화, 공공과 민간 협력 강화, 지역 자율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보육정책은 출생을 감소에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정책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지난 5년 사이 0~6세 영유아 수가 310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연평균 5.8% 감소하였다는 점과 어린이집이 매년 약 1.8천개씩 감소하여 2017년 4만개에서 22년 3.1만개로 줄어들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백이나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 대책으로는 보육취약지역을 지정하여 지자체 지역보육계획 수립 시 국조보조사업의 정교화로 지역소멸 대응 필수 인프라 유지 및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특화모델을 개발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기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사 적정 수급을 위해 특별근무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4~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규모화 모델을 개발하고 주요 프로그램, 교재, 교구, 차량 등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휴·폐원 등에 관련된 제도 개선으로 보

육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서비스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가 이미 2015년부터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응 전략이 너무 늦게 수립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된 바가 없고,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2023년에 보육취약지역을 진단하는 기준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제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이제 시작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표 3-5 |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비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1.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 비용 경감</li> <li>•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li> <li>•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li> <li>• 육아 건강·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li> </ul>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li> <li>•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li> <li>•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li> <li>•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li> </ul>
목표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li> <li>•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li> <li>•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li> <li>•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li> </ul>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li> <li>•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li> <li>•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예방</li> <li>•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li> </ul>

## 6)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내용과 강조점]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현실의 노후준비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이다.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의 정책기반과 노후준비서비스 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향후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3-6〉 참조).

표 3-6 |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비전 행복한 노후생활 실현	1.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 진단표의 고도화 및 매뉴얼화</li> <li>• (콘텐츠) 상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속</li> <li>• (소득) 다층소득보장체계 내실화</li> <li>• (고용)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조성</li> </ul>
목표 전세대 노후준비 참여 제고	2.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체계)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확산</li> <li>• (인력)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역량 관리</li> <li>• (IT)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고도화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li> </ul>
노후준비서비스 품질 제고	3.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대) 노후준비 필요성 홍보 강화</li> <li>• (근로자) 사업장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확대</li> </ul>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에서는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개인 특성별 노후준비 상담·교육 콘텐츠 재정비 및 보급 확대, 국민연금, 사적 연구 등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와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등을 추진

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개편 준비,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 및 역량관리 강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 핵심과제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에서는 노후준비 대상자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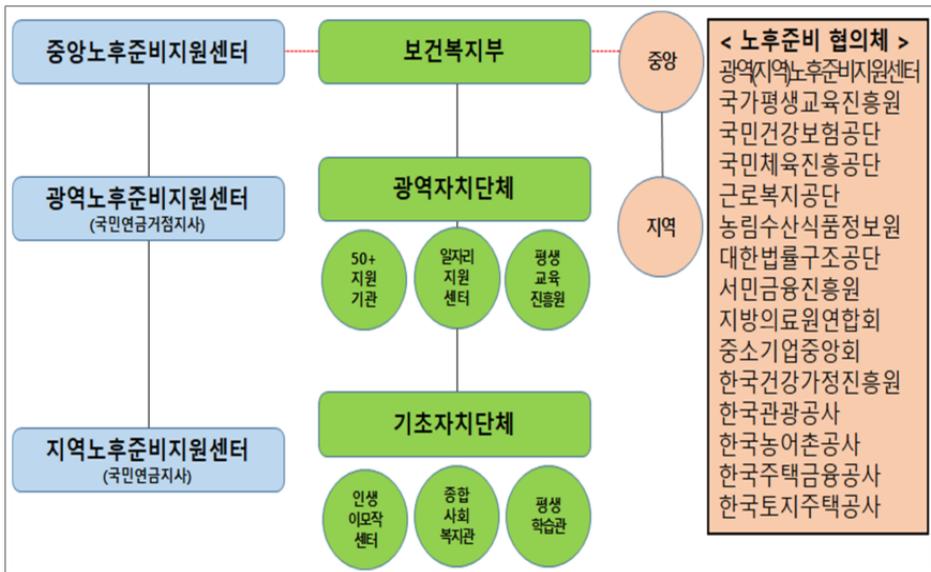
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후준비이다. 노인 인구와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노후준비 기본계획은 국민이 자기를 스스로 돌보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정책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필요성이 큰 영역의 정책 공백을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로 중앙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50+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원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노후준비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상담인력 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별로 국민연금지역본부에 노후준비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도 진행한다.

[그림 3-2]에 나타나 있듯이 노후준비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달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노후준비서비스의 핵심이 연금준비, 부채관리, 보험상식 등 재무설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종합진단 서비스에서는 재무, 건강, 여가활동, 대인관계로 영역을 나누어 현재 상태를 진단해주는데, 실제 센터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영역은 재무설계에 있다. 즉, 건강, 여가활동, 대인관계에 관련된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노후준비 기본계획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협의체 공동 협력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50년까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전국에 50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준비 협의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포함하고 있는 바, 가족센터를 통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본계획에서 서비스 내용 중 가족상담·교육은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및 교육 이용자 수와 이용건수를 지표화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가원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2 | 노후준비지원센터 전달체계



출처: 제2차 노후준비에 관한 기본계획(2021). 5쪽

## 7) 사회보장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내용과 강조점]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되면, 현재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이 시행 중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라는 목표하에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정책영역별 12대 중점 추진과제에서 9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표 3-7〉 참조).

표 3-7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1. 고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li> <li>• 일자리안정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li> <li>•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li> </ul>
		2.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li> <li>•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li> <li>•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li> </ul>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3.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li> <li>• 필수의료 보장</li> <li>•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li> </ul>
		4.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li> <li>•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li> <li>•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li> </ul>

사회서비스 분야의 3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에서는 노인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발달장애인의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아동 중심의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등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에서는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통합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및 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등을 중점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이 정책의 추진목표이다. 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과제 방향성과 일치한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요양시설 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적정 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급여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등을 세부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본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 관련 내용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사각지대 없이 전 생애주기를 다루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관리의 공공성을 확대해가는 의의가 있다. 특히, 노년기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맞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위해 생활SOC 사업으로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및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여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 직접 제공을 명시하였으며, 2019년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모두 설치할 것을 과제화하였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2023년 현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기본적 정책환경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사회보장정책은 중장기적 안정성이 중요하며, 이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적용이 필수적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고용·교육, 일자리, 소득 등의 영역을 포함하지만, 보건 복지부 산하기관과 인프라를 일차적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의 한계가 있다. 건강이나 돌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은 주도적으로 실행 가능하지만, 교육제도, 일자리 등은 타 부처와의 협력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다. 가족 서비스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있어 협력이 없으면 실행력이 발휘되기 어렵다.

## 2

## 가족 서비스 관련 기관 기능 및 전달체계

## 1) 한국보육진흥원

## [설립 배경 및 기능]

한국보육진흥원은 2009년 설립되어 보육 관련 사업 수행과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이다. ‘보육에 신뢰와 양육에 가치를 더하는 보육·양육정책 선도기관’라는 비전 아래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성장지원, 양육친화 문화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경영’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로 어린이집 평가, 보육교직원 자격증 교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시간제보육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품질관리 전담사업, 공공형어린이집 품질 관리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표 3-8〉 참조).

표 3-8 | 한국보육진흥원 미션 및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미션	국민체감 보육·양육정책 통합 지원을 통해 영유아가 행복한 사회 구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서비스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품질관리체계 고도화</li> <li>보육인프라 확대 및 강화</li> </ul> </li> <li>보육교직원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정서함양</li> <li>보육교직원 성장기반 마련</li> </ul> </li> <li>양육친화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양육역량 강화 교육 지원</li> <li>수요자 맞춤형 양육 서비스 제공</li> </ul> </li> <li>지속가능한 미래지향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지향, 사람중심 기관 운영</li> <li>지속가능한 경영 인프라 구축</li> </ul> </li> </ol>
비전	보육에 신뢰와 양육에 가치를 더하는 보육·양육정책 선도기관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지역 센터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과 양육의 통합 지원'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6월에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종합적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육·양육 프로그램(공동사업) 개발 및 보급, 보육·양육정책 관련 시범사업 실시,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자체평가 지원,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DB구축 및 제공, 통합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관리·운영,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등 보육·양육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 지원 및 통합DB 관리·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전달체계]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2022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중앙지원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경기도는 북부, 남부 각각 설치), 시군구별로는 서울(25개소), 부산(9개소), 대구(2개소), 인천(6개소), 광주(2개소), 대전(2개소), 울산(5개소), 경기(31개소), 강원(3개소), 충청(8개소), 전라(7개소), 경상(11개소), 제주(1개소) 등 총 1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설치율이 높고,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방은 설치율이 낮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사업이 핵심이고, 일부 연구사업을 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 소개 자료 개발이나 교육자료 개발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미인증어린이집 현황 및 관리 방안, 평가인증 통합지표 개선,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 실태 등 정책현안에 대한 이슈분석 보고는 발간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중장기적 전망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부

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으나 가족센터와 일부 사업이 중복된다. 특히 최근에 출생율 제고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전달체계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전달체계 간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아동권리보장원

### [설립 배경 및 기능]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아동정책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사업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권리 관련 기관들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여 현재 아동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아동정책 전문기관이다.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공적 아동보호체계 고도화, 아동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능 강화,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확산, 아동 중심의 지속가능한 아동정책 개발·확산,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강화’등 5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정책 연구·지원, 아동성장·돌봄, 아동보호, 입양, 가정형보호, 아동자립 및 아동권리 증진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표 3-9〉 참조).

아동정책 연구·지원 사업 영역에서 5년 단위로 발표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아동의 관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각종 정책영향평가 수행 및 지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지원, 아동통계DB 구축 및 운영 등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

계돌봄센터,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 운영지원 및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보호, 입양, 가정형보호, 아동자립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정한 출발을 위한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9 | 아동권리보장원 미션 및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p>미션</p> <p>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정한 출발을 위한 공적 아동보호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확대 및 실종 아동예방지원 강화</li> <li>• 가정형보호제도 활성화</li> <li>• 지역 아동보호서비스 안정화</li> </ul> </li> <li>2. 아동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돌봄서비스 품질제고</li> <li>•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강화</li> <li>•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기능 강화</li> </ul> </li> </ol>
<p>비전</p> <p>아동과 함께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 기관이 되겠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주도의 권리실현을 위한 환경조성</li> <li>•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li> <li>• 아동분야 네트워크 강화</li> </ul> </li> <li>4. 아동 중심의 지속가능한 아동정책 개발·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반 아동정책 수립지원·이행 지원 강화</li> <li>•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 및 현안 대응 강화</li> <li>• 신뢰가능한 조사, 통계DB구축</li> </ul> </li> <li>5.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인권경영 기반 책임경영 이행</li> <li>•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관경영강화</li> <li>•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구현</li> </ul> </li> </ol>

### [전달체계]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

권리 관련 기관들이 통합된 기관이라 다양한 사업 전달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과 관련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입양기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사업을 지원한다.

가정위탁센터는 시도별 1개소(경기도는 남부, 북부 각각 위치)로 총 18개소가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별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총 88개소가 있으며, 자립지원기관은 시도별로 1개소(경기도는 2개소)로 총 18개소, 입양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지부나 지역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18개소,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시도별로 1개소(경기도는 2개소)로 총 18개소(2021년 기준 센터는 총 4,295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의 시도지원단 없이 총 926개소(2023.3월말 기준)가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기획조정본부, 아동권리본부, 아동보호본부, 아동학대예방본부 등 4개 본부와 아동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사업본부는 지역사회 아동돌봄, 입양,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2019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아동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아동권리보장원 정책연구 중장기 발전방안: 아동연구 현황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0년 총 39개 연구과제가 추진되었다. 본부별로 연구가 추진되어, 아동권리본부 11건, 아동보호본부 13건, 아동학대예방본부 5건, 아동정책평가센터 10건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기획조정본부 2건, 아동권리본부 6건, 아동보호본부 10건, 아동학대예방본부 3건, 아동정책평가센터 25건, 대회협력홍보팀 1건 등 총 47건의 연구가 수행되어, 아동정책평가센터의 연구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자체 정리한 연구 주제와 내용을 보면 주로 아동정책의 실행, 평가,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개발, 제도 개선안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실태조사 역시 보호아동, 실종아동 등 구체적 정책 대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체 분석한 연구 동향의 시사점으로 아동통합지원서비스와 아동권리 전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과 차별화된 연구 대상 및 주제를 조율하여 수행하고,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와 서비스 개발은 지역의 환경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한 연구 주제와 결과를 볼 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거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별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입양 아동수는 2013년 922명(국내 입양 686명, 국외 입양 236명)에서 2022년에는 324명(국내 입양 182명, 국외 입양 14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2016년부터 이미 감소세가 뚜렷하여 다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정위탁 아동도 2010년 16,414명에서 2021년에는 9,023명으로 감소하였는데(KOSIS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각년도), 인구구조 변화 때문인지 입양특례법 개정 등 다른 환경적 변화 때문인지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는 찾기 어려웠다.

### 3) 중앙사회서비스원

#### [설립 배경 및 기능]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을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품질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향상’,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및 긴급돌봄 등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 등 민간지원 강화를 통한 ‘돌봄 공공성 및 역량 강화’,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자원개발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지원·공급자 다변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등 4대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 진흥 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기간이 길지 않으나,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국가정책 지침에 따라 2019년에서 2023년까지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원과 업무성과 평가 등 지역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3년의 목표는 '사회서비스 혁신 인프라 구축'이며, 주로 사회서비스 혁신 TF운영,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사회서비스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사회서비스 투자상담 컨설팅, 네트워크 관리, 조사와 연구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의 목표는 '사회서비스 자생력,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할 확대, 규모화로 '복지-경제 선순환'구조 강화 및 민간사회서비스 기관의 사회적 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2025년의 목표는 '사회서비스 시장 건전성, 안정성, 역동성 강화 지원'이(〈표 3-11〉 참조).

표 3-10 | 중앙사회서비스원 미션 및 정책과제

비전/목표		정책과제
미션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견인	2022년 - 수요·공급 확대/ 혁신사업 수행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품질관리</li> <li>•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li> <li>• 이용자권익보호 및 종사자 처우 개선</li> <li>• 사회서비스 자원관리 및 정책지원</li> </ul>
		2023년 - 사회서비스 혁신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혁신TF운영,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li> <li>• 사회서비스 상생협력 활성화, 소셜프랜차이즈</li> <li>• 사회서비스 투자상담 컨설팅, 네트워크 관리, 조사·연구</li> </ul>
비전	새로운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과 민관 상생협력으로 혁신 선도	2024년 - 사회서비스 자생력,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할 확대, 규모화로 '복지-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li> <li>• 민간사회서비스 기관의 사회적 기업 진입장벽 완화</li> <li>• 품질평가 대상사업 확대</li> </ul>
		2025년 - 사회서비스 시장 건전성, 안정성, 역동성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모니터링 및 사회서비스 진흥 역점과제 지속 발굴·개발</li> </ul>

## [전달체계]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경영지원실, 사회서비스혁신본부, 사회서비스품질본부

와 사회서비스진흥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진흥기획단은 진흥기획팀과 연구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기본모델 구성,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사업 성과 지표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등 구체적인 사업 개발과 평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원의 전달체계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현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경상북도 설립예정)이 있으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위탁 운영하고, 그 외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과 성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발달장애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간보호센터, 공립요양원, 어린이집, 마을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위탁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돌봄인력풀 구성 및 관리, 대체인력 지원, 연구 및 교육,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위주로 사업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합한 사회서비스원도 있는데, 2020년 설립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하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종합재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학대피해아동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위탁 운영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 연구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울산시사회서비스원도 2015년 설립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이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다가 2023년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이 기관에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시립노인요양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울산가족문화센터,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시니어초등학교 등을 수탁 운영하는 동시에, 여성가족정책본부를 통해 복지가족정책,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도 2019년 설립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종합재가센터, 노숙인재활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다가 2022년 평생교

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합하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 서비스원으로 개칭하고 새로 출범하였다. 조직도를 보면, 기존의 수탁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실, 사회서비스실 외에 정책연구실이 설치되어 여성정책, 가족정책,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3-11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황

시도 사회서비스원	수탁 사업	시도 사회서비스원	수탁 사업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12개소, 국공립 9개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14개소, 정부위탁사업 11개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12개소, 정부위탁사업 4개
대구광역시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6개소, 정부위탁사업 6개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3개소, 국공립 9개소, 정부위탁사업 5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10개소, 정부위탁사업 7개
울산광역시복지가족 진흥사회서비스원	국공립 1개소, 정부위탁사업 3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8개소, 정부위탁사업 6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6개소, 정부위탁사업 8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7개소, 정부위탁사업 3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15개소, 정부위탁사업 5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2개소, 정부위탁사업 7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9개소, 정부위탁사업 6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2개소, 국공립 8개소, 정부위탁사업 3개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2023.10.7.기준)



## 제4장

# 가족센터 조사 결과

1. 센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센터장 FGI 결과



## 제4장 가족센터 조사 결과

### 1 센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 응답 가족센터의 특성

응답한 센터는 수도권에서 35개소, 비수도권에서 70개소로 총 105개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합 가족센터였고, 생활SOC사업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16개소, 현재 생활SOC사업 공사중인 경우가 35개소이며, 생활SOC사업에 해당없는 경우가 54개소였다. 센터의 83%는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2011~2015년 사이에 설립된 곳이 14개소, 2016년 이후 설립된 곳은 4개소였다. 응답자의 센터 경력은 5년 이하가 29%, 6~10년 이하가 34%, 11~15년 이하가 30%, 16년 이상이 약 8%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볼 때, 센터 유형과 생활SOC 유형에는 차이가 없었고, 수도권은 모두 2010년 이전에 설립된 반면, 비수도권 가족센터는 2011년 이후에 설립된 센터가 25.7%였다. 본 설문조사는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이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응답자의 센터 경력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6년 이상 장기 경력자가 수도권에 더 많았다.

표 4-1 | 응답센터의 특성

(단위: 개, %)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chi^2$	총계(n=10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유형	통합	32	91.43	64	91.43	.90	96	91.43
	건가	2	5.71	2	2.86		4	3.81
	다가	1	2.86	4	5.71		5	4.76
SOC유형	SOC사용 중	4	11.43	12	17.14	6.56	16	15.24
	SOC공사 중	11	31.43	24	34.29		35	33.33
	동일 규모	3	8.57	0	0.00		3	2.86
	해당없음	17	48.57	34	48.57		51	48.57
설립년도	2004~2010년	35	100.00	52	74.29	10.86*	87	82.86
	2011~2015년	0	0.00	14	20.00		14	13.33
	2016~2020년	0	0.00	4	5.71		4	3.81
응답자 센터 경력	1~5년 이하	10	28.57	20	28.57	7.86*	30	28.57
	6~10년 이하	12	34.29	24	34.29		36	34.29
	11~15년 이하	7	20.00	24	34.29		31	29.52
	16~20년 이하	6	17.14	2	2.86		8	7.62

주: \* p&lt;.05 \*\* p&lt;.01 \*\*\* p&lt;.001

## 2) 현재 가족센터 이용자의 특성

현재 센터 이용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최근 1~2년 동안 센터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아이돌봄서비스 제외)을 고려할 때 서비스 대상이 가장 많이 되는 가족 유형과 가장 적게 되거나 안되는 가족 유형을 1순위, 2순위로 조사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이 조사는 응답자가 센터의 성과보고서 등을 참조해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했을 가능성도 높다.

1순위로 서비스 대상이 가장 많이 되는 가족 유형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족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각각 약 50%를 차지하였다. 소수 응답으로 성인자녀 가족이나 노년 1인 가구를 가장 많이 대상으로 한다는 센터도 있었다. 2순위에서도 영유아기 가족과 학령기 가족이 각각 약 4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5.7%)이었다.

서비스 대상이 적게 되는 대상 1순위로는 노년 1인 가구(22.9%), 비혼 청

년(18.1%), 성인자녀 가족(16.2%), 노년기 부부(15.2%)였고, 2순위에서도 노년기 부부(28.6%), 비혼 청년(17.1%), 노년 1인 가구(14.3%)로 나타나 가족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비혼자나 노년기 가족이 가족센터 사업의 주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볼 때, 영유아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주 서비스 대상이라는 점에서, 노년기 1인 가구나 부부가족, 비혼 등이 서비스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도권 센터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더 많았고, 비수도권 센터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4-2 | 최다 및 최소 대상 가족 유형

(단위: 개, %)

최다	유형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chi^2$	총계(n=10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순위	영유아기 가족	21	60.00	31	44.29	3.12	52	49.52
	학령기 가족	13	37.14	37	52.86		50	47.62
	청소년기 가족	0	0.00	0	0.00		0	0.00
	성인자녀 가족	1	2.86	1	1.43		2	1.90
	청년 1인 가구	0	0.00	0	0.00		0	0.00
	중장년 1인 가구	0	0.00	0	0.00		0	0.00
	노년 1인 가구	0	0.00	1	1.43		1	0.95
	비혼 청년	0	0.00	0	0.00		0	0.00
	노년기 부부	0	0.00	0	0.00		0	0.00
	기타	0	0.00	0	0.00		0	0.00
2순위	영유아기 가족	11	31.43	34	48.57	7.75	45	42.86
	학령기 가족	18	51.43	27	38.57		45	42.86
	청소년기 가족	2	5.71	4	5.71		6	5.71
	성인자녀 가족	0	0.00	0	0.00		0	0.00
	청년 1인 가구	2	5.71	0	0.00		2	1.90
	중장년 1인 가구	0	0.00	1	1.43		1	0.95
	노년 1인 가구	1	2.86	1	1.43		2	1.90
	비혼 청년	0	0.00	0	0.00		0	0.00
	노년기 부부	0	0.00	1	0.00		1	0.95
	기타	1	2.86	2	2.86		3	2.86

최소								
1순위	영유아기 가족	0	0.00	0	0.00	6.32	0	0.00
	학령기 가족	0	0.00	0	0.00		0	0.00
	청소년기 가족	2	5.71	6	8.57		8	7.62
	성인자녀 가족	6	17.14	11	15.71		17	16.19
	청년 1인 가구	2	5.71	8	11.43		10	9.52
	중장년 1인 가구	1	2.86	9	12.86		10	9.52
	노년 1인 가구	9	25.71	15	21.43		24	22.86
	비혼 청년	7	20.00	12	17.14		19	18.10
	노년기 부부	8	22.86	8	11.43		16	15.24
	기타	0	0.00	1	1.43		1	0.95
2순위	영유아기 가족	0	0.00	0	0.00	4.25	0	0.00
	학령기 가족	0	0.00	0	0.00		0	0.00
	청소년기 가족	2	5.71	5	7.14		7	6.67
	성인자녀 가족	4	11.43	6	8.57		10	9.52
	청년 1인 가구	4	11.43	7	10.00		11	10.48
	중장년 1인 가구	2	5.71	12	17.14		14	13.33
	노년 1인 가구	4	11.43	11	15.71		15	14.29
	비혼 청년	6	17.14	12	17.14		18	17.14
	노년기 부부	13	37.14	17	24.29		30	28.57
	기타	0	0.00	0	0.00		0	0.00

최근 1~2년 동안 센터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아이돌봄서비스 제외)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인구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개인 단위 프로그램은 개인으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은 성인 중심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더 많은 경우가 100%였고, 연령대로는 30대가 54.3%, 40대가 37.1%로 합치면 91.4%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다. 결혼지위도 한 센터만 제외하면 모든 센터가 기혼자가 더 많다고 하였다.

자녀 연령대도 미취학기가 49.5%, 학령기가 46.7%를 차지하여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고, 개인 단위나 부부 단위 참여보다는 부모-자녀 단위 참여가 89.5%로 가장 많았다. 응답한 센터 중 61.9%는 참여자의 주 이용층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였고, 38.1%는 내국인가족이라고 하였다. 가족센터가 통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 이용자가 다문화가족인 센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더 많고 비수도권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더 많다는 점, 개인 단위 참여가 약간 더 많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참여 비율이 더 많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3 | 센터 이용자 특성

(단위: 개, %)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chi^2$	총계(n=10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더 많은	0	0.00	0	0.00	0.00	0	0.00
	여성 더 많은	35	100.00	70	100.00		105	100.00
연령대	10대 이하	1	2.86	1	1.43	3.12	2	1.90
	20대	0	0.00	3	4.29		3	2.86
	30대	19	54.29	38	54.29		57	54.29
	40대	14	40.00	25	35.71		39	37.14
	50대	1	2.86	1	1.43		2	1.90
	60대 이상	0	0.00	2	2.86		2	1.90
결혼지위	미(비)혼	1	2.86	0	0.00	2.02	1	0.95
	기혼	34	97.14	70	100.00		104	99.05
자녀	없음	0	0.00	0	0.00	5.89	0	0.00
연령대	미취학	23	65.71	29	41.43		52	49.52
	초등학생	11	31.43	38	54.29		49	46.67
	중고등학생	0	0.00	1	1.43		1	0.95
	성인	1	2.86	2	2.86		3	2.86
가구유형	개인 단위	0	0.00	6	8.57		3.74	6
	부모 단위	1	2.86	4	5.71	5		4.76
	부모+자녀 단위	34	97.14	60	85.71	94		89.52
다문화	내국인 가족	15	42.86	25	35.71	0.50	40	38.10
여부	다문화가족	20	57.14	45	64.29		65	61.90
	외국인가족	0	0.00	0	0.00		0	0.00

### 3)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한 체감도

최근 5년 동안 센터가 있는 지역의 인구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주민 수, 18세 이하 아동 인구, 청년 인구, 중장년 인구, 노년 인구, 외국인이나 다문화 인구,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등 총 9개 영역의 변화를, 많이 감소하였다(1), 조금 감소하였다(2), 변화 없다(3), 조금 증가하였다(4), 많이 증가하였다(5)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주민 수는 조금 감소했다고 한 지역이 51.4%, 많이 감소했다고 한 지역이 15.2%로 응답자의 약 66.6%는 인구감소를 체감하고 있었다. 반면, 인구가 조금 증가(15.2%)하거나 많이 증가한 지역(7.6%)도 있었다.

18세 이하 아동은 조금 감소(51.4%)했거나 많이 감소(21.9%)했다고 체감한 지역이 73.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조금 증가(10.5%)했거나 많이 증가(7.6%)한 것으로 체감된 지역도 있었다.

청년 인구에 대해서도 조금 감소(37.1%)했거나 많이 감소(15.2%)한 것으로 체감한 응답자가 52.3%로 약 절반이었고, 조금 증가(23.8%)했거나 많이 증가(3.8%)한 것으로 체감한 사람은 27.6%였으며, 변화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20.0%였다.

중장년 인구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36.2%)로 응답한 경우와 조금 증가했다(35.2%)고 체감한 응답자가 비슷하였다. 조금 감소(22.9%)했다고 한 경우가 그 다음이었다.

노년 인구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했거나(49.5%), 많이 증가(24.8%)했다고 한 경우가 74.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변화없다고 한 응답자는 19.1%였고, 감소했다고 한 경우는 6.7%였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49.5%)했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변화없다고 한 경우 19.1%, 조금 감소한 경우가 18.1%였다. 중장년 1인 가구는 조금 증가했다고 한 경우 50.5%, 변화 없다고 한 경우가 33.3%의 순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노년 1인 가구는 조금 증가했다고 한 경우가 54.3%,

많이 증가했다고 한 경우가 22.9%로 77.2%가 증가를 체감하고 있었다.

〈표 4-5〉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총 주민 수 감소, 청년 인구감소에 대한 체감이 비수도권에서 더 컸고, 중장년인구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중장년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체감은 수도권에서 더 컸다. 아동 인구감소, 노년 인구 증가, 외국인/다문화 인구, 노년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체감도가 비슷하였다.

표 4-4 | 지역 인구변화 체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총 주민 수	많이 감소	16	15.24	2.49 (1.15)	18세 이하 아동 인구	많이 감소	23	21.90	2.30 (1.15)
	조금 감소	54	51.43			조금 감소	54	51.43	
	변화 없음	11	10.48			변화 없음	9	8.57	
	조금 증가	16	15.24			조금 증가	11	10.48	
	많이 증가	8	7.62			많이 증가	8	7.62	
청년 인구	많이 감소	16	15.24	2.64 (1.12)	중장년 인구	많이 감소	1	0.95	3.20 (.88)
	조금 감소	39	37.14			조금 감소	24	22.86	
	변화 없음	21	20.00			변화 없음	38	36.19	
	조금 증가	25	23.81			조금 증가	37	35.24	
	많이 증가	4	3.81			많이 증가	5	4.76	
노년 인구	많이 감소	1	0.95	3.91 (.87)	외국인/다문화 인구	많이 감소	3	2.86	3.34 (1.01)
	조금 감소	6	5.71			조금 감소	24	22.86	
	변화 없음	20	19.05			변화 없음	20	19.05	
	조금 증가	52	49.52			조금 증가	50	47.62	
	많이 증가	26	24.76			많이 증가	8	7.62	
청년 1인 가구	많이 감소	5	4.76	3.39 (1.03)	중장년 1인 가구	많이 감소	3	2.86	3.51 (.83)
	조금 감소	19	18.10			조금 감소	7	6.67	
	변화 없음	20	19.05			변화 없음	35	33.33	
	조금 증가	52	49.52			조금 증가	53	50.48	
	많이 증가	9	8.57			많이 증가	7	6.67	
노년 1인 가구	많이 감소	0	0.00	3.95 (.78)					
	조금 감소	5	4.76						
	변화 없음	19	18.10						
	조금 증가	57	54.29						
	많이 증가	24	22.86						

표 4-5 | 지역 인구변화 체감: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총 주민 수	많이 감소	2	5.71	2.89	(1.23)	14	20.00	2.29	(1.07)	-2.58**
	조금 감소	17	48.57			37	52.86			
	변화 없음	4	11.43			7	10.00			
	조금 증가	7	20.00			9	12.86			
18세 이하 아동 인구	많이 증가	5	14.29	2.40	(1.22)	3	4.29	2.26	(1.13)	-0.60
	조금 증가	6	17.14			17	24.29			
	변화 없음	2	5.71			7	10.00			
	조금 감소	3	8.57			8	11.43			
청년 인구	많이 감소	4	11.43	3.09	(1.12)	4	5.71	2.41	(1.06)	-3.01**
	조금 감소	2	5.71			14	20.00			
	변화 없음	7	20.00			28	40.00			
	조금 증가	12	34.29			14	20.00			
중장년 인구	많이 증가	3	8.57	3.46	(.92)	1	1.43	3.07	(.84)	-2.15*
	조금 증가	0	0.00			18	25.71			
	변화 없음	11	31.43			27	38.57			
	조금 감소	14	40.00			23	32.86			
노년 인구	많이 감소	4	11.43	3.94	(.76)	1	1.43	3.90	(.92)	-0.24
	조금 감소	0	0.00			5	7.14			
	변화 없음	1	2.86			12	17.14			
	조금 증가	8	22.86			34	48.57			
외국인 / 다문화 인구	많이 증가	18	51.43	3.11	(1.30)	18	25.71	3.46	(.81)	1.66
	조금 증가	8	22.86			0	0.00			
	변화 없음	4	11.43			12	17.14			
	조금 감소	10	28.57			16	22.86			
청년 1인 가구	많이 증가	6	17.14	3.80	(.83)	2	2.86	3.19	(1.07)	-2.98**
	조금 증가	0	0.00			5	7.14			
	변화 없음	4	11.43			15	21.43			
	조금 감소	4	11.43			16	22.86			
중장년 1인 가구	조금 증가	22	62.86	3.80	(.68)	30	42.86	3.37	(.87)	-2.55**
	많이 증가	5	14.29			4	5.71			
	조금 감소	0	0.00			3	4.29			
	변화 없음	0	0.00			7	10.00			
노년 1인 가구	조금 증가	18	51.43	3.97	(.71)	35	50.00	3.94	(.81)	-0.18
	많이 증가	5	14.29			2	2.86			
	변화 없음	9	25.71			0	0.00			
	조금 감소	0	0.00			5	7.14			
총 주민 수	많이 증가	8	22.86	2.89	(1.23)	16	22.86	2.29	(1.07)	-2.58**
	조금 증가	7	20.00			37	52.86			
	변화 없음	4	11.43			7	10.00			
	조금 감소	17	48.57			9	12.86			

주: \* p<.05 \*\* p<.01

#### 4) 인구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인구변화가 센터의 사업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 모집, 사업의 요구, 지역사회 협력 등 총 13개 영역에서 질문하였고,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변화 없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범위로 조사하였다.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에 대해서는 어려워진 편이다(58.1%), 매우 어려워졌다(15.2%)로 지역의 인구변화로 인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고 한 응답이 73.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서비스 제공대상에 대해서도 대상이 많아진 편(52.4%)이거나, 매우 많아졌다(20.0%)는 응답을 합치면 72.4%로 역시 열 명 중 일곱 명이 서비스 대상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의 욕구도 다양해진 편이다(55.2%), 매우 다양해졌다(38.1%)를 합치면 93.3%가 욕구 다양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표 4-6 | 인구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대상자 모집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76	(.8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	12.38		
	변화 없다	15	14.29		
	그런 편이다	61	58.10		
	매우 그렇다	16	15.24		
서비스 제공대상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78	(.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	14.29		
	변화 없다	14	13.33		
	그런 편이다	55	52.38		
	매우 그렇다	21	20.00		
참여자의 욕구 다양해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30	(.6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90		
	변화 없다	5	4.76		
	그런 편이다	58	55.24		
	매우 그렇다	40	38.10		
전문강사 찾기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2	1.90	3.72	(1.03)
	그렇지 않은 편	16	15.24		
	변화 없다	14	13.33		
	그런 편이다	50	47.62		
	매우 그렇다	23	21.90		

실무자 재교육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57	(.9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	18.10		
	변화 없다	21	20.00		
	그런 편이다	51	48.57		
	매우 그렇다	14	13.33		
사업종류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47	(.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0	0.00		
	변화 없다	3	2.86		
	그런 편이다	50	47.62		
	매우 그렇다	52	49.52		
타 기관과 연계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7	6.67	2.70	(.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	40.00		
	변화 없다	35	33.33		
	그런 편이다	18	17.14		
	매우 그렇다	3	2.86		
지역 주민 리더 발굴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63	(.78)
	그렇지 않은 편이다	9	8.57		
	변화 없다	31	29.52		
	그런 편이다	55	52.38		
	매우 그렇다	10	9.52		
서비스 사각지대 확대되었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76	(.73)
	그렇지 않은 편이다	9	8.57		
	변화 없다	16	15.24		
	그런 편이다	71	67.62		
	매우 그렇다	9	8.57		
방문 서비스 요구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96	(.77)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4.76		
	변화 없다	18	17.14		
	그런 편이다	58	55.24		
	매우 그렇다	24	22.86		
공간 활용 사업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3	2.86	3.23	(1.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	22.86		
	변화 없다	34	32.38		
	그런 편이다	34	32.38		
	매우 그렇다	10	9.52		
비대면 서비스의 요구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2	1.90	3.63	(.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	12.38		
	변화 없다	24	22.86		
	그런 편이다	49	46.67		
	매우 그렇다	17	16.19		

관할 지방 정부의 요구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12	(.6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0.95		
	변화 없다	12	11.43		
	그런 편이다	65	61.90		
	매우 그렇다	27	25.71		

사업 운영 측면에서 전문강사 찾기의 어려움에 대해, 어려워진 편(47.6%)이거나 매우 어려워졌다(21.9%)를 합치면 69.5%로 많은 센터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실무자 재교육에 대해서는 어려워진 편(48.6%)이라고 응답한 센터가 가장 많았지만, 변화 없음(20.8%)이나 그렇지 않은 편(18.1%)이라고 응답한 센터도 적지 않았다.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매우 많아졌다(49.5%)거나 많아진 편(47.6%)이라고 응답한 센터가 대다수였다.

지역사회 협력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40.0%)거나 변화없다(33.3%)고 한 응답이 많아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리더 발굴에 대해서는 어려워진 편(52.4%)이라고 한 센터가 가장 많았으나, 변화 없다(29.5%)고 한 센터도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는 않았다.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확대된 편(67.6%)이라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우 확대되었다(8.6%)를 합치면 응답센터의 76.2%가 서비스 사각지대의 확대를 체감하고 있었다. 찾아가는 서비스(방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많아진 편(55.2%)이거나 매우 많아졌다(22.9%)고 체감하는 응답자를 합치면 78.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사업 방식에 관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소통공간 등 공간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33.0%)는 응답과 어려워진 편(32.1%)이라는 응답이 비슷하였고, 그렇지 않은 편(22.6%)이라고 한 응답자도 많아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비대면 서비스의 요구에 대해서는 많아진 편(46.7%)이거나 매우 많아졌다(16.2%)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변화 없다(22.9%)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요구가 많아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많아진 편(61.9%)이거나 매우 많아졌다(25.7%)고 한 응답을 합치면 87.6%의 센터에서

지방정부의 요구가 많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평균 점수로 보았을 때, 가장 변화가 큰 것은 사업 종류가 많아짐(4.47점), 참여자의 욕구 다양해짐(4.30점), 지방정부의 요구 많아짐(4.12점), 방문 서비스 요구 많아짐(3.96점)의 순서였고, 가장 적은 것은 타기관과의 연계 어려워짐(2.70점), 공간 활용 사업 어려워짐(3.23점), 실무자 재교육 어려워짐(3.57점)의 순이었다.

〈표 4-7〉과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대상자 모집 어려움, 지역주민 리더 발굴 어려움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센터의 점수가 약간 더 높고, 참여자 욕구 다양해짐, 실무자 재교육 어려움, 사업 종류 많아짐, 서비스 사각지대 확대됨, 방문서비스 요구 많아짐, 공간활용사업 어려워짐, 비대면 서비스 요구 많아짐, 관할 지방정부 요구 많아짐 등의 측면에서는 수도권 센터의 점수가 약간 더 높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7 | 인구변화가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대상자 모집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60	(.91)	0	0.00	3.84	(.83)	1.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7	20.00			6	8.57			
	변화 없다	3	8.57			12	17.14			
	그런 편이다	22	62.86			39	55.71			
	매우 그렇다	3	8.57			13	18.57			
서비스 제공대상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77	(.94)	0	0.00	3.79	(.93)	0.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14.29			10	14.29			
	변화 없다	5	14.29			9	12.86			
	그런 편이다	18	51.43			37	52.86			
	매우 그렇다	7	20.00			14	20.00			
참여자 욕구 다양해짐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37	(.55)	0	0.00	4.26	(.70)	-0.85
	그렇지 않은 편이다	0	0.00			2	2.86			
	변화 없다	1	2.86			4	5.71			
	그런 편이다	20	57.14			38	54.29			
	매우 그렇다	14	40.00			26	37.14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74	(.98)	2	2.86	3.71	(1.07)	-0.13
전문강사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17.14			10	14.29			
찾기	변화 없다	4	11.43			10	14.29			
어려워짐	그런 편이다	18	51.43			32	45.71			
	매우 그렇다	7	20.00			16	22.86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63	(.94)	0	0.00	3.54	(.94)	-0.44
실무자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17.14			13	18.57			
재교육	변화 없다	6	17.14			15	21.43			
어려워졌음	그런 편이다	18	51.43			33	47.14			
	매우 그렇다	5	14.29			9	12.86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57	(.50)	0	0.00	4.41	(.58)	-1.37
사업종류	그렇지 않은 편이다	0	0.00			0	0.00			
많아졌음	변화 없다	0	0.00			3	4.29			
	그런 편이다	15	42.86			35	50.00			
	매우 그렇다	20	57.14			32	45.71			
	전혀 그렇지 않다	4	11.43	2.57	(1.04)	3	4.29	2.57	(1.04)	0.96
타 기관과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	45.71			26	37.14			
연계	변화 없다	7	20.00			28	40.00			
어려워졌음	그런 편이다	7	20.00			11	15.71			
	매우 그렇다	1	2.86			2	2.86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54	(.82)	0	0.00	3.67	(.76)	0.80
지역주민리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11.43			5	7.14			
더 발굴	변화 없다	11	31.43			20	28.57			
어려워졌음	그런 편이다	17	48.57			38	54.29			
	매우 그렇다	3	8.57			7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80	(.76)	0	0.00	3.74	(.72)	-0.38
서비스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8.57			6	8.57			
사각지대	변화 없다	5	14.29			11	15.71			
확대됨	그런 편이다	23	65.71			48	68.57			
	매우 그렇다	4	11.43			5	7.14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03	(.79)	0	0.00	3.93	(.77)	-0.62
방문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71			3	4.29			
서비스	변화 없다	4	11.43			14	20.00			
요구	그런 편이다	20	57.14			38	54.29			
많아졌음	매우 그렇다	9	25.71			15	21.43			

	전혀 그렇지 않다	1	2.86	3.34 (1.14)	2	2.86	3.17 (.93)	-0.82
공간 활용	그렇지 않은 편이다	9	25.71		15	21.43		
사업	변화 없다	8	22.86		26	37.14		
어려워졌음	그런 편이다	11	31.43		23	32.86		
	매우 그렇다	6	17.14		4	5.71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83 (.98)	2	2.86	3.53 (.94)	-1.51
비대면 서비스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14.29		8	11.43		
요구	변화 없다	5	14.29		19	27.14		
많아졌음	그런 편이다	16	45.71		33	47.14		
	매우 그렇다	9	25.71		8	11.43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23 (.73)	0	0.00	4.07 (.57)	-1.21
관할 지방 정부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2.86		0	0.00		
요구	변화 없다	3	8.57		9	12.86		
많아졌음	그런 편이다	18	51.43		47	67.14		
	매우 그렇다	13	37.14		14	20.00		

## 5) 지역 인프라의 변화

최근 5년 동안 지역의 인구변화로 인해 지역 내 인프라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초·등돌봄 기관, 아동·청소년 기관, 청년 관련 기관, 중장년 관련 기관, 노인 대상 기관, 외국인 대상 기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 문화시설, 공용부역 등 공용공간의 증감을 질문하였다.

〈표 4-8〉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을 먼저 살펴보면, 어린이집·유치원은 조금 감소(62.9%)한 경우와 많이 감소(18.1%)한 경우를 합치면 81.0%가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초등학교는 변화 없음(47.6%)이 가장 많았고, 조금 감소(40.0%)한 경우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출생을 감소로 어린이집·유치원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폐원하게 되고,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바로 폐교로 이어지는 않기 때문에 변화가 즉각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 역시 변화 없음(67.6%)과 조금 감소(22.9%)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최근 5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돌봄 기관은 조금 증가(57.1%)했거나 많이 증가(16.2%)했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센터 등 그 외

아동·청소년 기관은 변화 없거나(58.1%), 조금 증가(38.1%)했다고 한 응답자가 많았다. 아동·청소년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인프라는 변화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8 | 지역 인프라의 수량 변화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감소	19	18.10	2.10 (.83)	초등 학교	많이 감소	1	0.95	2.72 (.75)
	조금 감소	66	62.86			조금 감소	42	40.00	
	변화 없음	14	13.33			변화 없음	50	47.62	
	조금 증가	3	2.86			조금 증가	9	8.57	
	많이 증가	3	2.86			많이 증가	3	2.86	
중고등 학교	많이 감소	0	0.00	2.89 (.61)	초등 돌봄 기관	많이 감소	0	0.00	3.86 (.73)
	조금 감소	24	22.86			조금 감소	4	3.81	
	변화 없음	71	67.62			변화 없음	24	22.86	
	조금 증가	8	7.62			조금 증가	60	57.14	
	많이 증가	2	1.90			많이 증가	17	16.19	
아동 /청소년 기관	많이 감소	0	0.00	3.40 (.57)	청년 기관	많이 감소	1	0.95	3.48 (.65)
	조금 감소	2	1.90			조금 감소	3	2.86	
	변화 없음	61	58.10			변화 없음	49	46.67	
	조금 증가	40	38.10			조금 증가	49	46.67	
	많이 증가	2	1.90			많이 증가	3	2.86	
중장년 기관	많이 감소	0	0.00	3.24 (.49)	노인 기관	많이 감소	0	0.00	3.54 (.64)
	조금 감소	2	1.90			조금 감소	0	0.00	
	변화 없음	77	73.33			변화 없음	56	53.33	
	조금 증가	25	23.81			조금 증가	41	39.05	
	많이 증가	1	0.95			많이 증가	8	7.62	
외국인 기관	많이 감소	0	0.00	3.17 (.40)	정신 건강 기관	많이 감소	0	0.00	3.31 (.49)
	조금 감소	1	0.95			조금 감소	0	0.00	
	변화 없음	85	80.95			변화 없음	73	69.52	
	조금 증가	19	18.10			조금 증가	31	29.52	
	많이 증가	0	0.00			많이 증가	1	0.95	
문화 시설	많이 감소	1	0.95	3.58 (.60)	공용 공간	많이 감소	1	0.95	3.51 (.62)
	조금 감소	1	0.95			조금 감소	2	1.90	
	변화 없음	41	39.05			변화 없음	46	43.81	
	조금 증가	60	57.14			조금 증가	54	51.43	
	많이 증가	2	1.90			많이 증가	2	1.90	

청년센터 등 청년 대상 기관은 변화없거나(46.7%), 조금 증가했다(46.7%)고 한 응답이 비슷하였고, 중장년 기관은 변화 없다(73.3%)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인 대상 기관은 변화 없거나(53.3%) 조금 증가했다(39.1%)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대상의 기관은 변화 없음(81.0%)이 가장 많았고 조

금 증가했다(18.1%)고 응답하여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기관은 변화 없다(69.5%), 조금 증가했다(29.5%)로 대부분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는 곳이 많았다. 문화시설은 조금 증가했다(57.1%), 변화 없다(39.1)%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용부엌, 공용오피스 등 공용공간도 조금 증가했다(51.4%), 변화 없다(43.8%)로 조금 증가한 곳이 많았다.

변화의 방향을 볼 때, 감소한 추세가 드러난 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였고, 증가한 추세가 드러난 기관은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기관, 청년 기관, 중장년 기관, 노인기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 문화시설, 공용공간이었다.

〈표 4-9〉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할 때, 어린이집/유치원 감소, 아동·청소년기관 증가, 청년 기관 증가, 노인기관 및 외국인기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증가를 체감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수 감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체감도가 더 높았고, 초·중·고등학교 증가, 중장년기관의 증가, 공용공간의 증가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체감도가 더 높았다.

표 4-9 | 지역 인프라의 수량 변화: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어린이 집/ 유치원	많이 감소	6	17.14	2.17	(.98)	13	18.57	2.06	(.74)	-0.67
	조금 감소	23	65.71			43	61.43			
	변화 없음	2	5.71			12	17.14			
	조금 증가	2	5.71			1	1.43			
	많이 증가	2	5.71			1	1.43			
초등 학교	많이 감소	0	0.00	3.00	(.77)	1	1.43	2.59	(.71)	-2.74**
	조금 감소	8	22.86			34	48.57			
	변화 없음	21	60.00			29	41.43			
	조금 증가	4	11.43			5	7.14			
	많이 증가	2	5.71			1	1.43			
중고등 학교	많이 감소	0	0.00	3.09	(.56)	0	0.00	2.79	(.61)	-2.43**
	조금 감소	3	8.57			21	30.00			
	변화 없음	27	77.14			44	62.86			
	조금 증가	4	11.43			4	5.71			
	많이 증가	1	2.86			1	1.43			

초등 돌봄 기관	많이	감소	0	0.00	4.20	(.63)	0	0.00	3.69	(.71)	-3.61***
	조금	감소	0	0.00			4	5.71			
	변화	없음	4	11.43			20	28.57			
	조금	증가	20	57.14			40	57.14			
	많이	증가	11	31.43			6	8.57			
아동 / 청소년 기관	많이	감소	0	0.00	3.49	(.61)	0	0.00	3.36	(.54)	-1.10
	조금	감소	0	0.00			2	2.86			
	변화	없음	20	57.14			41	58.57			
	조금	증가	13	37.14			27	38.57			
	많이	증가	2	5.71			0	0.00			
청년 기관	많이	감소	0	0.00	3.57	(.70)	1	1.43	3.43	(.63)	-1.06
	조금	감소	1	2.86			2	2.86			
	변화	없음	16	45.71			33	47.14			
	조금	증가	15	42.86			34	48.57			
	많이	증가	3	8.57			0	0.00			
중장년 기관	많이	감소	0	0.00	3.49	(.61)	0	0.00	3.11	(.36)	-3.90***
	조금	감소	1	2.86			1	1.43			
	변화	없음	17	48.57			60	85.71			
	조금	증가	16	45.71			9	12.86			
	많이	증가	1	2.86			0	0.00			
노인 기관	많이	감소	0	0.00	3.54	(.70)	0	0.00	3.54	(.61)	0.00
	조금	감소	0	0.00			0	0.00			
	변화	없음	20	57.14			36	51.43			
	조금	증가	11	31.43			30	42.86			
	많이	증가	4	11.43			4	5.71			
외국인 기관	많이	감소	0	0.00	3.17	(.38)	0	0.00	3.17	(.42)	0.00
	조금	감소	0	0.00			1	1.43			
	변화	없음	29	82.86			56	80.00			
	조금	증가	6	17.14			13	18.57			
	많이	증가	0	0.00			0	0.00			
정신 건강 기관	많이	감소	0	0.00	3.31	(.53)	0	0.00	3.31	(.47)	0.00
	조금	감소	0	0.00			0	0.00			
	변화	없음	25	71.43			48	68.57			
	조금	증가	9	25.71			22	31.43			
	많이	증가	1	2.86			0	0.00			
문화 시설	많이	감소	0	0.00	3.63	(.65)	1	1.43	3.56	(.58)	-0.57
	조금	감소	1	2.86			0	0.00			
	변화	없음	13	37.14			28	40.00			
	조금	증가	19	54.29			41	58.57			
	많이	증가	2	5.71			0	0.00			
공용 공간	많이	감소	0	0.00	3.71	(.52)	1	1.43	3.41	(.65)	-2.38**
	조금	감소	0	0.00			2	2.86			
	변화	없음	11	31.43			35	50.00			
	조금	증가	23	65.71			31	44.29			
	많이	증가	1	2.86			1	1.43			

주: \* p<.05 \*\* p<.01 \*\*\* p<.001

## 6) 지역 인프라 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지역 내 인프라의 수량 변화가 센터의 사업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1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변화 없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범위로 응답을 조사하였다.

〈표 4-10〉과 같이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에 대해서는 인프라 변화로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고 한 응답이 75.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서비스 제공대상에 대해서도 대상이 많아진 편(60.0%)이거나, 매우 많아졌다(20.0%)는 응답을 합치면 80.0%로 역시 열 명 중 여덟 명이 서비스 대상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제공 대상도 다양해진 편이다(64.8%), 매우 다양해졌다(27.6%)를 합치면 92.4%가 서비스 대상의 다양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매우 많아졌거나(36.2%) 많아진 편(58.1%)이라고 응답한 센터가 대다수였다.

표 4-10 | 인프라 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대상자 모집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1	0.95	3.78	(.80)
	그렇지 않은 편이다	8	7.62		
	변화 없다	17	16.19		
	그런 편이다	66	62.86		
	매우 그렇다	13	12.38		
서비스 제공대상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93	(.78)
	그렇지 않은 편이다	7	6.67		
	변화 없다	14	13.33		
	그런 편이다	63	60.00		
	매우 그렇다	21	20.00		
서비스 제공대상 다양해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18	(.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90		
	변화 없다	6	5.71		
	그런 편이다	68	64.76		
	매우 그렇다	29	27.62		
사업종류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30	(.60)
	그렇지 않은 편	1	0.95		
	변화 없다	5	4.76		
	그런 편이다	61	58.10		
	매우 그렇다	38	36.19		

타 기관과 연계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8	7.62	2.67	(.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	39.05		
	변화 없다	37	35.24		
	그런 편이다	16	15.24		
	매우 그렇다	3	2.86		
지역 주민 리더 발굴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1	0.95	3.53	(.8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	13.33		
	변화 없다	26	24.76		
	그런 편이다	56	53.33		
	매우 그렇다	8	7.62		
서비스 사각지대 확대되었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70	(.77)
	그렇지 않은 편이다	8	7.62		
	변화 없다	27	25.71		
	그런 편이다	58	55.24		
	매우 그렇다	12	11.43		
방문 서비스 요구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95	(.76)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4.76		
	변화 없다	18	17.14		
	그런 편이다	59	56.19		
	매우 그렇다	23	21.90		
공간 활용 사업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6	5.71	3.15	(1.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	22.86		
	변화 없다	32	30.48		
	그런 편이다	34	32.38		
	매우 그렇다	9	8.57		
관할 지방 정부의 요구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1	0.95	4.12	(.68)
	그렇지 않은 편이다	0	0.00		
	변화 없다	12	11.43		
	그런 편이다	64	60.95		
	매우 그렇다	28	26.67		
관할 지방 정부의 예산 감소했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10	(.8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	26.67		
	변화 없다	46	43.81		
	그런 편이다	23	21.90		
	매우 그렇다	8	7.62		

지역사회 협력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39.1%)거나 변화없다(35.2%)고 한 응답이 많아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리더 발굴에 대해서는 어려워진 편(53.3%)이라고 한 센터가 가장 많았으나, 변화 없다(24.8%)고 한 센터도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는 않았다.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확대된 편(55.2%)이라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우 확대되었다(11.4%)를 합치면 응답센터의 66.6%가 서비스 사각지대의 확대를 체감하고 있었다. 찾아가는 서비스(방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많아진 편(56.2%)이거나 매우 많아졌다(21.9%)고 체감하는 응답자를 합치면 78.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사업 방식에 관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간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30.5%)는 응답과 어려워진 편(32.4%)이라는 응답이 비슷하였고, 그렇지 않은 편(22.9%)이라고 한 응답자도 많아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관할 지방정부의 요구가 많아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많아진 편(61.0%)이거나 매우 많아졌다(26.7%)고 한 응답을 합치면 87.7%의 센터에서 지방정부의 요구가 많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관할 지방정부의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43.8%)가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은 편(26.7%)과 그런 편(21.9%)이 비슷하였다.

평균 점수로 보았을 때, 가장 변화가 큰 것은 사업 종류가 많아짐(4.30점), 서비스 제공 대상 다양해짐(4.18점), 지방정부의 요구 많아짐(4.12점), 서비스 대상 많아짐(3.93점)의 순서였고, 가장 적은 것은 타기관과의 연계 어려워짐(2.67점), 지방정부의 예산 감소함(3.10점), 공간 활용 사업 어려워짐(3.15점)의 순이었다.

<표 4-11>에서 지역 내 인프라의 수량 변화가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지역주민 리더 발굴의 어려움은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11 | 인프라 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대상자 모집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71	(.71)	1	1.43	3.81	(.84)	0.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8.57			5	7.14			
	변화 없다	6	17.14			11	15.71			
	그런 편이다	24	68.57			42	60.00			
	매우 그렇다	2	5.71			11	15.71			
서비스 제공대상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97	(.66)	0	0.00	3.91	(.83)	-0.3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2.86			6	8.57			
	변화 없다	5	14.29			9	12.86			
	그런 편이다	23	65.71			40	57.14			
	매우 그렇다	6	17.14			15	21.43			
서비스 제공대상 다양해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11	(.68)	0	0.00	4.21	(.59)	0.7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2.86			1	1.43			
	변화 없다	3	8.57			3	4.29			
	그런 편이다	22	62.86			46	65.71			
	매우 그렇다	9	25.71			20	28.57			
사업종류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29	(.57)	0	0.00	4.30	(.62)	0.11
	그렇지 않은 편	0	0.00			1	1.43			
	변화 없다	2	5.71			3	4.29			
	그런 편이다	21	60.00			40	57.14			
	매우 그렇다	12	34.29			26	37.14			
타 기관과 연계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3	8.57	2.60	(.98)	5	7.14	2.70	(.91)	0.5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	45.71			25	35.71			
	변화 없다	9	25.71			28	40.00			
	그런 편이다	6	17.14			10	14.29			
	매우 그렇다	1	2.86			2	2.86			
지역주민리 더 발굴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40	(.81)	1	1.43	3.60	(.87)	1.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17.14			8	11.43			
	변화 없다	10	28.57			16	22.86			
	그런 편이다	18	51.43			38	54.29			
	매우 그렇다	1	2.86			7	10.00			
서비스 사각지대 확대되었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69	(.80)	0	0.00	3.71	(.76)	0.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8.57			5	7.14			
	변화 없다	9	25.71			18	25.71			
	그런 편이다	19	54.29			39	55.71			
	매우 그렇다	4	11.43			8	11.43			

방문서비스 요구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4.00	(.91)	0	0.00	3.93	(.69)	-0.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11.43			1	1.43			
	변화 없다	2	5.71			16	22.86			
	그런 편이다	19	54.29			40	57.14			
	매우 그렇다	10	28.57			13	18.57			
공간활용 사업 어려워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2	5.71	3.29	(1.18)	4	5.71	3.09	(.99)	-0.92
	그렇지 않은 편이다	9	25.71			15	21.43			
	변화 없다	6	17.14			26	37.14			
	그런 편이다	13	37.14			21	30.00			
	매우 그렇다	5	14.29			4	5.71			
관할 지방 정부의 요구 많아졌음	전혀 그렇지 않다	1	2.86	4.17	(.82)	0	0.00	4.10	(.59)	-0.51
	그렇지 않은 편이다	0	0.00			0	0.00			
	변화 없다	3	8.57			9	12.86			
	그런 편이다	19	54.29			45	64.29			
	매우 그렇다	12	34.29			16	22.86			
관할 지방 정부의 예산 감소했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14	(1.06)	0	0.00	3.09	(.79)	-0.3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	34.29			16	22.86			
	변화 없다	11	31.43			35	50.00			
	그런 편이다	7	20.00			16	22.86			
	매우 그렇다	5	14.29			3	4.29			

주: \* p<.05 \*\* p<.01 \*\*\* p<.001

## 7)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상황

각 센터가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새로운 대상 발굴, 유관기관 과 상황 공유, 한가원 교육 참여, 한가원 외 다른 기관 교육 참여, 센터 내부 워크숍 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표 4-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문항 평균 3.43점, 지역에 맞는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문항 평균 3.43점,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항 3.28점, 한가원에서 실시하는 관련 주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항 3.29점, 한가원 외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주제의 교육에 참여

하고 있다는 문항 3.08점, 센터 내부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관련 주제를 공부하고 있다는 문항 2.94점으로 대체로 인구변화에 따른 준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과 새로운 대상 발굴을 시도하는 노력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를 위해 한가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았으나, 센터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하는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의 준비와 노력에 있어서도 수도권 과 비수도권 센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12 |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상황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43	(.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0	0.00		
	그런 편이다	60	57.14		
	매우 그렇다	45	42.86		
지역에 맞는 새로운 대상 발굴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43	(.5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0.95		
	그런 편이다	58	55.24		
	매우 그렇다	46	43.81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상황 공유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28	(.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4.76		
	그런 편이다	66	62.86		
	매우 그렇다	34	32.38		
한가원의 관련 주제 교육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29	(.57)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5.71		
	그런 편이다	63	60.00		
	매우 그렇다	36	34.29		
다른 기관의 관련 주제 교육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08	(.60)
	그렇지 않은 편	15	14.29		
	그런 편이다	67	63.81		
	매우 그렇다	23	21.90		
센터 내부 세미나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2.94	(.62)
	그렇지 않은 편	23	21.90		
	그런 편이다	65	61.90		
	매우 그렇다	17	16.19		

표 4-13 |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상황: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40 (.50)	0	0.00	3.44 (.50)	0.41
	그렇지 않은 편이다	0	0.00		0	0.00		
	그런 편이다	21	60.00		39	55.71		
지역에 맞는 새로운 대상 발굴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40 (.50)	0	0.00	3.44 (.53)	0.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0	0.00		1	1.43		
	그런 편이다	21	60.00		37	52.86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상황 공유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23 (.55)	0	0.00	3.30 (.55)	0.6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29		3	5.71		
	그런 편이다	23	61.43		43	65.71		
한가원의 관련 주제 교육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20 (.63)	0	0.00	3.33 (.53)	1.10
	그렇지 않은 편	4	11.43		2	2.86		
	그런 편이다	20	57.14		43	61.43		
다른 기관의 관련 주제 교육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14 (.55)	0	0.00	3.04 (.62)	-0.80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8.57		12	17.14		
	그런 편이다	24	68.57		43	61.43		
센터 내부 세미나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3.06 (.64)	0	0.00	2.89 (.60)	-1.35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24.29		17	24.29		
	그런 편이다	21	60.00		44	62.86		
	매우 그렇다	8	22.86		9	12.86		

〈표 4-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각 센터가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있는지를 0점(전혀 준비되어있지 않다)에서 10점(매우 잘 준비되어있다)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빈도는 8점으로 37.1%의 센터가 해당되었다. 전체 105개 센터의 평균 7.37점(표준편차 1.21점)으로 주관적 평가 점수는 높은 편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를 비교해볼 때, 수도권 센터의 주관적 준비 정도가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14 |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정도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인구변화 관련 준비도	4	2	1.90	7.37	(1.21)
	5	4	3.81		
	6	21	20.00		
	7	22	20.95		
	8	39	37.14		
	9	16	15.24		
	10	1	0.95		

표 4-15 | 인구변화와 관련한 준비 정도: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인구변화 관련 준비도	4	1	2.86	7.63	(1.31)	1	1.43	7.24	(1.15)	-1.55
	5	2	5.71			2	2.86			
	6	3	8.57			18	25.71			
	7	6	17.14			16	22.86			
	8	15	42.86			24	34.29			
	9	7	20.00			9	12.86			
	10	1	2.86	0	0.00					

주: \* p&lt;.05 \*\* p&lt;.01 \*\*\* p&lt;.001

## 8) 센터 회원 및 성과 관리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은 통계청 통계 등 공식통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센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공식통계는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센터 이용자가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구집단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지역 전체 주민의 특성과 유사한지 파악하여 이용자에 맞는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서비스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6〉에 요약한 바와 같이, 한가원 실적보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프로그램별 참여 실적 외에 별도로 프로그램별 참여자나 센터 전체 회원의 기본 정보(성별, 연령대, 가구유형 등)를 조사하여 관리하는지 질문한 결과, 약 반

정도(51.4%)의 센터는 회원의 기본 정보를 관리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반 정도(48.6%)의 센터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지 여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회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센터는 주로 엑셀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상 회원 자료, 성과보고서에 수록된 표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사업별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타 의견도 있었다.

표 4-16 | 센터 회원 관리 (단위: 개, %, 점)

유형	지역	유형	빈도	비율	평균	(SD)	$x^2$
프로그램 별 참여자 및 전체 회원정보 관리	전국 (n=105)	예	54	51.43	1.49	(.50)	0.69
		아니오	51	48.57			
	수도권 (n=35)	예	20	57.14	1.43	(.50)	
		아니오	15	42.86			
비수도권 (n=70)	예	34	48.57	1.51	(.50)		
	아니오	36	51.43				

주: \* p<.05 \*\* p<.01 \*\*\* p<.001

<표 4-17>과 같이 등록된 회원명부의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한다는 센터가 84.8%를 차지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센터는 15.2%였다. 회원명부의 이용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개별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도 재위탁신청서 작성이나 사업보고서 작성 등의 용도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회원 정부 활용 여부에 지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기적 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정기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센터가 75.2%, 하지 않는 센터가 24.8%로 네 개 센터 중 한 곳은 정기적인 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17 | 센터 회원관리와 성과보고서 작성 여부

(단위: 개, %, 점)

유형	지역	유형	빈도	비율	평균	(SD)	$\chi^2$
센터 내 회원명부 활용여부	전국	예	89	84.76	1.15	(.36)	0.92
		아니오	16	15.24			
	수도권 (n=35)	예	28	80.00	1.20	(.41)	
		아니오	7	20.00			
비수도 권 (n=70)	예	61	87.14	1.13	(.34)		
	아니오	9	12.86				
정기적인 사업성과 보고서 작성여부	전국	예	79	75.24	1.25	(.43)	0.41
		아니오	26	24.76			
	수도권 (n=35)	예	25	71.43	1.29	(.46)	
		아니오	10	28.57			
비수도 권 (n=70)	예	54	77.14	1.23	(.42)		
	아니오	16	22.86				

주: \*p&lt;.05 \*\*p&lt;.01 \*\*\*p&lt;.001

사업 계획 및 운영 시 지역에 관한 통계를 찾아보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4-18>에 정리되어있다. 모든 센터에서 통계를 찾아 활용한다고 하였고, 주로 찾아보는 통계자료의 내용을 중복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이 찾아보는 통계는 지역의 외국인/다문화가족 비율, 총인구, 가구유형, 지역주민의 연령대의 순이었으며, 그 외에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혼인율/이혼율 등을 자주 활용하는 편이었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의 전입·전출, 가구 특성, 지역의 사회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통계청 자료 외에도 지역에서 조사한 내용, 행안부 등 정부 통계, 학술지 내용도 참조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37%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76%의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4-18 | 활용 통계 종류 (단위: 개, %)

유형	지역	유형	빈도	비율
활용 통계 종류 *중복응답		지역주민 총 인구	88	83.80
		지역주민 연령대	77	73.33
		지역주민 가구유형	81	77.14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41	39.00
		지역의 혼인율 이혼율	40	38.10
		외국인/다문화가족 비율	93	88.57
		지역주민의 이동	20	19.05
	기타	5	4.76	

표 4-19 | 사업 계획 및 운영시 지역 통계 활용 여부 (단위: 개, %, 점)

	유형	빈도	비율	평균	(SD)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입니까?	예	66	62.86	1.37	(0.49)
	아니오	39	37.14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예	80	76.19	1.24	(0.43)
	아니오	25	23.81		

## 9)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에 따른 향후 사업 변경 방향

가족센터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는 「가족사업안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에 따르면, 사업은 크게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같이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 예시가 나열되어 있다.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사업안내」의 기존 사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축소가 필요하다’,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다’, ‘확대가 필요하다’로 조사하였다.

〈표 4-20〉은 향후 가족관계 영역의 13개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모든 사업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가족 상담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0%로 확연히 높았다. 그 외에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은 사업은 아버지역할 지원(50.5%), 부부역할 지원(50.5%)였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0%를

표 4-20 | 인구변화 관련 가족관계 사업 방향성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임신출산 부모지원	축소 필요	27	25.71	1.95	(.68)
	그대로 유지	56	53.33		
	확대 필요	22	20.95		
영유아기 부모지원	축소 필요	9	8.57	2.21	(.58)
	그대로 유지	65	61.90		
	확대 필요	31	29.52		
학부모지원	축소 필요	5	4.76	2.32	(.56)
	그대로 유지	61	58.10		
	확대 필요	39	37.14		
가족가치 교육지원	축소 필요	10	9.52	2.31	(.64)
	그대로 유지	52	49.52		
	확대 필요	43	40.95		
아버지 역할 지원	축소 필요	6	5.71	2.45	(.60)
	그대로 유지	46	43.81		
	확대 필요	53	50.48		
부부역할 지원	축소 필요	4	3.81	2.47	(.57)
	그대로 유지	48	45.71		
	확대 필요	53	50.48		
이혼전후 가족지원	축소 필요	6	5.71	2.38	(.59)
	그대로 유지	53	50.48		
	확대 필요	46	43.81		
(다문화) 가족관계 향상지원	축소 필요	11	10.48	2.26	(.64)
	그대로 유지	56	53.33		
	확대 필요	38	36.19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축소 필요	28	26.67	1.94	(.69)
	그대로 유지	55	52.38		
	확대 필요	22	20.95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축소 필요	19	18.10	2.16	(.71)
	그대로 유지	50	47.62		
	확대 필요	36	34.29		
가족상담	축소 필요	0	0.00	2.6	(.49)
	그대로 유지	42	40.00		
	확대 필요	63	60.00		
손자녀 조부모 역할지원	축소 필요	14	13.33	2.26	(.68)
	그대로 유지	50	47.62		
	확대 필요	41	39.05		
노부모부양가족 지원	축소 필요	24	22.86	2.10	(.75)
	그대로 유지	46	43.81		
	확대 필요	35	33.33		

표 4-21 | 인구변화 관련 가족관계 사업 방향성: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임신출산 부모지원	축소 필요	9	25.71	1.91	(.66)	18	25.71	1.97	(.70)	0.40
	그대로 유지	20	57.14			36	51.43			
	확대 필요	6	17.14			16	22.86			
영유아기 부모지원	축소 필요	1	2.86	2.26	(.51)	8	11.43	2.18	(.62)	-0.59
	그대로 유지	24	68.57			41	58.57			
	확대 필요	10	28.57			21	30.00			
학부모지원	축소 필요	0	0.00	2.37	(.49)	5	7.14	2.30	(.60)	0.61
	그대로 유지	22	62.86			39	55.71			
	확대 필요	13	37.14			26	37.14			
가족가치 교육지원	축소 필요	3	8.57	2.26	(.61)	7	10.00	2.34	(.66)	-0.64
	그대로 유지	20	57.14			31	45.71			
	확대 필요	12	34.29			31	44.29			
아버지 역할 지원	축소 필요	1	2.86	2.49	(.56)	5	7.14	2.43	(.63)	0.46
	그대로 유지	16	45.71			30	42.86			
	확대 필요	18	51.43			35	50.00			
부부역할 지원	축소 필요	1	2.86	2.51	(.56)	3	4.29	2.44	(.58)	0.60
	그대로 유지	15	42.86			33	47.14			
	확대 필요	19	54.29			34	48.57			
이혼전후 가족지원	축소 필요	1	2.86	2.49	(.56)	5	7.14	2.33	(.61)	1.28
	그대로 유지	16	45.71			37	52.86			
	확대 필요	18	51.43			28	40.00			
(다문화) 가족관계 향상지원	축소 필요	1	2.86	2.31	(.53)	10	14.29	2.23	(.68)	0.65
	그대로 유지	22	62.86			34	48.57			
	확대 필요	12	34.29			26	37.14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축소 필요	12	34.29	1.91	(.78)	16	22.86	1.96	(.65)	-0.3
	그대로 유지	14	40.00			41	58.57			
	확대 필요	9	25.71			13	18.57			
다문화 가족자녀 성장지원	축소 필요	8	22.86	2.11	(.76)	11	15.71	2.19	(.69)	-0.49
	그대로 유지	15	42.86			35	50.00			
	확대 필요	12	34.29			24	34.29			
가족상담	축소 필요	0	0.00	2.71	(.46)	0	0.00	2.54	(.50)	1.70
	그대로 유지	10	28.57			32	45.71			
	확대 필요	25	71.43			38	54.29			
손자녀 조부모 역할지원	축소 필요	6	17.14	2.17	(.71)	8	11.43	2.3	(.67)	-0.91
	그대로 유지	17	48.57			33	47.14			
	확대 필요	12	34.29			29	41.43			
노부모 부양 가족지원	축소 필요	7	20.00	2.14	(.73)	17	24.29	2.08	(.76)	0.37
	그대로 유지	16	45.71			30	42.86			
	확대 필요	12	34.29			23	32.86			

주: \* p<.05 \*\* p<.01 \*\*\* p<.001

넘은 사업은 학부모 지원(37.1%), 가족가치교육(41.0%), 이혼전후 가족지원(43.8%), 다문화가족관계향상 지원(36.2%), 다문화가족성장지원(34.3%), 손자녀 조부모역할 지원(39.1%),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33.3%) 사업이었다.

반면,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20%를 넘은 사업은 임신·출산 부모 지원(25.7%),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26.7%), 노부모 부양가족지원(22.9%)이었다. 축소 의견이 가장 높았던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34.3%)이었고, 비수도권에서는 임신·출산부모지원사업(25.7%)이었다.

가족관계 영역의 사업 변경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센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축소, 유지, 확대 의견이 골고루 나온 사업은 주로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이었다. 이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문화가족 사업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2〉는 향후 가족돌봄 영역과 가족생활 영역의 7개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축소나 유지보다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표 4-22 | 인구변화 관련 가족돌봄 및 생활 사업 방향성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가족 희망드림	축소 필요	8	7.62	2.29	(.60)
	그대로 유지	59	56.19		
	확대 필요	38	36.19		
일·가정 양립지원	축소 필요	10	9.52	2.32	(.64)
	그대로 유지	51	48.57		
	확대 필요	44	41.90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축소 필요	29	27.62	1.85	(.61)
	그대로 유지	63	60.00		
	확대 필요	13	12.38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축소 필요	20	19.05	2.11	(.70)
	그대로 유지	53	50.48		
	확대 필요	32	30.48		
1인 가구 생활지원	축소 필요	5	4.76	2.45	(.59)
	그대로 유지	48	45.71		
	확대 필요	52	49.52		
1인 가구상담	축소 필요	4	3.81	2.45	(.57)
	그대로 유지	50	47.62		
	확대 필요	51	48.57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사업	축소 필요	11	10.48	2.21	(.62)
	그대로 유지	61	58.10		
	확대 필요	33	31.43		

높은 사업은 1인 가구 생활 지원(49.5%), 1인 가구 상담(48.6%)이었고,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사업은 가족희망드림(56.2%), 일·가정양립지원(48.6%),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60.0%),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58.1%)이었다. 제시된 사업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27.6%), 결혼이민자 취업지원(19.1%)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가족돌봄사업이나 가족생활 지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센터나 비수도권 소재 센터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23 | 인구변화 관련 가족돌봄 및 생활 사업 방향: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가족 희망드림	축소 필요	4	11.43	2.17 (.62)	4	5.71	2.34 (.59)	-1.39
	그대로 유지	21	60.00		38	54.29		
	확대 필요	10	28.57		28	40.00		
일·가정 양립지원	축소 필요	1	2.86	2.43 (.56)	9	12.86	2.27 (.64)	1.18
	그대로 유지	18	51.43		33	47.14		
	확대 필요	16	45.71		28	40.00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축소 필요	12	34.29	1.77 (.65)	17	24.29	1.89 (.60)	-0.89
	그대로 유지	19	54.29		44	62.86		
	확대 필요	4	11.43		9	12.86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축소 필요	8	22.86	2.17 (.79)	12	17.14	2.09 (.65)	0.59
	그대로 유지	13	37.14		40	57.14		
	확대 필요	14	40.00		18	25.71		
1인 가구 생활지원	축소 필요	1	2.86	2.43 (.56)	4	5.71	2.46 (.59)	-0.23
	그대로 유지	18	51.43		30	42.86		
	확대 필요	16	45.71		36	51.43		
1인 가구상담	축소 필요	1	2.86	2.46 (.56)	3	4.29	2.44 (.58)	0.12
	그대로 유지	17	48.57		33	47.14		
	확대 필요	17	48.57		34	48.57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축소 필요	5	14.29	2.06 (.59)	6	8.57	2.29 (.62)	-1.81
	그대로 유지	23	65.71		38	54.29		
	확대 필요	7	20.00		26	37.14		

주: \* p<.05 \*\* p<.01 \*\*\* p<.001

〈표 4-24〉는 향후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축소나 유지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사업

은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49.5%), 지역주민간 교류(식사공유 등) 프로그램(46.7%) 두 가지였고, 나머지 사업은 축소나 확대보다 지금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사업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34.3%), 다함께 프로그램(34.3%),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29.5%) 등 모두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이었다.

표 4-24 | 인구변화 관련 지역공동체 사업 방향성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가족봉사단	축소 필요	21	20.00	2.02	(.65)
	그대로 유지	61	58.10		
	확대 필요	23	21.90		
공동육아나눔터	축소 필요	14	13.33	2.07	(.58)
	그대로 유지	70	66.67		
	확대 필요	21	20.00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운영	축소 필요	20	19.05	2.07	(.67)
	그대로 유지	58	55.24		
	확대 필요	27	25.71		
가족사랑의 날	축소 필요	9	8.57	2.27	(.61)
	그대로 유지	59	56.19		
	확대 필요	37	35.24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축소 필요	36	34.29	1.78	(.65)
	그대로 유지	56	53.33		
	확대 필요	13	12.38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지원	축소 필요	11	10.48	1.78	(.65)
	그대로 유지	59	56.19		
	확대 필요	35	33.33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축소 필요	4	3.81	2.46	(.57)
	그대로 유지	49	46.67		
	확대 필요	52	49.52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축소 필요	31	29.52	1.85	(.65)
	그대로 유지	59	56.19		
	확대 필요	15	14.29		
다함께 프로그램	축소 필요	36	34.29	1.83	(.70)
	그대로 유지	51	48.57		
	확대 필요	18	17.14		
지역주민간 교류 프로그램	축소 필요	16	15.24	2.31	(.72)
	그대로 유지	40	38.10		
	확대 필요	49	46.67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사업에 대한 의견에서도 센터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4-25 | 인구변화 관련 지역공동체 사업 방향: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가족봉사단	축소 필요	10	28.57	1.91	(.70)	11	15.71	2.07	(.62)	-1.17
	그대로 유지	18	51.43			43	61.43			
	확대 필요	7	20.00			16	22.86			
공동육아나눔터	축소 필요	4	11.43	2.06	(.54)	10	14.29	2.07	(.60)	-0.12
	그대로 유지	25	71.43			45	64.29			
	확대 필요	6	17.14			15	21.43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축소 필요	8	22.86	2.00	(.69)	12	17.14	2.10	(.66)	-0.72
	그대로 유지	19	54.29			39	55.71			
	확대 필요	8	22.86			19	27.14			
가족사랑의 날	축소 필요	3	8.57	2.34	(.64)	6	8.57	2.23	(.59)	0.91
	그대로 유지	17	48.57			42	60.00			
	확대 필요	15	42.86			22	31.43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축소 필요	14	40.00	1.8	(.76)	22	31.43	1.77	(.59)	0.21
	그대로 유지	14	40.00			42	60.00			
	확대 필요	7	20.00			6	8.57			
인식개선 공동체의식 지원	축소 필요	5	14.29	2.23	(.69)	6	8.57	2.23	(.59)	0.00
	그대로 유지	17	48.57			42	60.00			
	확대 필요	13	37.14			22	31.43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축소 필요	2	5.71	2.43	(.61)	2	2.86	2.47	(.56)	-0.36
	그대로 유지	16	45.71			33	47.14			
	확대 필요	17	48.57			35	50.00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축소 필요	10	28.57	1.83	(.62)	21	30.00	1.86	(.67)	-0.21
	그대로 유지	21	60.00			38	54.29			
	확대 필요	4	11.43			11	15.71			
다함께 프로그램	축소 필요	11	31.43	1.86	(.69)	25	35.71	1.81	(.71)	0.29
	그대로 유지	18	51.43			33	47.14			
	확대 필요	6	17.14			12	17.14			
지역주민간 교류 프로그램	축소 필요	7	20.00	2.17	(.75)	9	12.86	2.39	(.71)	-1.44
	그대로 유지	15	42.86			25	35.71			
	확대 필요	13	37.14			36	51.43			

주: \* p<.05 \*\* p<.01 \*\*\* p<.001

## 10) 인구구조에 따른 향후 서비스 운영방식 요구도 변화 예측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다양한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요구가 조금 또는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주어진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해 감소(조금 감소 + 매우 감소), 유지, 증가(조금 증가 + 매우 증가) 비율을 볼 때,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개별가족 맞춤형 사례관리(80.0%), 센터에서 하는 문화·체험활동(69.5%), 센터에서 하는 상담(67.5%), 실시간 비대면 교육서비스(66.6%)의 순이었다.

표 4-26 | 인구변화 관련 서비스 운영방식 요구도 변화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센터에서 하는 집합교육 (예: 센터에서 하는 부모교육)	매우 감소할 것	9	8.57	2.90	(97)
	조금 감소할 것	27	25.71		
	변화없을 것	36	34.29		
	조금 증가할 것	32	30.48		
	매우 증가할 것	1	0.95		
센터에서 하는 상담	매우 감소할 것	2	1.90	3.81	(92)
	조금 감소할 것	6	5.71		
	변화없을 것	26	24.76		
	조금 증가할 것	47	44.76		
	매우 증가할 것	24	22.86		
센터에서 하는 문화·체험 활동	매우 감소할 것	0	0.00	3.8	(85)
	조금 감소할 것	9	8.57		
	변화없을 것	23	21.90		
	조금 증가할 것	53	50.48		
	매우 증가할 것	20	19.05		
지역 내 다른 기관으로 찾아가는 집합교육	매우 감소할 것	5	4.76	3.36	(90)
	조금 감소할 것	9	8.57		
	변화없을 것	40	38.10		
	조금 증가할 것	45	42.86		
	매우 증가할 것	6	5.71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매우 감소할 것	2	1.90	3.30	(94)
	조금 감소할 것	20	19.05		
	변화없을 것	36	34.29		
	조금 증가할 것	38	36.19		
	매우 증가할 것	9	8.57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이나 Webex 활용)	매우 감소할 것	1	0.95	3.74	(0.99)
	조금 감소할 것	14	13.33		
	변화없을 것	20	19.05		
	조금 증가할 것	46	43.81		
	매우 증가할 것	24	22.86		
실시간 비대면 상담(Zoom이나 Webex 활용)	매우 감소할 것	3	2.86	3.6	(1.05)
	조금 감소할 것	14	13.33		
	변화없을 것	27	25.71		
	조금 증가할 것	39	37.14		
	매우 증가할 것	22	20.95		
실시간 비대면 문화·체험 활동	매우 감소할 것	4	3.81	3.27	(1.06)
	조금 감소할 것	24	22.86		
	변화없을 것	29	27.62		
	조금 증가할 것	36	34.29		
	매우 증가할 것	12	11.43		
동영상 교육	매우 감소할 것	4	3.81	3.15	(1.03)
	조금 감소할 것	28	26.67		
	변화없을 것	29	27.62		
	조금 증가할 것	36	34.29		
	매우 증가할 것	8	7.62		
동영상 문화·체험 활동	매우 감소할 것	7	6.67	2.92	(0.99)
	조금 감소할 것	29	27.62		
	변화없을 것	39	37.14		
	조금 증가할 것	25	23.81		
	매우 증가할 것	5	4.76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사업	매우 감소할 것	1	0.95	3.42	(0.77)
	조금 감소할 것	10	9.52		
	변화없을 것	43	40.95		
	조금 증가할 것	46	43.81		
	매우 증가할 것	5	4.76		
다문화교류소통공간을 활용한 사업	매우 감소할 것	3	2.86	3.24	(0.86)
	조금 감소할 것	16	15.24		
	변화없을 것	43	40.95		
	조금 증가할 것	39	37.14		
	매우 증가할 것	4	3.81		
개별 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매우 감소할 것	0	0.00	3.94	(0.67)
	조금 감소할 것	3	2.86		
	변화없을 것	18	17.14		
	조금 증가할 것	67	63.81		
	매우 증가할 것	17	16.19		
대면으로 하는 자조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매우 감소할 것	0	0.00	3.56	(0.71)
	조금 감소할 것	8	7.62		
	변화없을 것	35	33.33		
	조금 증가할 것	57	54.29		
	매우 증가할 것	5	4.76		

비대면으로 하는 자조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매우 감소할 것	5	4.76	2.81	(.99)
	조금 감소할 것	42	40.00		
	변화없을 것	31	29.52		
	조금 증가할 것	22	20.95		
	매우 증가할 것	5	4.76		

그 외 지역 내 다른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48.5%),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44.6%), 실시간 비대면 상담(58.0%), 실시간 비대면 문화·체험활동(45.6%), 동영상 교육(41.9%),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사업(48.5%), 다문화소통교류 공간 활용(40.9%), 대면 자조/동아리 활동(58.9%) 등도 향후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사업 방식은 비대면 자조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응답자의 44.7%가 조금 또는 매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표 4-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센터를 비교한 결과, 실시간 비대면교육과 실시간 비대면 상담에 대한 전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에 소재한 센터에서는 실시간 비대면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비수도권 소재 센터에 비해 높았다.

표 4-27 | 인구변화 관련 서비스 운영방식 요구도 변화: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센터에서 하는 집합교육	매우 감소할 것	4	11.43	2.74 (1.01)	5	7.14	2.97 (.97)	-1.14
	조금 감소할 것	11	31.43		16	22.86		
	변화없을 것	10	28.57		26	37.14		
	조금 증가할 것	10	28.57		22	31.43		
	매우 증가할 것	0	0.00		1	1.43		
센터에서 하는 상담	매우 감소할 것	1	2.86	3.86 (.97)	1	1.43	3.79 (.90)	0.37
	조금 감소할 것	2	5.71		4	5.71		
	변화없을 것	7	20.00		19	27.14		
	조금 증가할 것	16	45.71		31	44.29		
	매우 증가할 것	9	25.71		15	21.43		
센터에서 하는 문화·체험활동	매우 감소할 것	0	0.0	3.80 (.93)	0	0.0	3.80 (.81)	0.00
	조금 감소할 것	4	11.43		5	7.14		
	변화없을 것	7	20.00		16	22.86		
	조금 증가할 것	16	45.71		37	52.86		
	매우 증가할 것	8	22.86		12	17.14		

지역 내 다른기관 찾아가는 집합교육	매우 감소할 것	3	8.57	3.37 (.97)	2	2.86	3.36 (.87)	0.07
	조금 감소할 것	2	5.71		7	10.00		
	변화없을 것	10	28.57		30	42.86		
	조금 증가할 것	19	54.29		26	37.14		
	매우 증가할 것	1	2.86		5	7.14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매우 감소할 것	1	2.86	3.17 (.95)	1	1.43	3.37 (.94)	-1.03
	조금 감소할 것	8	22.86		12	17.14		
	변화없을 것	12	34.29		24	34.29		
	조금 증가할 것	12	34.29		26	37.14		
	매우 증가할 것	2	5.71		7	10.00		
실시간 비대면 교육	매우 감소할 것	0	0.00	4.03 (.89)	1	1.43	3.60 (1.01)	2.12**
	조금 감소할 것	3	8.57		11	15.71		
	변화없을 것	4	11.43		16	22.86		
	조금 증가할 것	17	48.57		29	41.43		
	매우 증가할 것	11	31.43		13	18.57		
실시간 비대면 상담	매우 감소할 것	0	0.00	4.00 (.91)	3	4.29	3.40 (1.1)	2.85**
	조금 감소할 것	1	2.86		13	18.57		
	변화없을 것	11	31.43		16	22.86		
	조금 증가할 것	10	28.57		29	41.43		
	매우 증가할 것	13	37.14		9	12.86		
실시간 비대면 문화·체험활동	매우 감소할 것	0	0.00	3.54 (1.01)	4	5.71	3.13 (1.06)	1.91
	조금 감소할 것	6	17.14		18	25.71		
	변화없을 것	11	31.43		18	25.71		
	조금 증가할 것	11	31.43		25	35.71		
	매우 증가할 것	7	20.00		5	7.14		
동영상 교육	매우 감소할 것	0	0.00	3.26 (.92)	4	5.71	3.1 (1.08)	0.74
	조금 감소할 것	9	25.71		19	27.14		
	변화없을 것	10	28.57		19	27.14		
	조금 증가할 것	14	40.00		22	31.43		
	매우 증가할 것	2	5.71		6	8.57		
동영상 문화·체험활동	매우 감소할 것	0	0.0	3.03 (.82)	7	10.00	2.87 (1.06)	0.77
	조금 감소할 것	10	28.57		19	27.14		
	변화없을 것	15	42.86		24	34.29		
	조금 증가할 것	9	25.71		16	22.86		
	매우 증가할 것	1	2.86		4	5.71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용한 사업	매우 감소할 것	1	2.86	3.26 (.82)	0	0.00	3.50 (.74)	-1.53
	조금 감소할 것	4	11.43		6	8.57		
	변화없을 것	16	45.71		27	38.57		
	조금 증가할 것	13	37.14		33	47.14		
	매우 증가할 것	1	2.86		4	5.71		

다문화교류소 통공간을 활용한 사업	매우 감소할 것	0	0.00	3.11 (.83)	3	4.29	3.30 (.87)	-1.04
	조금 감소할 것	9	25.71		7	10.00		
	변화없을 것	14	40.00		29	41.43		
	조금 증가할 것	11	31.43		28	40.00		
	매우 증가할 것	1	2.86		3	4.29		
개별 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매우 감소할 것	0	0.00	4.03 (.62)	0	0.00	3.89 (.69)	0.77
	조금 감소할 것	0	0.00		3	4.29		
	변화없을 것	6	17.14		12	17.14		
	조금 증가할 것	22	62.86		45	64.29		
	매우 증가할 것	7	20.00		10	14.29		
대면 자조모임 동아리활동	매우 감소할 것	0	0.0	3.60 (.74)	0	0.00	3.54 (.70)	-0.39
	조금 감소할 것	3	8.57		5	7.14		
	변화없을 것	10	28.57		25	35.71		
	조금 증가할 것	20	57.14		37	52.86		
	매우 증가할 것	2	5.71		3	4.29		
비대면 자조모임 동아리활동	매우 감소할 것	0	0.00	3.00 (.97)	5	7.14	2.71 (.98)	-1.41
	조금 감소할 것	13	37.14		29	41.43		
	변화없을 것	12	34.29		19	27.14		
	조금 증가할 것	7	20.00		15	21.43		
	매우 증가할 것	3	8.57		2	2.86		

주: \*p<.05 \*\*p<.01 \*\*\*p<.001

## 11) 인구구조 변화 관련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해야 할 과제의 중요성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향후 해야 할 과제를 총 12개로 질문한 결과는 <표 4-28>과 같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된 것은 각 지역에 맞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 보장(4.52점), 각 지역에 맞는 실적 목표 설정 및 관리 보장(4.50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4.44점), 각 지역에 맞는 사업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제공(4.41점)의 순이었다. 지역 상황에 맞는 개별적 사업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크고, 이를 잘하기 위한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서비스 수요 변화 추이 조사나 연구(4.36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 개발(4.29점), 미래에 맞는 센터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 제시(4.22점), 지역별 가족 서비스 이용 현황 데이터 관리와 공개(4.13점) 등에 대한 요구도 크게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업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족 서비스 수요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나 연구 기능이 필요한데 개별 센터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종사자 자격관리(4.19점), 미래에 맞는 새로운 실천기술 활용 지원(4.13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제의 실무자 교육(4.10점) 등에 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표 4-29〉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센터를 비교한 결과, 지역별 가족 서비스 이용 현황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한가원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하는 정도가 수도권 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에도 미래에 맞는 센터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규사업 예산 확보 필요성은 수도권에서 더 높았고, 지역에 맞는 사업 개발 및 운영 컨설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수도권 센터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28 | 인구변화 관련 여성가족부·한가원의 향후 과제**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SD)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제의 실무자 교육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10	(.60)
	중요하지 않은 편	0	0.00		
	그저 그러함	14	13.33		
	중요한편	66	62.86		
	매우 중요함	25	23.81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 개발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29	(.66)
	중요하지 않은 편	2	1.90		
	그저 그러함	6	5.71		
	중요한편	57	54.29		
	매우 중요함	40	38.10		
미래에 맞는 새로운 기술 활용 지원(예: 비대면 상담 플랫폼, 실적시스템과 이용자 자동 연계 등)	전혀 중요하지 않음	3	2.86	4.13	(.95)
	중요하지 않은 편	5	4.76		
	그저 그러함	8	7.62		
	중요한편	48	45.71		
	매우 중요함	41	39.05		

미래에 맞는 센터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 방안 제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95	4.22	(.81)
	중요하지 않은 편	2	1.90		
	그저 그러함	13	12.38		
	중요한편	46	43.81		
	매우 중요함	43	40.95		
지역에 맞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 보장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52	(.62)
	중요하지 않은 편	1	0.95		
	그저 그러함	4	3.81		
	중요한편	39	37.14		
	매우 중요함	61	58.10		
지역에 맞는 실적 목표 설정 및 관리 보장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50	(.61)
	중요하지 않은 편	0	0.00		
	그저 그러함	6	5.71		
	중요한편	40	38.10		
	매우 중요함	59	56.19		
지역에 맞는 사업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제공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41	(.63)
	중요하지 않은 편	1	0.95		
	그저 그러함	5	4.76		
	중요한편	49	46.67		
	매우 중요함	50	47.62		
가족 서비스 수요 변화 추이 조사나 연구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0	4.36	(.67)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2	1.90		
	그저 그렇다	5	4.76		
	중요한편이다	51	48.57		
	매우 중요하다	47	44.76		
지역별 가족 서비스 이용 현황 데이터 관리와 공개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13	(.80)
	중요하지 않은 편	3	2.86		
	그저 그러함	18	17.14		
	중요한편	46	43.81		
	매우 중요함	38	36.19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종사자 자격 관리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95	4.19	(.83)
	중요하지 않은 편	4	3.81		
	그저 그러함	10	9.52		
	중요한편	49	46.67		
	매우 중요함	41	39.05		
비대면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실무자 재교육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3.99	(.84)
	중요하지 않은 편	6	5.71		
	그저 그러함	19	18.10		
	중요한편	50	47.62		
	매우 중요함	30	28.57		

인구구조 변화 관련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95	4.45	(.76)
	중요하지 않은 편	1	0.95		
	그저 그러함	8	7.62		
	중요한편	35	33.33		
	매우 중요함	60	57.14		

표 4-29 | 인구변화 관련 여성가족부·한가원의 향후 과제: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단위: 개, %, 점)

유형	정도	수도권(n=35)			비수도권(n=70)			t
		빈도	비율	평균 (SD)	빈도	비율	평균 (SD)	
인구구조 변화 관련 주제의 실무자 교육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	4.09 (.62)	0	0.0	4.11 (.60)	0.22
	중요하지 않은 편	0	0.0		0	0.0		
	그저 그러함	5	14.29		9	12.86		
	중요한편	22	62.86		44	62.86		
	매우 중요함	8	22.86		17	24.29		
인구구조 변화 관련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 개발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	4.34 (.73)	0	0.0	4.26 (.63)	-0.62
	중요하지 않은 편	1	2.86		1	1.43		
	그저 그러함	2	5.71		4	5.71		
	중요한편	16	45.71		41	58.57		
	매우 중요함	16	45.71		24	34.29		
미래에 맞는 새로운 기술 활용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2.86	4.26 (.98)	2	2.86	4.07 (.94)	-0.94
	중요하지 않은 편	2	5.71		3	4.29		
	그저 그러함	1	2.86		7	10.00		
	중요한편	14	40.00		34	48.57		
	매우 중요함	17	48.57		24	34.29		
미래에 맞는 센터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 방안 제시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34 (.84)	1	1.43	4.16 (.79)	-1.11
	중요하지 않은 편	2	5.71		0	0.00		
	그저 그러함	2	5.71		11	15.71		
	중요한편	13	37.14		33	47.14		
	매우 중요함	18	51.43		25	35.71		
지역에 맞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 보장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60 (.65)	0	0.0	4.49 (.61)	-0.89
	중요하지 않은 편	1	2.86		0	0.0		
	그저 그러함	0	0.00		4	5.71		
	중요한편	11	31.43		28	40.00		
	매우 중요함	23	65.71		38	54.29		
지역에 맞는 실적 목표 설정 및 관리 보장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	4.57 (.56)	0	0.0	4.47 (.63)	-0.80
	중요하지 않은 편	0	0.0		0	0.0		
	그저 그러함	1	2.86		5	7.14		
	중요한편	13	37.14		27	38.57		
	매우 중요함	21	60.00		38	54.29		

지역에 맞는 사업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제공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	4.29	(.71)	0	0.00	4.47	(.58)	1.43
	중요하지 않은 편	1	2.86			0	0.00			
	그저 그러함	2	5.71			3	4.29			
	중요한편	18	51.43			31	44.29			
	매우 중요함	14	40.00			36	51.43			
가족 서비스 수요 변화 추이 조사 연구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46	(.66)	0	0.0	4.31	(.67)	-1.04
	중요하지 않은 편	1	2.86			1	1.43			
	그저 그러함	0	0.00			5	7.14			
	중요한편	16	45.71			35	50.00			
	매우 중요함	18	51.43			29	41.43			
지역별 가족 서비스 이용 현황 데이터 관리와 공개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51	(.66)	0	0.00	3.94	(.80)	-3.66 ***
	중요하지 않은 편	0	0.00			3	4.29			
	그저 그러함	3	8.57			15	21.43			
	중요한편	11	31.43			35	50.00			
	매우 중요함	21	60.00			17	24.29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종사자 자격 관리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34	(.87)	1	1.43	4.11	(.81)	-1.33
	중요하지 않은 편	2	5.71			2	2.86			
	그저 그러함	3	8.57			7	10.00			
	중요한편	11	31.43			38	54.29			
	매우 중요함	19	54.29			22	31.43			
비대면 및 데이터 활용 등실무자 재교육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14	(.85)	0	0.00	3.91	(.83)	-1.32
	중요하지 않은 편	2	5.71			4	5.71			
	그저 그러함	4	11.43			15	21.43			
	중요한편	16	45.71			34	48.57			
	매우 중요함	13	37.14			17	24.29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0	4.63	(.65)	1	1.43	4.36	(.80)	-1.74
	중요하지 않은 편	0	0.00			1	1.43			
	그저 그러함	3	8.57			5	7.14			
	중요한편	7	20.00			28	40.00			
	매우 중요함	25	71.43			35	5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 2 센터장 FGI 결과

### 1) 고령화 비율 높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의 센터

고령화 수준이 높고,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의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FGI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 [지역의 인구변화 체감]

- 면접에 참여한 센터장들은 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많고 유입되는 인구가 없어서 인구감소를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도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다문화가족은 유입되지 않는 현상을 공통으로 지적함
- 청년층이나 결혼 초기 가족은 감소하고 노년 인구,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체감됨
- 유자녀 가족이 감소하고 있어서 센터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1인 가구 대상의 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음
-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정책의 도입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 향후 이 정책이 정착되면 새로운 인구층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센터에 미치는 영향: 운영]

- 센터 이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센터 종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침. 역량 있는 센터 종사자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언어치료사, 가족상담사 등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움. 채용 공고를 내도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몇 개월씩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종사자의 고령화가 나타남. 지방에는 연령은 높는데 실무 경력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많아졌음. 실무 경력이 없어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 한가원에서 운영하는 종사자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지역 종사자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사업계획서 작성 등 더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함
- 가족센터의 낮은 처우 조건 때문에 경력이 쌓이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이 빈발하여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년 내외로 길지 않음.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계속 새로 훈련해야 해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짐
- 종사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거리 출퇴근하는 종사자가 많음
-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보육교사들이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사업 경험 없이 호봉 확정 시 경력이 높게 반영되어 다른 직원들과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

### [센터에 미치는 영향: 사업]

-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이 감소하므로 대상자 모집이 어려움.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 1인 가구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 초점을 뒀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참여자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음. 지역의 1인 가구 특성을 조사한 후에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데, 센터가 조사 분석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움
- 인구감소가 명확한데 센터 평가에서는 작년 대비 참여 인원 증가를 중요한 지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

## [센터의 정체성과 기능]

-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는 달라지지 않아서 아동 대상, 청소년 대상 기관들이 여전히 존재함. 가족들이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쟁이 될 수도 있음
- 지역에서는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기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이웃사촌복지센터 등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어서 가족센터와 일부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 지역에서는 가족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음. 사업 개수나 예산 측면에서도 실제 다문화가족 사업의 비중이 훨씬 높음
- 다문화가족도 증가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노인들은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 대상을 모집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지역에 노인 대상 기관은 많은 편이며 노인복지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어 중복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1인 가구 사업도 65세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야 대상이 겹치지 않음

## [여성가족부와 한가원에 대한 요구]

-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상황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것 같음. 예를 들어, 언어발달사업 등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운영하기 매우 어려운데, 사업을 개발한 여성가족부나 한가원은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음
-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가족센터의 향후 사업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구체적인 연령대와 특성이 다를 수 있음. 지역의 개별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부족함.

한가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해주길 기대함

- 시스템 불안정 문제도 심각함. 직원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불만이 많고, 특히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스템 이용의 불편은 곧 참여 동기의 하락과 연결되는 문제임

## 2) 고령화 비율이 낮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의 센터

인구 유출이 적고 오히려 유입되는 인구가 있는 지역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FGI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의 인구변화 체감]

- 신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서 인구감소는 나타나지 않음. 20~30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도 있고, 인구는 유입되는데 아파트 단지나 전원주택 단지에 중장년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도 있어 편차가 있음
- 인구감소는 없으나 인구구조의 변화는 체감함. 특히, 1인 가구 증가가 체감되며, 지방정부도 1인 가구 사업에 관심이 많아 가족센터에 사업을 요구하거나 1인가구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추진한 지역도 있음

### [센터에 미치는 영향: 운영]

-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원래 지리적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는 것에 더해 구도심 지역과 새로 생긴 지역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있음. 새로 생긴 지역은 구도심 지역과 주민 특성이 다름. 센터로의 지리적 접근성도 다르고, 주민들의 인지도나 관심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 센터 사업 운영 시 어려움이 있음
- 새로운 인구 유입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 노력이 필요한데, 모든 지역을 포괄하기에 자원의 한계가 있음
- 일반 종사자 채용이 어렵지는 않으나, 언어발달지도사, 상담전문인력

등의 인력은 채용이 매우 어려움. 이는 본질적으로 사업의 성격,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처우 등에서 현실성이 낮고 미스매치가 있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인구가 많고, 종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센터는 행정 운영, 총무 파트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 있음. 지금은 사업팀 인력을 행정 운영 인력으로 활용하는 구조라 안정성이 떨어지고 종사자의 만족도도 낮음
- 채용 절차를 외주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센터장이 일년내내 채용만 하는 것처럼 느껴짐

### [센터에 미치는 영향: 사업]

-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여러 개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의 세부 요구에 맞게 공동육아나눔터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예: 초등 중심형 vs 영유아 중심형)
-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지방정부의 별도 예산 지원이 많고,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요구도 많아 사업의 종류가 다른 지역 센터보다 많음
- 지역 특성상 대상과 사업을 특화하고 싶어도, 가족센터의 정체성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나열할 수 밖에 없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작한 지역의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사업 인력이 소수인데 일반 가족, 맞벌이가족, 1인 가구, 노인가족, 한부모가족 등 대상이 너무 많음
- 특히 건강가정사업 파트의 종사자는 처우에 비해 사업량이 너무 많아 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낮음.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

### [여성가족부와 한가원에 대한 요구]

- 인구구조 변화에 관련하여 한가원의 조사 연구 기능과 컨설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센터 사업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음

- 코로나19 이후 가족센터 이용자의 특성이 변화한 것처럼 보임.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고, 프로그램 신청 후 실제 당일에 오지 않는 노쇼(no show) 비율이 높아졌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이후 요구도가 달라진 것인지 분석해주면 좋겠음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저출생 대응으로 많은 사업과 기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저출생, 인구문제 대응 위원회에 가족센터장이 초대되지 않음.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 부족 문제도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의 주체 중 하나로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음. 가족센터가 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먼저 저출생 문제의 정책 수행 부처가 되어야 함



# 제5장

## 종합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방향성 제언
3.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 제5장 종합 및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 1) 지역별 인구구조와 가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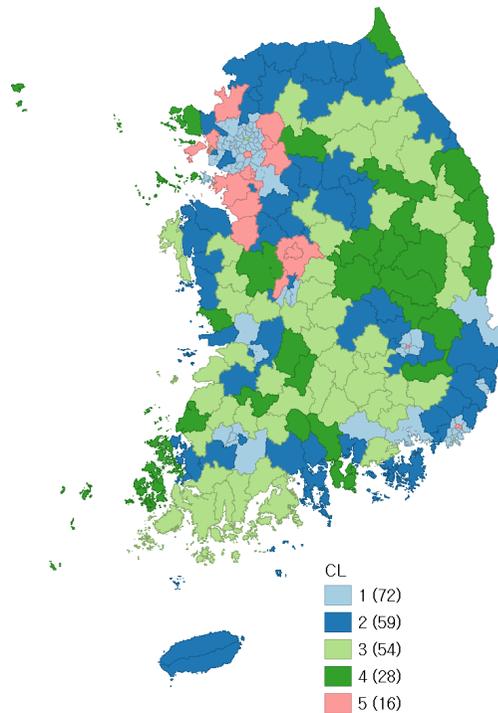
시군구 단위별 인구 및 가족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 규모, 유소년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합계출산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국제결혼 비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해보면, 총 5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유형(하늘색)은 인구 규모가 크고,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조혼인율은 높지만, 합계출산율은 낮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자치구 72개가 포함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파란색)은 인구는 많은 편이지만 유소년인구비율은 높지 않고,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이 모두 낮으며,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도권, 광역시에서 인접하거나 중소도시인 59개 시군구이다. 세 번째 유형(연두색)은 인구는 보통, 유소년인구 비율은 높은 편이며, 합계출산율도 높은 편이지만, 조혼인율이 보통 수준이고 조이혼율은 다소 높은 편인 수도권,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54개 시군구가 포함된다. 네 번째 유형(초록색)은 전체인구는 적은 편이고, 유소년인구 비율도 낮은 편이며, 조혼인율도 낮은 편이지만,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내륙산간 또는 해안가의 28개 군 지역이 포함되는 유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분홍색)은 전체인구가 많고,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고, 조이혼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시, 대도시의 일부 구 등 16개 시군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5개 유형 중 유형5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구가 감소 중이다. 유형5 처럼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형성되었거나,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두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유형3과 유형4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다. 유형3과 유형4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 인구 규모가 작아 소수의 출생아가 비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의 유형이 다르면, 가족센터의 이용자층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슷한 이용자층에서 출발하였어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가족센터의 이용자층이 달라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유형1, 유형3, 유형5의 지역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가족센터의 사업이나 기능도 달라야 한다.

그림 5-1 | 시군구별 인구 및 가구 특성 군집분석 결과



주: 1) 유형1(하늘색), 유형2(파랑색), 유형3(연두색), 유형4(초록색), 유형5(분홍색)

## 2) 지역별 가족센터 이용자 특성과 요구 변화

현재 가족센터의 주 서비스 대상은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가족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이 연령층 중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는 다문화가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다문화가족 비율이 월등 높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가 높으며, 특히 아동인구 및 청년인구감소, 노인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를 체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제공대상이 다양해지며 많아지고, 사업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동시에 서비스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지역주민 리더 발굴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체감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요구는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 인프라 및 다양한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은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 센터의 준비도는 7.0점(0~10점 범위) 수준이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이나 새로운 대상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한가원의 관련 주제 교육에 참여하는 편이나 센터 내부적인 역량 강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용자 현황 파악에 필수적인 회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센터는 약 절반에 불과하고, 회원 정보의 활용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회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기존 사업 중 가족상담, 부모역할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1인 가구 생활 지원 및 상담,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지역주민 간 교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센터가 많았다. 반면, 결혼이민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초기 정착 지원 및 취업지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등)은 축소, 유지, 확대 의견 비율이 비슷하여 지역별로 필요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센터들은 서비스 제공 방식의 다양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센터들은 비대면 교육, 상담, 문화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의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센터들은 상대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소통교류공간 등 공간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서비스 제공 방식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향후 더 차이가 있을 것을 전망할 수 있다.

## 2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방향성 제언

### 1) 지역에 맞는 특화 모델 개발과 운영

현재 상황에서는 2만명대 인구를 가진 지역부터 백만명대 인구를 가진 지역까지 가족센터가 동일한 「가족사업안내」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사업안내」에서는 센터 유형을 가형부터 마형까지 크게 5개 유형으로 나누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독립형과 다기능화형, 다문화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통합 유형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예산을 교부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독립형은 단독으로 건강가정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고, 다기능화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하위 사업으로 건강가정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형과 나형 구분은 사업실적(센터 이용 실인원 50%, 연인원 20%) 70%와 지역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30%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족센터로 통합된 이후에는 건강가정 사업과 다문화가족 사업의 결합 유형에 따라 가~마형으로 구분되어 예산이 교부된다(그림 5-2 참조). 그런데 이러한 구분에 따른 예산 차이가 크지 않고(가형과 나형 차이 4천만원), 기존 센터 운영 유형에 의존하여 결정되므로 인구구조의 변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림 5-2 | 가족사업안내의 센터 유형

○ 센터 유형별 예산지원액(서울 30%, 지방 50%)

(단위 : 개, 천원)

유형	국비지원 센터 수	개소당 지원액	비고
가형	31	459,600	(통합형) 건가 독립형+다문화 가형
나형	75	419,100	(통합형) 건가 독립형+다문화 나형 (통합형) 건가 다기능화+다문화 가형(인구 25만명 이상) (통합형) 건가 다기능화+다문화 나형(인구 25만명 이상)
다형	4	352,200	(통합형) 건가 다기능화+다문화 가형 (단독형) 건가 독립형(인구 25만명 이상)
라형	38	311,700	(통합형) 건가 다기능화+다문화 나형 (단독형) 건가 독립형, 다문화 가형 (단독형) 다문화 나형(인구 25만명 이상)
마형 ※ 울릉군	61	259,200	(단독형) 다문화 나형 ※ 울릉군 : 194,400

※ 개소당 지원액은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

출처: 2023 가족사업 안내. p72.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은 그동안 지역 영유아 1인당 시설 수 등 총량 기준으로 어린이집 수요-공급을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도보 이동시간, 교통망 등 생활권 중심 접근성으로 수요-공급을 판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규모에 기반한 인프라 공급과 관리가 유효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센터 공급과 운영도 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사업안내」에 의한 일률적인 사업 운영은 가족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향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시점이다.

제2장의 지역별 인구 및 가구구조 특성 군집분석 결과 지역이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5개 유형으로 가족센터를 특성화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사업 설계도 어려움이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각 모델로 특화하는 것이 예전과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특화 전략은 특화사업을 강조·확대하고 특화사업 외 사업 중 수요가 낮은 사업은 최소화하거나 종료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현재 가족센터

는 너무 많은 사업을 나열함으로써 운영상의 부담이 있고 전문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 대상으로 특화]

본 연구에서 유형3으로 분류된 지역에 적합한 가족센터 모델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역사를 시작한 곳이 대부분이다. 건강가정지원기본법(2004.2.9.)이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보다 먼저 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먼저 설치되기 시작되었으나, 확산 속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훨씬 빨랐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에 16개소로 시작하여 센터 통합 당시인 2014년에 전국 152개소가 있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 전국에 21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지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합한 시도 이후 두 기관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쳐 2022년부터는 가족센터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족센터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주된 대상이나 사업 예산, 프로그램 종류 면에서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월등히 많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105개 센터 중 다문화가족이 주된 이용층이라는 비율은 62%였다(〈표 4-3 참조〉).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국제결혼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199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이 증가하여 2005년 30,718건이 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율이 13.5%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국제결혼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결혼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에는 전체 15,341건(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11,100건,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4,241건)이었다. 즉, 전체 혼인 건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국제결혼 건수도 감소하는 추

세로 지역에 다문화가족 인구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 인구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및 유출 역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하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양군, 고흥군, 보성군), 경상북도(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경상남도 고성군, 대구광역시 남구,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등이다(법무부 공고, 2022.9.5., 2022.12.2.).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그 가족을 위해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보도자료(경상북도 보도자료, 2023,7.4.)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를 받은 외국인 주민과 그 가족을 위해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지원하는 전달체제로 글로벌 한글학교(가칭), 경북 비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기존 가족센터와 연계해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이 본격화되면 지역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외에 외국인 가족이 늘어날 수 있으며, 기존에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지역의 가족센터는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어있으므로, 내용의 일부 조정과 개선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년 가족 대상으로 특화]

본 연구에서 유형 2의 일부 지역과 유형 4로 분류된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다. 비수도권 지방이라도 모든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가족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제2장 인구구조 변화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령화 비율이 높고, 다문화가족 비율은 낮은 지역들이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경북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나 경남 남해군은 고령인구 비율은 상위 10위 안에 들면서, 다문화 혼인 비중은 하위 10위 안에 드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향후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가족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지역 외에도 대부분 지역은 유소년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존의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영유아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으로 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기존 대상의 새로운 요구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지역은 고령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노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서비스 기관은 노인 개인 단위의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은 악기교실, 가요교실,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인터넷 등 개인 단위의 취미·교양 교육을 제공하고, 물리치료, 운동교실,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등의 건강증진 서비스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센터가 노인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존 인프라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 가족센터는 기존의 전문적 독자성을 발휘하면서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중장년과 노인이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살거나 부부만 같이 사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대상 면에서는 중장년 대상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개인 단위보다는 부부 단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연령층에서는 50대, 60대에

집중하고, 부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상담, 교육,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부부만 함께 사는 기간이 20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누적된 부부 갈등을 다루는 가족상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관계를 증진하는 서비스는 가족센터의 강점이지만, 이 연령대는 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비스 대상층을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층의 전환은 프로그램 내용, 홍보방식, 서비스 전달방식 등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녀 중심의 부부교육에서 벗어나 부부의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둔 교육 내용의 개발, 교육 자료나 홍보지의 글자 크기 확대,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의 변경, 대면/비대면 서비스의 혼용 비율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가족센터에서 시행할 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은 한가원의 역할이다. 고령화 지역의 중장년기 가족 특성을 이해하고, 현재 및 미래 가족관계의 문제를 진단하여 가족관계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와 방법론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영유아기/학령기 가족 특화]

본 연구에서 유형1, 유형2의 일부 지역, 유형5로 분류된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센터의 핵심 대상층은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다.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 단위 활동, 아동 대상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등은 모두 이 대상층을 위해 개발되었고 시행된다. 이러한 사업은 가족센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잘 반영한다.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은 인천 미추홀구, 세종시, 경기 화성시, 인천 계양구, 울산 북구, 경기 김포시 등의 지역이나, 유소년인구 수가 십만 명이 넘는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창원시 등의 지역은 현재 가족센터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족

센터 사업의 수요는 충분하다. 가족센터의 현재 예산으로는 지역 내 유소년 자녀를 둔 가족 중 일부만 포괄하게 되므로 대상자 모집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족센터에서 이 대상을 특화한다면, 다문화가족만을 특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가족사업안내」에서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가 우선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센터가 이 사업들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센터의 예산이나 인적 자원의 규모를 볼 때, 모든 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현재 가족센터의 어려움 중 하나는 사업 종류가 너무 많고, 이를 운영할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유아기,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특정하는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축소하고, 기존 사업에 다문화가족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운영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전문성과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역의 가족 특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질적 수월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모교육을 제공할 때, 더 촘촘한 구성과 높은 강사의 질을 확보하여 참여자의 기대 수준에 부응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특화사업인 ‘서울가족학교’처럼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자가 증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지역 인구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 지원

### [1인 가구 사업의 다양성 모색]

1인 가구 증가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도시, 지방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방 정부에서도 대부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1인가구지원

센터 등 전달체계를 별도로 만드는 곳도 있고, 가족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곳도 있다. 지역의 1인 가구의 구성이나 정책환경이 다르므로 일괄적인 1인 가구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인 가구 사업의 대상 및 내용을 지역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센터의 1인 가구 사업은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취약계층이 아닌 중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가족을 만들 기회와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주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센터의 행정 기능 강화 및 자율성 보장]

2015년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센터의 규모가 커지고, 이후 1인 가구 사업, 지역별 특화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센터의 사업량이 급증하였다. 센터의 규모가 커지면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행정인력의 보수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센터들은 사업 인력의 일부를 행정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 센터에서 행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의 보수 현실화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센터 중 인구 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 센터가 38개이다. 이 중에는 인구 백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지역의 가족센터는 운영과 사업의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력 채용, 노무 관리, 조직 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40만 명이 넘어가는 지역에는 가족센터 분소를 추가 설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센터 평가지표 개선 및 자율성 제공]

전국적인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작년 대비 실적 증가를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실제 지역 센터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 센터는 각 지역에 맞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각 지역에 맞는 실적 목표 설정 및 관리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자율성에 대한 요구는 항상 존재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인구 규모와 구조의 편차가 점점 커지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센터 평가지표를 재검토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기 평가에서 센터 사업 전환에 필요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한가원의 역할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센터 모델 특화와 운영 지원 외에도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한가원에 기대되는 역할들이 있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기관으로서 홍보 및 자리매김]

한가원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총괄하여 사업을 개발하고, 전달체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가족정책은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결혼, 출산, 사망, 이동, 가구 형성 등 다양한 가족의 생애사건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한 파트를 차지한다. 따라서, 한가원이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가족정책과의 연결지점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은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저출생 대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에서 가족센터장이 지역의 인구정책 관련 협의체나 위원회에 참여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가족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정립해야 한

다. 지방정부가 가족센터를 인구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인식하려면 중앙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가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센터 상황에 맞는 사업방식 전환 및 전문인력 교육]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업 대상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센터 실무자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센터의 약 80%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전문강사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였고, 센터장 FGI에서도 언어치료사, 가족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치료 수요는 있지만, 이 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족센터는 전문적 언어치료 기관이 아니므로, 언어치료에 초점을 두기보다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가족상담사업도 상담전담인력을 필수로 배치하는 전략은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모든 지역에 필수화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센터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신, 가족이 온라인으로 언어치료나 가족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가원에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강사, 상담사, 언어치료사 등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으로 언어치료나 가족상담을 실시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한가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 반드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센터 상황에 맞는 종사자 교육]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가족센터 종사자의 연령대, 경력 등에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비교할 때 가족센터의 사업량이 많고 처우가 불리하여 근속연수도 짧은 편이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논외로 하더라도, 종사자의 짧은 근속연수 및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신입 종사자 대상의 한가원 교육이 더 쉽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종사자들은 한가원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빈도가 더 낮고 한가원 교육 의존도가 더 높은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종사자 교육이 수준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주제도 지역 센터의 현실에 맞는 주제여야 한다. AI 활용, 메타버스 활용 등 새로운 실천기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통계 검색 및 활용법 등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더 제공하고 비수도권 센터 종사자들에게 참여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한가원의 연구조사 기능 강화 및 데이터 활용]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한가원의 연구조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군구별 인구구조 변화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특징을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상에 대한 이해와 수요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는 지역센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므로 한가원 가족정책연구센터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familydb)를 통해 수집되는 전체 회원 DB를 분석하여 이용자 현황, 이용자층의 변화, 서비스 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개별센터의 절반 정도는 회원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 전처리, 구조화 등을 통해 기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지역 인구구조 고령화를 고려할 때, 향후 중장년 이상의 인구가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패밀리넷 회원가입 절차가 더 쉽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가족센터

프로그램은 주로 온라인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신청한다. 중고령자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X가 구성되어야 하며, 단계도 간단해야 한다. 회원가입이나 신청단계가 복잡하면 중도 포기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의 짧은 근속연수와 고령화를 고려할 때 한가원의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안정화도 필수적이다. 공통관리, 사업관리, 상담관리, 사업보고, 사업통계, 정보광장 등을 모두 포괄하는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부담을 크게 높여 사업의 안정성과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 3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시군구별 인구구조의 변화 분석, 지역센터 대상 설문조사, FGI, 기본계획 및 유관기관 동향 분석 등 여러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한가원에서 소관하는 가족 서비스의 발전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남기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유형화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탐색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군집분석에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유형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특성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은 소속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기보다 경향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센터가 전체 센터의 50%이고, 특히 광주, 충북, 전북, 강원 지역의 응답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인구변화 상황이 잘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모든 센터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별 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조사

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짧은 연구 기간의 한계로 지역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다. 유형화된 지역별로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 현장조사, 센터장 FGI 뿐 아니라 실무자 FGI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센터별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았다. 유형을 설명할 때 주려해야 할 사업과 축소해야 할 사업에 관해 제안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사업안내」의 개별 사업을 모두 분석, 평가해야 하므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한가원뿐 아니라 지역센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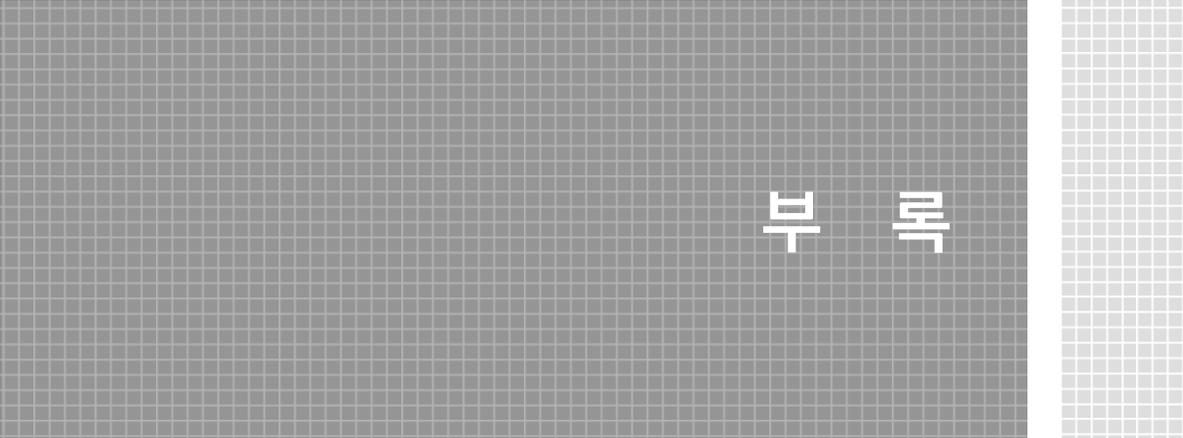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경상북도 보도자료(2023). 경북도,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준비 돌입.
- 관계기관 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 관계부처 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김선숙, 조소연, 김영우(2021). 아동권리보장원 정책연구 중장기 발전방안: 아동 연구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아동권리보장원
- 법무부 공고(2022.12.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 결과. 공고 제2022-408호.
- 법무부 공고(2022.9.5.). (제1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공고 제2022-278호.
- 보건복지부(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보건복지부(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1).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사업안내.
- 진미정(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정책의 과제. 가족정책연구 192), 1-13.
- 진미정, 변주수, 권순범(2014). 한국 가족생애주기의 변화: 1987년 공세권 연구와의 비교. 가족과 문화, 26(4), 1-24.





부 록



부록표 2-1 | 2022년 시군구별 인구구조 통계

지역	전체인구(명)	0-14세 인구(명)	0-14세 비율(%)	15~64세 인구(명)	15~64세 비율(%)	65세이상 인구(명)	고령인구 비율(%)
전국	51,439,038	5,890,594	11.5	36,281,154	71	9,267,290	18.0
서울특별시	9,428,372	907,819	9.6	6,862,346	73	1,658,207	17.6
종로구	141,379	11,121	7.9	102,554	73	27,704	19.6
중구	120,437	8,901	7.4	86,876	72	24,660	20.5
용산구	218,650	18,677	8.5	161,495	74	38,478	17.6
성동구	281,000	26,903	9.6	206,567	74	47,530	16.9
광진구	337,416	27,958	8.3	255,721	76	53,737	15.9
동대문구	336,644	29,476	8.8	242,913	72	64,255	19.1
종랑구	385,318	32,188	8.4	278,340	72	74,790	19.4
성북구	430,397	42,920	10.0	310,184	72	77,293	18.0
강북구	293,660	22,123	7.5	205,367	70	66,170	22.5
도봉구	311,694	26,616	8.5	218,136	70	66,942	21.5
노원구	503,734	50,770	10.1	361,018	72	91,946	18.3
은평구	466,746	42,981	9.2	334,343	72	89,422	19.2
서대문구	306,337	29,142	9.5	221,693	72	55,502	18.1
마포구	364,638	35,004	9.6	274,101	75	55,533	15.2
양천구	440,881	51,078	11.6	317,568	72	72,235	16.4
강서구	569,166	54,744	9.6	417,542	73	96,880	17.0
구로구	395,315	38,592	9.8	282,232	71	74,491	18.8
금천구	229,642	17,065	7.4	170,351	74	42,226	18.4
영등포구	375,675	35,239	9.4	277,087	74	63,349	16.9
동작구	380,596	34,036	8.9	278,688	73	67,872	17.8
관악구	486,752	29,963	6.2	374,941	77	81,848	16.8
서초구	404,325	51,932	12.8	290,165	72	62,228	15.4
강남구	529,102	62,278	11.8	385,260	73	81,564	15.4
송파구	658,801	75,568	11.5	479,872	73	103,361	15.7
강동구	460,067	52,544	11.4	329,332	72	78,191	17.0
부산광역시	3,317,812	340,589	10.3	2,264,811	68	712,412	21.5
중구	39,689	1,811	4.6	26,410	67	11,468	28.9
서구	105,192	8,688	8.3	68,072	65	28,432	27.0
동구	86,462	6,004	6.9	56,104	65	24,354	28.2
영도구	108,156	7,880	7.3	67,498	62	32,778	30.3
부산진구	355,917	31,415	8.8	248,817	70	75,685	21.3
동래구	273,226	32,401	11.9	185,944	68	54,881	20.1
남구	256,333	26,074	10.2	173,298	68	56,961	22.2
북구	278,857	27,914	10.0	195,175	70	55,768	20.0
해운대구	386,785	42,986	11.1	267,543	69	76,256	19.7
사하구	301,987	28,757	9.5	207,485	69	65,745	21.8
금정구	221,256	18,750	8.5	150,378	68	52,128	23.6
강서구	143,207	27,477	19.2	96,734	68	18,996	13.3
연제구	203,536	20,870	10.3	138,567	68	44,099	21.7
수영구	174,806	15,060	8.6	119,049	68	40,697	23.3
사상구	203,789	17,027	8.4	143,802	71	42,960	21.1

지역	전체인구(명)	0-14세 인구(명)	0-14세 비율(%)	15~64세 인구(명)	15~64세 비율(%)	65세이상 인구(명)	고령인구 비율(%)
기장군	178,614	27,475	15.4	119,935	67	31,204	17.5
대구광역시	2,363,691	264,447	11.2	1,663,546	70	435,698	18.4
중구	80,199	8,385	10.5	55,707	69	16,107	20.1
동구	339,530	35,891	10.6	230,285	68	73,354	21.6
서구	159,827	10,716	6.7	108,214	68	40,897	25.6
남구	141,519	9,838	7.0	96,091	68	35,590	25.1
북구	430,912	48,592	11.3	311,833	72	70,487	16.4
수성구	411,553	50,679	12.3	288,796	70	72,078	17.5
달서구	536,989	59,387	11.1	388,424	72	89,178	16.6
달성군	263,162	40,959	15.6	184,196	70	38,007	14.4
인천광역시	2,967,314	346,269	11.7	2,157,195	73	463,850	15.6
중구	152,931	19,415	12.7	110,150	72	23,366	15.3
동구	58,999	5,399	9.2	38,897	66	14,703	24.9
미추홀구	406,004	83,543	20.6	246,696	61	75,765	18.7
연수구	385,796	40,287	10.4	301,495	78	44,014	11.4
남동구	506,181	57,313	11.3	368,868	73	80,000	15.8
부평구	489,118	58,159	11.9	349,375	71	81,584	16.7
계양구	288,856	48,527	16.8	196,605	68	43,724	15.1
서구	589,013	27,071	4.6	492,111	84	69,831	11.9
강화군	69,803	5,242	7.5	39,798	57	24,763	35.5
옹진군	20,613	1,313	6.4	13,200	64	6,100	29.6
광주광역시	1,431,050	181,150	12.7	1,026,930	72	222,970	15.6
동구	105,909	11,241	10.6	71,249	67	23,419	22.1
서구	287,401	32,643	11.4	208,773	73	45,985	16.0
남구	212,379	27,299	12.9	144,340	68	40,740	19.2
북구	424,707	50,330	11.9	303,543	71	70,834	16.7
광산구	400,654	59,637	14.9	299,025	75	41,992	10.5
대전광역시	1,446,072	170,784	11.8	1,042,625	72	232,663	16.1
동구	219,751	22,311	10.2	151,545	69	45,895	20.9
중구	227,108	22,842	10.1	155,552	69	48,714	21.4
서구	470,374	57,295	12.2	345,155	73	67,924	14.4
유성구	356,093	51,413	14.4	265,834	75	38,846	10.9
대덕구	172,746	16,923	9.8	124,539	72	31,284	18.1
울산광역시	1,110,663	141,660	12.8	805,191	73	163,812	14.7
중구	208,132	23,750	11	147,259	70.8	37,123	18
남구	310,638	35,472	11.4	230,847	74	44,319	14.3
동구	151,711	20,862	13.8	107,726	71	23,123	15.2
북구	218,670	35,733	16.3	161,447	74	21,490	9.8
울주군	221,512	25,843	11.7	157,912	71	37,757	17.0
세종특별자치시	383,591	73,508	19.2	269,864	70	40,219	10.5
경기도	13,589,432	1,716,426	12.6	9,880,199	73	1,992,807	14.7
수원시	1,190,964	143,724	12.1	900,118	76	147,122	12.4
성남시	922,518	104,521	11.3	673,197	73	144,800	15.7
의정부시	463,724	51,534	11.1	334,635	72	77,555	16.7

지역	전체인구(명)	0-14세 인구(명)	0-14세 비율(%)	15-64세 인구(명)	15-64세 비율(%)	65세이상 인구(명)	고령인구 비율(%)
안양시	548,228	61,002	11.1	402,836	74	84,390	15.4
부천시	790,128	80,949	10.2	583,427	74	125,752	15.9
광명시	287,945	34,585	12.0	208,232	72	45,128	15.7
평택시	578,529	78,206	13.5	426,951	74	73,372	12.7
동두천시	91,546	9,390	10.3	61,692	67	20,464	22.4
안산시	641,660	65,708	10.2	494,441	77	81,511	12.7
고양시	1,076,535	123,815	11.5	789,640	73	163,080	15.1
과천시	78,137	11,253	14.4	55,744	71	11,140	14.3
구리시	188,701	21,154	11.2	138,374	73	29,173	15.5
남양주시	737,353	100,590	13.6	521,598	71	115,165	15.6
오산시	229,849	33,291	14.5	171,321	75	25,237	11.0
시흥시	512,912	71,641	14.0	386,515	75	54,756	10.7
군포시	266,213	29,195	11.0	196,266	74	40,752	15.3
의왕시	160,221	18,746	11.7	116,521	73	24,954	15.6
하남시	326,059	49,166	15.1	232,275	71	44,618	13.7
용인시	1,074,971	149,360	13.9	768,385	72	157,226	14.6
파주시	495,315	69,523	14.0	352,249	71	73,543	14.8
이천시	222,721	27,661	12.4	160,310	72	34,750	15.6
안성시	188,842	21,095	11.2	131,463	70	36,284	19.2
김포시	484,267	78,559	16.2	338,850	70	66,858	13.8
화성시	910,814	155,477	17.1	666,003	73	89,334	9.8
광주시	391,462	49,763	12.7	282,251	72	59,448	15.2
양주시	243,432	32,138	13.2	169,408	70	41,886	17.2
포천시	146,701	12,755	8.7	101,083	69	32,863	22.4
여주시	113,150	11,187	9.9	74,694	66	27,269	24.1
연천군	42,062	3,709	8.8	26,034	62	12,319	29.3
가평군	62,150	5,058	8.1	39,251	63	17,841	28.7
양평군	122,323	11,671	9.5	76,435	63	34,217	28.0
강원도	1,536,498	160,725	10.5	1,025,899	67	349,874	22.8
춘천시	286,664	33,277	11.6	197,585	69	55,802	19.5
원주시	360,807	44,076	12.2	255,976	71	60,755	16.8
강릉시	211,381	20,772	9.8	141,034	67	49,575	23.5
동해시	89,426	10,030	11.2	59,413	67	19,983	22.3
태백시	39,428	3,780	9.6	24,684	63	10,964	27.8
속초시	82,806	8,936	10.8	56,319	68	17,551	21.2
삼척시	63,455	5,673	8.9	40,322	64	17,460	27.5
홍천군	67,977	5,673	8.3	42,141	62	20,163	29.7
횡성군	46,532	3,422	7.4	27,888	60	15,222	32.7
영월군	37,728	2,601	6.9	22,916	61	12,211	32.4
평창군	40,990	2,855	7.0	25,239	62	12,896	31.5
정선군	34,931	2,621	7.5	21,464	62	10,846	31.0
철원군	42,256	4,591	10.9	27,008	64	10,657	25.2
화천군	23,388	2,386	10.2	15,093	65	5,909	25.3
양구군	21,383	2,390	11.2	13,921	65	5,072	23.7

지역	전체인구(명)	0-14세 인구(명)	0-14세 비율(%)	15-64세 인구(명)	15-64세 비율(%)	65세이상 인구(명)	고령인구 비율(%)
인제군	32,206	3,563	11.1	21,374	66	7,269	22.6
고성군	27,274	2,070	7.6	16,687	61	8,517	31.2
양양군	27,866	2,009	7.2	16,835	60	9,022	32.4
충청북도	1,595,058	182,746	11.5	1,095,373	69	316,939	19.9
충주시	208,277	21,988	10.6	140,337	67	45,952	22.1
제천시	130,988	12,933	9.9	85,910	66	32,145	24.5
청주시	849,573	109,902	12.9	612,617	72	127,054	15.0
보은군	31,455	2,176	6.9	17,484	56	11,795	37.5
옥천군	49,520	3,944	8.0	29,311	59	16,265	32.8
영동군	44,956	3,278	7.3	25,911	58	15,767	35.1
진천군	86,147	11,389	13.2	59,472	69	15,286	17.7
괴산군	37,055	2,113	5.7	20,995	57	13,947	37.6
음성군	92,058	8,651	9.4	61,599	67	21,808	23.7
단양군	27,767	1,785	6.4	16,326	59	9,656	34.8
증평군	37,262	4,587	12.3	25,411	68	7,264	19.5
충청남도	2,123,037	255,585	12.0	1,430,557	67	436,895	20.6
천안시	657,559	88,900	13.5	487,893	74	80,766	12.3
공주시	102,571	8,524	8.3	64,595	63	29,452	28.7
보령시	97,157	9,069	9.3	60,347	62	27,741	28.6
아산시	334,539	51,007	15.2	236,520	71	47,012	14.1
서산시	176,413	22,688	12.9	118,402	67	35,323	20.0
논산시	112,617	10,613	9.4	69,388	62	32,616	29.0
계룡시	44,475	6,606	14.9	31,895	72	5,974	13.4
당진시	168,253	22,411	13.3	111,927	67	33,915	20.2
금산군	50,092	4,024	8.0	28,991	58	17,077	34.1
부여군	62,343	4,393	7.0	34,293	55	23,657	37.9
서천군	49,964	3,519	7.0	26,853	54	19,592	39.2
청양군	30,266	1,939	6.4	16,821	56	11,506	38.0
홍성군	98,068	11,473	11.7	61,361	63	25,234	25.7
예산군	77,385	5,856	7.6	45,470	59	26,059	33.7
태안군	61,335	4,563	7.4	35,801	58	20,971	34.2
전라북도	1,769,607	192,857	10.9	1,166,131	66	410,619	23.2
전주시	651,495	82,176	12.6	461,962	71	107,357	16.5
군산시	262,467	31,004	11.8	176,466	67	54,997	21.0
익산시	273,697	28,548	10.4	185,104	68	60,045	21.9
정읍시	105,081	9,594	9.1	64,131	61	31,356	29.8
남원시	77,948	7,412	9.5	46,845	60	23,691	30.4
김제시	81,455	6,551	8.0	47,409	58	27,495	33.8
완주군	92,422	10,372	11.2	59,100	64	22,950	24.8
진안군	24,550	1,718	7.0	13,572	55	9,260	37.7
무주군	23,489	1,800	7.7	13,296	57	8,393	35.7
장수군	21,336	1,717	8.0	11,767	55	7,852	36.8
임실군	26,508	1,993	7.5	14,245	54	10,270	38.7
순창군	26,727	2,117	7.9	14,963	56	9,647	36.1

지역	전체인구(명)	0-14세 인구(명)	0-14세 비율(%)	15-64세 인구(명)	15-64세 비율(%)	65세이상 인구(명)	고령인구 비율(%)
고창군	52,338	4,068	7.8	28,906	55	19,364	37.0
부안군	50,094	3,787	7.6	28,365	57	17,942	35.8
전라남도	1,817,697	195,765	10.8	1,164,451	64	457,481	25.2
목포시	216,939	27,044	12.5	149,090	69	40,805	18.8
여수시	274,765	30,805	11.2	185,162	67	58,798	21.4
순천시	278,737	35,626	12.8	195,050	70	48,061	17.2
나주시	116,456	14,614	12.5	74,354	64	27,488	23.6
광양시	152,168	20,002	13.1	109,835	72	22,331	14.7
담양군	45,792	3,429	7.5	27,305	60	15,058	32.9
곡성군	27,060	1,645	6.1	15,047	56	10,368	38.3
구례군	24,655	1,755	7.1	13,831	56	9,069	36.8
고흥군	61,880	3,843	6.2	31,320	51	26,717	43.2
보성군	38,471	2,457	6.4	20,180	52	15,834	41.2
화순군	62,024	5,405	8.7	38,938	63	17,681	28.5
장흥군	35,650	2,806	7.9	19,783	56	13,061	36.6
강진군	33,177	2,546	7.7	18,353	55	12,278	37.0
해남군	65,831	5,592	8.5	37,327	57	22,912	34.8
영암군	52,395	4,899	9.4	32,567	62	14,929	28.5
무안군	90,608	13,049	14.4	59,136	65	18,423	20.3
함평군	30,784	1,994	6.5	16,739	54	12,051	39.1
영광군	52,197	5,479	10.5	30,719	59	15,999	30.7
장성군	43,146	3,727	8.6	25,540	59	13,879	32.2
완도군	47,597	4,368	9.2	26,685	56	16,544	34.8
진도군	29,507	2,423	8.2	16,544	56	10,540	35.7
신안군	37,858	2,257	6.0	20,946	55	14,655	38.7
경상북도	2,600,492	275,711	10.6	1,706,506	66	618,275	23.8
포항시	496,650	58,206	11.7	339,760	68	98,684	19.9
경주시	249,607	24,232	9.7	163,514	66	61,861	24.8
김천시	139,324	15,326	11.0	89,204	64	34,794	25.0
안동시	154,610	15,641	10.1	97,704	63	41,265	26.7
구미시	408,110	58,253	14.3	304,618	75	45,239	11.1
영주시	100,749	9,532	9.5	61,463	61	29,754	29.5
영천시	101,088	8,386	8.3	61,835	61	30,867	30.5
상주시	94,823	8,016	8.5	54,884	58	31,923	33.7
문경시	70,373	6,067	8.6	41,439	59	22,867	32.5
경산시	267,725	29,817	11.1	188,192	70	49,716	18.6
국위군	23,340	1,036	4.4	12,239	53	10,065	43.1
의성군	50,186	2,741	5.5	25,232	50	22,213	44.3
청송군	24,295	1,376	5.7	13,097	54	9,822	40.4
영양군	16,022	1,019	6.4	8,597	54	6,406	40.0
영덕군	34,650	2,296	6.6	18,348	53	14,006	40.4
청도군	41,614	2,277	5.5	22,441	54	16,896	40.6
고령군	30,353	2,029	6.7	17,827	59	10,497	34.6
성주군	42,566	2,721	6.4	24,867	58	14,978	35.2

지역	전체인구(명)	0-14세 인구(명)	0-14세 비율(%)	15~64세 인구(명)	15~64세 비율(%)	65세이상 인구(명)	고령인구 비율(%)
칠곡군	112,487	13,472	12.0	79,006	70	20,009	17.8
예천군	55,755	6,724	12.1	31,393	56	17,638	31.6
봉화군	30,139	1,873	6.2	16,286	54	11,980	39.7
울진군	47,030	4,126	8.8	28,620	61	14,284	30.4
울릉군	8,996	545	6.1	5,940	66	2,511	27.9
경상남도	3,280,493	393,068	12.0	2,248,624	69	638,801	19.5
진주시	343,782	42,405	12.3	237,039	69	64,338	18.7
통영시	122,681	14,213	11.6	80,947	66	27,521	22.4
사천시	109,369	12,338	11.3	70,699	65	26,332	24.1
김해시	535,129	72,655	13.6	392,266	73	70,208	13.1
밀양시	102,945	8,399	8.2	62,112	60	32,434	31.5
거제시	236,662	36,752	15.5	168,680	71	31,230	13.2
양산시	353,792	49,224	13.9	248,901	70	55,667	15.7
창원시	1,021,487	122,651	12.0	728,563	71	170,273	16.7
의령군	26,061	1,613	6.2	14,136	54	10,312	39.6
함안군	61,456	6,086	9.9	37,992	62	17,378	28.3
창녕군	58,372	4,412	7.6	33,803	58	20,157	34.5
고성군	50,448	3,903	7.7	29,514	59	17,031	33.8
남해군	41,579	2,735	6.6	22,132	53	16,712	40.2
하동군	42,465	2,682	6.3	23,654	56	16,129	38.0
산청군	34,028	1,989	5.8	18,521	55	13,518	39.7
함양군	37,708	2,828	7.5	21,111	56	13,769	36.5
거창군	60,387	5,791	9.6	36,561	61	18,035	29.9
합천군	42,142	2,392	5.7	21,993	52	17,757	42.1
제주특별자치도	678,159	91,485	13.5	470,906	69	115,768	17.1
제주시	493,389	68,327	13.8	347,698	71	77,364	15.7
서귀포시	184,770	23,158	12.5	123,208	67	38,404	20.8

부록표 2-2 | 시도별 가구유형 규모, 2023년, 2030년

지역	가구유형	2023년	2030년
전국	계	21,833,527	23,180,129
	부부	3,851,542	4,625,202
	부부+미혼자녀	5,918,910	5,474,120
	부+미혼자녀	511,026	516,053
	모+미혼자녀	1,545,227	1,589,496
	기타	2,168,247	2,122,494
	1인 가구	7,341,206	8,255,041
서울	계	4,065,517	4,125,598
	부부	610,250	720,462
	부부+미혼자녀	1,063,567	940,002
	부+미혼자녀	80,580	76,126
	모+미혼자녀	290,630	285,983
	기타	406,488	373,253
	1인 가구	1,509,488	1,608,520
	비친족가구	104,514	121,252
부산	계	1,438,970	1,447,065
	부부	272,590	318,410
	부부+미혼자녀	370,028	314,704
	부+미혼자녀	31,501	29,136
	모+미혼자녀	111,268	106,076
	기타	132,880	121,799
	1인 가구	494,143	526,974
비친족가구	26,560	29,966	
대구	계	1,004,315	1,010,812
	부부	183,516	217,266
	부부+미혼자녀	283,742	241,739
	부+미혼자녀	23,502	21,891
	모+미혼자녀	79,917	76,833
	기타	89,492	81,576
	1인 가구	330,770	356,783
비친족가구	13,376	14,724	
인천	계	1,211,606	1,302,222
	부부	198,346	248,983
	부부+미혼자녀	360,076	331,737
	부+미혼자녀	31,434	31,146
	모+미혼자녀	98,551	102,741
	기타	123,399	120,712
	1인 가구	366,683	426,347
비친족가구	33,117	40,556	

지역	가구유형	2023년	2030년
광주	계	625,512	650,746
	부부	100,839	123,020
	부부+미혼자녀	168,967	148,681
	부+미혼자녀	18,069	18,380
	모+미혼자녀	52,890	52,709
	기타	56,133	53,583
	1인 가구	217,041	240,319
	비친족가구	11,573	14,054
대전	계	650,745	667,632
	부부	107,351	129,502
	부부+미혼자녀	167,384	146,910
	부+미혼자녀	14,597	13,867
	모+미혼자녀	45,699	44,433
	기타	53,109	48,931
	1인 가구	248,550	267,700
	비친족가구	14,055	16,289
울산	계	454,512	462,594
	부부	89,805	107,833
	부부+미혼자녀	149,085	129,329
	부+미혼자녀	11,549	11,216
	모+미혼자녀	28,707	27,812
	기타	35,009	33,834
	1인 가구	133,410	145,069
	비친족가구	6,947	7,501
세종	계	157,769	218,051
	부부	25,215	40,691
	부부+미혼자녀	53,791	68,916
	부+미혼자녀	3,175	3,871
	모+미혼자녀	9,253	11,841
	기타	12,249	14,733
	1인 가구	50,854	73,207
	비친족가구	3,232	4,792
경기	계	5,466,272	6,155,620
	부부	894,830	1,159,406
	부부+미혼자녀	1,745,250	1,731,041
	부+미혼자녀	129,893	138,746
	모+미혼자녀	392,036	434,566
	기타	563,061	573,718
	1인 가구	1,607,147	1,947,353
	비친족가구	134,055	170,790

지역	가구유형	2023년	2030년
강원	계	692,434	743,835
	부부	143,900	166,132
	부부+미혼자녀	145,313	133,696
	부+미혼자녀	16,267	16,635
	모+미혼자녀	44,516	46,007
	기타	72,823	73,067
	1인 가구	253,830	289,429
	비친족가구	15,785	18,869
충북	계	713,818	774,791
	부부	138,042	163,204
	부부+미혼자녀	166,627	156,988
	부+미혼자녀	17,018	17,940
	모+미혼자녀	46,210	49,054
	기타	68,623	69,362
	1인 가구	260,801	298,186
	비친족가구	16,497	20,057
충남	계	941,642	1,028,335
	부부	181,701	209,181
	부부+미혼자녀	220,353	211,780
	부+미혼자녀	21,848	23,536
	모+미혼자녀	56,062	60,719
	기타	97,076	100,774
	1인 가구	338,853	391,300
	비친족가구	25,749	31,045
전북	계	778,545	794,286
	부부	154,887	170,885
	부부+미혼자녀	168,413	145,700
	부+미혼자녀	20,563	20,551
	모+미혼자녀	55,175	54,191
	기타	84,912	83,096
	1인 가구	279,606	302,053
	비친족가구	14,989	17,810
전남	계	783,395	805,811
	부부	168,646	181,565
	부부+미혼자녀	155,013	137,253
	부+미혼자녀	21,847	22,400
	모+미혼자녀	49,071	49,289
	기타	92,903	92,437
	1인 가구	277,705	301,327
	비친족가구	18,210	21,540

지역	가구유형	2023년	2030년
경북	계	1,171,242	1,216,217
	부부	257,352	287,910
	부부+미혼자녀	253,881	225,346
	부+미혼자녀	26,358	26,548
	모+미혼자녀	69,830	70,879
	기타	115,071	115,088
	1인 가구	422,895	460,725
	비친족가구	25,855	29,721
경남	계	1,397,659	1,466,156
	부부	279,150	325,530
	부부+미혼자녀	378,388	344,588
	부+미혼자녀	34,549	35,124
	모+미혼자녀	93,052	92,385
	기타	131,012	129,609
	1인 가구	457,408	510,969
	비친족가구	24,100	27,951
제주	계	279,574	310,358
	부부	45,122	55,222
	부부+미혼자녀	69,032	65,710
	부+미혼자녀	8,276	8,940
	모+미혼자녀	22,360	23,978
	기타	34,007	36,922
	1인 가구	92,022	108,780
	비친족가구	8,755	10,806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10. 2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부록표 2-3 | 2022년 시군구별 혼인 통계

지역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다문화 혼인 건수(건)	다문화 혼인 비중(%)
전국	191,690	3.7	13,926	7.2
서울특별시	35,752	3.8	3,112	8.2
종로구	486	3.5	56	11.4
중구	511	4.3	72	11.8
용산구	948	4.4	131	12.7
성동구	1,179	4.2	106	8.1
광진구	1,317	3.9	127	8.9
동대문구	1,201	3.6	110	8.8
중랑구	1,723	4.5	94	5.7
성북구	1,429	3.3	102	6.8
강북구	838	2.9	61	6.7
도봉구	940	3.0	61	6.3
노원구	1,748	3.5	100	5.6
은평구	1,585	3.4	121	7.4
서대문구	1,051	3.5	82	7.7
마포구	1,520	4.2	163	10.1
양천구	1,339	3.0	98	7.1
강서구	2,614	4.6	173	6.4
구로구	1,562	4.0	202	11.6
금천구	1,149	5.0	127	11.5
영등포구	1,978	5.3	211	9.9
동작구	1,481	3.9	127	7.9
관악구	1,981	4.1	189	8.8
서초구	1,306	3.2	109	7.3
강남구	1,666	3.2	181	10.3
송파구	2,555	3.9	185	7
강동구	1,645	3.6	124	6.4
부산광역시	10,618	3.2	614	5.5
중구	125	3.1	16	9.6
서구	319	3.1	16	4.5
동구	339	3.9	26	6.6
영도구	286	2.6	19	6.1
부산진구	1,244	3.5	65	4.9
동래구	768	2.9	38	4.7
남구	671	2.6	45	6.3
북구	983	3.5	45	4.6
해운대구	1,048	2.7	71	6.1
사하구	990	3.3	66	6.8
금정구	590	2.6	38	5.8
강서구	651	4.6	27	3.8
연제구	665	3.3	19	2.7
수영구	624	3.6	43	7.4
사상구	616	3.0	44	6

지역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다문화 혼인 건수(건)	다문화 혼인 비중(%)
기장군	699	3.9	36	5.5
대구광역시	7,497	3.2	474	6.4
중구	357	4.7	25	8.5
동구	1,254	3.7	57	4.6
서구	407	2.5	34	8.1
남구	467	3.3	34	7.1
북구	1,394	3.2	76	5.7
수성구	946	2.3	59	5.8
달서구	1,599	3.0	121	7.7
달성군	1,073	4.1	68	6.6
인천광역시	10,849	3.7	887	8
중구	671	4.6	83	11.5
동구	213	3.6	17	8.6
미추홀구(남구)	1,651	4.1	128	8
연수구	1,229	3.2	111	7.4
남동구	1,785	3.5	143	7.8
부평구	1,791	3.7	153	8.4
계양구	1,004	3.5	72	7
서구	2,268	4.0	168	8
강화군	166	2.4	11	5.8
옹진군	71	3.5	1	1.1
광주광역시	4,902	3.4	274	5.5
동구	381	3.7	16	4.3
서구	902	3.1	46	5
남구	660	3.1	17	2.9
북구	1,504	3.5	69	4.5
광산구	1,455	3.6	126	8.2
대전광역시	5,662	3.9	278	5.1
동구	782	3.6	49	6.3
중구	729	3.2	40	6
서구	1,888	4.0	81	4.3
유성구	1,588	4.5	70	4.7
대덕구	675	3.9	38	5.8
울산광역시	4,013	3.6	215	5.2
중구	645	3.1	40	6
남구	1,141	3.7	63	5.3
동구	498	3.3	35	6.5
북구	918	4.2	27	2.9
울주군	811	3.7	50	6.5
세종특별자치시	1,664	4.4	69	4.2
세종시	1,664	4.4	69	4.2
경기도	54,178	4.0	4,341	7.8
수원시	5,111	4.3	357	6.7
성남시	3,865	4.2	278	7.6

지역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다문화 혼인 건수(건)	다문화 혼인 비중(%)
의정부시	1,732	3.8	126	7.6
안양시	2,305	4.2	121	5.4
부천시	3,013	3.8	276	8.4
광명시	1,113	3.9	53	4.8
평택시	2,915	5.1	363	12.1
동두천시	312	3.4	36	10.7
안산시	2,620	4.1	325	11.9
고양시	3,905	3.6	301	7.1
과천시	484	6.4	18	5.2
구리시	691	3.7	38	5.5
남양주시	2,586	3.5	139	5.6
오산시	1,019	4.4	99	9.7
시흥시	2,305	4.5	282	11.8
군포시	1,053	4.0	72	6.4
의왕시	621	3.9	36	5.9
하남시	1,379	4.3	90	5.5
용인시	3,504	3.3	286	7.9
파주시	2,014	4.1	141	7.3
이천시	948	4.3	65	6.2
안성시	684	3.6	74	9.4
김포시	1,796	3.7	144	7.6
화성시	4,124	4.6	307	7
광주시	1,521	3.9	116	7
양주시	863	3.6	61	7.7
포천시	606	4.1	64	12
여주시	376	3.3	22	6.5
연천군	168	4.0	6	3.7
가평군	220	3.6	27	11.7
양평군	325	2.7	18	4.9
강원도	5,572	3.6	317	5.6
춘천시	1,048	3.7	49	4.7
원주시	1,457	4.1	70	4.7
강릉시	691	3.3	40	5
동해시	300	3.4	25	7.3
태백시	99	2.5	10	11.5
속초시	309	3.8	21	6.8
삼척시	190	3.0	6	3.3
홍천군	229	3.4	18	7.5
횡성군	107	2.3	9	7.5
영월군	100	2.7	4	4.2
평창군	115	2.8	8	7.1
정선군	99	2.8	15	13.5
철원군	178	4.2	13	6.8
화천군	151	6.4	4	3

지역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다문화 혼인 건수(건)	다문화 혼인 비중(%)
양구군	102	4.7	7	7.1
인제군	187	5.8	7	4.9
고성군	111	4.1	3	3.2
양양군	99	3.6	8	10.3
충청북도	6,185	3.9	440	7.4
충주시	783	3.8	58	7.7
제천시	449	3.4	26	6.5
청주시	3,596	4.2	208	5.9
보은군	78	2.5	7	11.5
옥천군	114	2.3	10	8.6
영동군	100	2.2	11	11.1
진천군	376	4.4	48	12.6
괴산군	88	2.3	6	7.7
음성군	335	3.7	50	14.9
단양군	66	2.4	8	9.8
증평군	200	5.4	8	5.6
충청남도	8,017	3.8	649	8
천안시	2,785	4.2	212	7
공주시	300	2.9	16	6.1
보령시	319	3.3	24	7.6
아산시	1,421	4.3	150	10.3
서산시	751	4.3	52	6.9
논산시	356	3.1	32	10
계룡시	132	3.0	5	4.2
당진시	725	4.3	57	8.2
금산군	134	2.7	17	15.6
부여군	162	2.6	15	10
서천군	105	2.1	4	3.6
청양군	67	2.2	8	11.1
홍성군	325	3.3	15	5
예산군	214	2.8	25	12.4
태안군	221	3.6	17	7.9
전라북도	5,394	3.0	378	7
전주시	2,299	3.5	107	4.8
군산시	817	3.1	82	9.7
익산시	692	2.5	61	6.9
정읍시	281	2.7	21	7.7
남원시	207	2.6	20	12
김제시	229	2.8	20	9.6
완주군	334	3.6	17	6
진안군	50	2.0	2	3.8
무주군	50	2.1	4	6.9
장수군	51	2.4	2	5
임실군	69	2.6	7	11.9

지역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다문화 혼인 건수(건)	다문화 혼인 비중(%)
순창군	51	1.9	2	4.8
고창군	135	2.6	19	14.5
부안군	129	2.6	14	10.7
전라남도	6,181	3.4	436	7
목포시	701	3.2	51	7
여수시	1,103	4.0	62	5.7
순천시	1,056	3.8	46	4.4
나주시	444	3.8	43	8.2
광양시	638	4.2	36	6.1
담양군	124	2.7	13	11.9
곡성군	49	1.8	3	6.3
구례군	49	2.0	2	3.8
고흥군	141	2.3	14	10.1
보성군	93	2.4	15	15.5
화순군	182	2.9	11	5.9
장흥군	103	2.9	12	11.2
강진군	80	2.4	6	8
해남군	187	2.8	20	12.4
영암군	199	3.8	26	14.1
무안군	367	4.0	16	3.8
함평군	77	2.5	8	13.1
영광군	160	3.1	9	5.1
장성군	111	2.6	9	8.3
완도군	129	2.7	16	11.3
진도군	76	2.6	11	13.4
신안군	112	3.0	7	6.1
경상북도	8,180	3.1	493	6
포항시	1,743	3.5	85	4.5
경주시	765	3.1	55	7.1
김천시	404	2.9	33	7.4
안동시	443	2.9	23	5.1
구미시	1,510	3.7	69	4.7
영주시	297	2.9	8	2.8
영천시	339	3.3	29	9.1
상주시	265	2.8	16	7.2
문경시	166	2.4	8	4.8
경산시	902	3.4	71	8
군위군	33	1.4	1	2.9
의성군	85	1.7	7	7.8
청송군	67	2.7	7	10.9
영양군	39	2.4	3	7
영덕군	81	2.3	2	3.1
청도군	87	2.1	5	6.8
고령군	56	1.8	7	11.5

지역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다문화 혼인 건수(건)	다문화 혼인 비중(%)
성주군	98	2.3	15	13
칠곡군	370	3.3	31	8.2
예천군	182	3.3	3	1.6
봉화군	62	2.0	7	10.3
울진군	155	3.3	8	5.4
울릉군	31	3.5	0	0
경상남도	10,504	3.2	661	6.2
진주시	1,101	3.2	67	5
통영시	353	2.9	19	5.5
사천시	352	3.2	22	5.8
김해시	1,829	3.4	133	7.2
밀양시	253	2.5	26	9.2
거제시	771	3.2	57	7.5
양산시	1,212	3.4	74	5.7
창원시	3,630	3.5	179	5.2
의령군	58	2.2	6	10.9
함안군	121	2.0	13	9.7
창녕군	125	2.1	17	12.2
고성군	111	2.2	11	11.3
남해군	84	2.0	0	0
하동군	89	2.1	4	4.3
산청군	73	2.1	6	7.8
함양군	90	2.4	6	8.5
거창군	163	2.7	12	8.5
합천군	89	2.1	9	12
제주특별자치도	2,718	4.0	208	7.7
제주시	2,034	4.1	134	6.9
서귀포시	684	3.7	74	10.1

자료: 통계청(2021년). 인구동향조사.

부록표 2-4 | 2022년 시군구별 출산 통계

(단위: 명)

지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전국	249,186	0.778
서울특별시	42,602	0.593
종로구	464	0.477
중구	587	0.606
용산구	1,110	0.596
성동구	1,690	0.723
광진구	1,278	0.461
동대문구	1,475	0.620
중랑구	1,860	0.659
성북구	1,896	0.649
강북구	855	0.483
도봉구	1,092	0.573
노원구	2,246	0.716
은평구	2,072	0.613
서대문구	1,363	0.607
마포구	1,761	0.529
양천구	1,682	0.608
강서구	2,865	0.588
구로구	2,057	0.684
금천구	1,004	0.588
영등포구	2,262	0.671
동작구	1,696	0.567
관악구	1,615	0.422
서초구	1,864	0.599
강남구	1,996	0.490
송파구	3,284	0.598
강동구	2,528	0.719
부산광역시	14,134	0.723
중구	101	0.462
서구	344	0.649
동구	370	0.735
영도구	321	0.692
부산진구	1,498	0.624
동래구	1,271	0.819
남구	832	0.619
북구	1,321	0.816
해운대구	1,512	0.682
사하구	1,172	0.725
금정구	663	0.580
강서구	1,283	1.179
연제구	945	0.737
수영구	777	0.646
사상구	689	0.604
기장군	1,035	0.956

지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대구광역시	10,134	0.757
중구	448	0.804
동구	1,594	0.795
서구	348	0.459
남구	403	0.492
북구	1,962	0.805
수성구	1,413	0.690
달서구	2,012	0.676
달성군	1,954	1.135
인천광역시	14,464	0.747
중구	846	0.803
동구	203	0.679
미추홀구(남구)	1,757	0.673
연수구	2,294	0.850
남동구	2,157	0.663
부평구	2,227	0.675
계양구	1,150	0.626
서구	3,496	0.867
강화군	266	1.126
옹진군	68	0.995
광주광역시	7,446	0.844
동구	647	0.960
서구	1,237	0.701
남구	999	0.813
북구	2,228	0.846
광산구	2,335	0.933
대전광역시	7,677	0.842
동구	915	0.788
중구	897	0.713
서구	2,555	0.795
유성구	2,469	0.958
대덕구	841	0.913
울산광역시	5,399	0.848
중구	736	0.652
남구	1,511	0.800
동구	610	0.733
북구	1,415	1.010
울주군	1,127	1.025
세종특별자치시	3,209	1.121
세종시	3,209	1.121
경기도	75,323	0.839
수원시	6,558	0.765
성남시	4,966	0.761
의정부시	2,269	0.762
안양시	3,389	0.898

지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부천시	3,796	0.703
광명시	1,531	0.813
평택시	3,926	1.028
동두천시	351	0.754
안산시	3,255	0.807
고양시	5,626	0.787
과천시	559	1.020
구리시	883	0.725
남양주시	3,609	0.821
오산시	1,304	0.826
시흥시	3,196	0.931
군포시	1,530	0.865
의왕시	931	0.852
하남시	2,253	0.888
용인시	5,691	0.840
파주시	2,730	0.861
이천시	1,190	0.857
안성시	843	0.846
김포시	3,209	0.934
화성시	6,445	0.964
광주시	2,220	0.881
양주시	1,203	0.896
포천시	552	0.823
여주시	468	0.897
연천군	182	1.041
가평군	199	0.803
양평군	459	0.917
강원도	7,278	0.968
춘천시	1,509	0.901
원주시	2,071	0.941
강릉시	893	0.910
동해시	374	0.987
태백시	129	0.913
속초시	369	0.913
삼척시	295	1.260
홍천군	257	1.023
횡성군	125	0.852
영월군	95	0.864
평창군	96	0.764
정선군	90	0.827
철원군	268	1.398
화천군	155	1.402
양구군	148	1.434
인제군	211	1.311
고성군	109	1.100

지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양양군	84	0.880
충청북도	7,452	0.871
충주시	869	0.880
제천시	461	0.832
청주시	4,671	0.860
보은군	79	0.956
옥천군	116	0.721
영동군	130	0.998
진천군	509	1.107
괴산군	75	0.798
음성군	316	0.820
단양군	59	0.745
증평군	167	0.883
충청남도	10,221	0.909
천안시	3,899	0.842
공주시	343	0.836
보령시	359	0.967
아산시	1,851	0.906
서산시	1,036	1.209
논산시	402	0.881
계룡시	181	0.885
당진시	888	1.112
금산군	132	0.868
부여군	133	0.747
서천군	133	0.978
청양군	76	0.896
홍성군	407	0.923
예산군	212	0.827
태안군	169	0.884
전라북도	7,032	0.817
전주시	2,878	0.730
군산시	1,120	0.877
익산시	1,010	0.773
정읍시	354	0.898
남원시	275	0.960
김제시	350	1.199
완주군	355	0.865
진안군	85	1.190
무주군	59	0.848
장수군	65	1.004
임실군	125	1.560
순창군	67	0.822
고창군	151	0.949
부안군	138	0.881
전라남도	7,888	0.969

지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목포시	820	0.737
여주시	1,267	0.952
순천시	1,506	0.971
나주시	679	1.027
광양시	860	1.061
담양군	147	0.855
곡성군	41	0.535
구례군	68	0.942
고흥군	163	1.095
보성군	81	0.793
화순군	171	0.739
장흥군	131	1.148
강진군	91	0.888
해남군	216	1.042
영암군	176	0.946
무안군	498	1.010
함평군	73	0.881
영광군	393	1.803
장성군	126	0.827
완도군	163	1.129
진도군	102	1.101
신안군	116	1.298
경상북도	11,311	0.930
포항시	2,187	0.889
경주시	981	0.893
김천시	754	1.164
안동시	661	0.963
구미시	2,201	0.818
영주시	337	0.961
영천시	532	1.313
상주시	323	1.073
문경시	266	1.104
경산시	1,300	0.873
군위군	75	1.486
의성군	185	1.457
청송군	74	1.207
영양군	31	0.696
영덕군	108	1.141
청도군	109	0.985
고령군	88	0.975
성주군	156	1.183
칠곡군	407	0.723
예천군	262	1.159
봉화군	70	1.026
울진군	184	1.052

지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울릉군	20	0.639
경상남도	14,017	0.838
진주시	1,790	0.944
통영시	392	0.759
사천시	458	0.999
김해시	2,537	0.842
밀양시	320	0.873
거제시	959	0.779
양산시	1,742	0.822
창원시	4,747	0.824
의령군	74	1.019
함안군	154	0.702
창녕군	150	0.798
고성군	92	0.661
남해군	102	0.954
하동군	93	0.874
산청군	59	0.686
함양군	76	0.682
거창군	175	0.836
합천군	97	1.011
제주특별자치도	3,599	0.919
제주시	2,766	0.926
서귀포시	833	0.898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부록표 2-5 | 2022년 시군구별 이혼 통계

지역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다문화 이혼건수(건)	다문화 이혼비중(%)
전국	93,232	1.8	8,424	8.3
서울특별시	13,174	1.4	1,454	9.4
종로구	207	1.5	26	12.1
중구	204	1.7	27	11.3
용산구	300	1.4	50	13.4
성동구	344	1.2	40	8.5
광진구	473	1.4	42	7.9
동대문구	479	1.4	56	9.9
중랑구	688	1.8	64	8.1
성북구	532	1.2	50	7.6
강북구	563	1.9	53	8.3
도봉구	495	1.6	32	5.2
노원구	665	1.3	50	6.2
은평구	712	1.5	75	9.1
서대문구	387	1.3	42	9.5
마포구	397	1.1	44	8.1
양천구	637	1.4	54	7.7
강서구	865	1.5	97	9.7
구로구	578	1.5	111	16
금천구	409	1.8	81	16.5
영등포구	493	1.3	84	15
동작구	459	1.2	58	11.5
관악구	673	1.4	83	10.9
서초구	445	1.1	43	8.2
강남구	671	1.3	63	8.4
송파구	841	1.3	63	6.7
강동구	657	1.4	66	8.9
부산광역시	5,523	1.7	400	6.3
중구	100	2.5	6	5.9
서구	200	1.9	16	7.1
동구	155	1.8	13	7.9
영도구	194	1.8	14	5.9
부산진구	555	1.6	31	5
동래구	418	1.6	25	5.8
남구	366	1.4	16	3.7
북구	450	1.6	43	8.2
해운대구	655	1.7	51	7.6
사하구	536	1.8	56	8.6
금정구	324	1.4	19	4.6
강서구	303	2.1	14	4
연제구	313	1.5	11	3.2
수영구	249	1.4	18	5.6
사상구	342	1.7	47	10.3

지역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다문화 이혼건수(건)	다문화 이혼비중(%)
기장군	363	2.0	20	5.2
대구광역시	3,675	1.6	264	6.4
중구	109	1.4	8	5.7
동구	550	1.6	38	6.1
서구	303	1.9	22	5.8
남구	269	1.9	14	4.7
북구	683	1.6	42	5.7
수성구	481	1.2	27	5
달서구	832	1.5	82	8.7
달성군	448	1.7	31	6.4
인천광역시	6,045	2.1	597	8.7
중구	366	2.5	42	11.2
동구	114	1.9	15	9.2
미추홀구(남구)	982	2.4	48	7.3
연수구	564	1.5	118	9.2
남동구	1,076	2.1	123	11.3
부평구	922	1.9	49	6.8
계양구	562	1.9	113	8.6
서구	1,288	2.3	77	7
강화군	127	1.8	12	8.6
옹진군	44	2.2	0	0
광주광역시	2,360	1.6	186	7.2
동구	168	1.6	12	6.6
서구	479	1.7	29	5.6
남구	299	1.4	23	7.1
북구	682	1.6	50	6.3
광산구	732	1.8	72	9.3
대전광역시	2,492	1.7	192	6.9
동구	407	1.9	42	8.8
중구	399	1.8	40	7.6
서구	816	1.7	43	5.1
유성구	508	1.4	36	6.3
대덕구	362	2.1	31	8.4
울산광역시	2,165	1.9	158	6.5
중구	408	1.9	33	6.8
남구	543	1.7	34	5.1
동구	344	2.3	28	7.7
북구	381	1.7	25	5.9
울주군	489	2.2	38	7.5
세종특별자치시	546	1.4	38	6
세종시	546	1.4	38	6
경기도	24,864	1.8	2,431	8.8
수원시	1,912	1.6	210	9.8
성남시	1,283	1.4	149	9.3

지역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다문화 이혼건수(건)	다문화 이혼비중(%)
의정부시	974	2.1	72	6.9
안양시	756	1.4	57	6.3
부천시	1,429	1.8	182	11.2
광명시	430	1.5	45	8.8
평택시	1,428	2.5	182	11.6
동두천시	244	2.7	31	11.6
안산시	1,520	2.4	207	12.1
고양시	1,799	1.7	126	6.3
과천시	67	0.9	4	4.9
구리시	321	1.7	25	6.9
남양주시	1,449	2.0	91	5.7
오산시	518	2.3	56	9.8
시흥시	1,175	2.3	159	12.5
군포시	405	1.5	50	10.6
의왕시	220	1.4	10	3.9
하남시	475	1.5	42	7.4
용인시	1,543	1.4	123	6.9
파주시	992	2.0	78	7.2
이천시	491	2.2	25	5.3
안성시	410	2.2	47	9.9
김포시	844	1.7	93	10
화성시	1,643	1.8	148	8.3
광주시	924	2.4	71	7.1
양주시	515	2.2	32	5.7
포천시	401	2.7	55	13.6
여주시	259	2.3	20	8.4
연천군	95	2.3	12	13.5
가평군	124	2.0	12	8.4
양평군	218	1.8	17	6.7
강원도	3,117	2.0	194	6.1
춘천시	520	1.8	29	5.7
원주시	742	2.1	50	6.6
강릉시	405	1.9	13	3.1
동해시	184	2.1	9	4.8
태백시	84	2.1	8	9.1
속초시	203	2.5	13	6.6
삼척시	103	1.6	4	3
홍천군	146	2.1	19	11.4
횡성군	104	2.2	7	8
영월군	70	1.9	6	8.1
평창군	71	1.7	7	8.6
정선군	83	2.4	7	6.4
철원군	102	2.4	7	7.9
화천군	52	2.2	2	3.2

지역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다문화 이혼건수(건)	다문화 이혼비중(%)
양구군	56	2.6	1	2.3
인제군	69	2.1	3	4.7
고성군	55	2.0	5	7.9
양양군	68	2.4	4	6.3
충청북도	3,271	2.1	296	8.9
충주시	438	2.1	45	10.2
제천시	275	2.1	20	6.7
청주시	1,659	2.0	118	7.1
보은군	55	1.7	8	11.8
옥천군	80	1.6	15	13.5
영동군	88	1.9	9	10.5
진천군	205	2.4	28	13.8
괴산군	75	2.0	9	11.8
음성군	261	2.8	27	12.2
단양군	44	1.6	3	6.4
증평군	91	2.5	14	15.6
충청남도	4,527	2.1	433	8.9
천안시	1,360	2.1	115	7.6
공주시	197	1.9	24	12.1
보령시	236	2.4	21	7.9
아산시	752	2.3	66	8.6
서산시	418	2.4	36	8.8
논산시	230	2.0	27	9.1
계룡시	64	1.5	2	2.4
당진시	431	2.6	33	8.3
금산군	111	2.2	17	15.7
부여군	99	1.6	15	12.2
서천군	99	2.0	6	7.1
청양군	48	1.6	8	11.3
홍성군	200	2.0	26	12.3
예산군	153	2.0	21	11.9
태안군	129	2.1	16	9.9
전라북도	3,377	1.9	318	8.4
전주시	1,062	1.6	66	5.4
군산시	594	2.3	56	8.8
익산시	583	2.1	41	6.4
정읍시	238	2.3	33	12.8
남원시	137	1.7	20	13.3
김제시	155	1.9	19	10.4
완주군	188	2.1	17	8.2
진안군	36	1.5	7	15.2
무주군	47	2.0	7	13.7
장수군	47	2.2	4	8
임실군	49	1.8	6	8.8

지역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다문화 이혼건수(건)	다문화 이혼비중(%)
순창군	42	1.6	6	12.8
고창군	99	1.9	15	16
부안군	100	2.0	21	16.4
전라남도	3,565	2.0	382	10.1
목포시	485	2.2	37	7
여주시	556	2.0	36	6.4
순천시	477	1.7	47	8.9
나주시	208	1.8	31	12.3
광양시	351	2.3	26	7.4
담양군	68	1.5	4	5.1
곡성군	41	1.5	5	11.9
구례군	49	2.0	7	13.5
고흥군	120	1.9	18	16.2
보성군	72	1.9	10	16.7
화순군	99	1.6	19	15.3
장흥군	64	1.8	9	12.9
강진군	69	2.1	6	9.7
해남군	114	1.7	17	12.1
영암군	110	2.1	19	12.6
무안군	163	1.8	15	8.3
함평군	68	2.2	9	14.8
영광군	99	1.9	19	18.3
장성군	82	1.9	15	19.2
완도군	119	2.5	12	11.5
진도군	58	2.0	10	15.4
신안군	93	2.5	11	12.5
경상북도	4,911	1.9	393	7.6
포항시	921	1.8	54	5.1
경주시	485	1.9	47	10.2
김천시	256	1.8	21	9.1
안동시	251	1.6	18	6.5
구미시	811	2.0	54	6
영주시	188	1.9	11	6.5
영천시	206	2.0	21	9.5
상주시	176	1.9	12	7
문경시	115	1.6	11	8.9
경산시	529	2.0	35	6.8
군위군	27	1.2	6	17.6
의성군	73	1.5	10	16.9
청송군	40	1.6	9	20
영양군	32	2.0	5	14.7
영덕군	64	1.8	9	11.5
청도군	71	1.7	7	9.7
고령군	63	2.1	1	1.9

지역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다문화 이혼건수(건)	다문화 이혼비중(%)
성주군	89	2.1	7	8.2
칠곡군	270	2.4	22	7.7
예천군	72	1.3	15	16.5
봉화군	57	1.9	7	19.4
울진군	89	1.9	10	9
울릉군	26	2.9	1	3.1
경상남도	6,530	2.0	529	7.5
진주시	572	1.7	57	9.3
통영시	309	2.5	38	10.2
사천시	258	2.4	23	8.9
김해시	1,210	2.3	82	6.6
밀양시	187	1.8	19	9
거제시	563	2.4	42	6.6
양산시	757	2.1	44	5.6
창원시	1,845	1.8	134	6.5
의령군	32	1.2	3	5.8
함안군	142	2.3	15	10.2
창녕군	122	2.1	13	11.9
고성군	116	2.3	9	9
남해군	67	1.6	10	13.9
하동군	75	1.8	5	6.3
산청군	50	1.5	7	9.3
함양군	60	1.6	11	15.1
거창군	94	1.6	9	7.2
합천군	71	1.7	8	10
제주특별자치도	1,564	2.3	143	9.5
제주시	1,102	2.2	99	9.1
서귀포시	462	2.5	44	10.3

자료: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부록표 2-6 | 2020년 시군구별 한부모가구 통계

지역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	미혼 (%)	배우자있음 (%)	사별 (%)	이혼 (%)	소계	
전국	21,484,785	9.5	1.5	2.6	2.1	3.2	19.0	
서울	종로구	68,069	8.4	1.5	2.7	2.1	2.2	16.8
	중구	59,817	8.6	1.7	2.3	1.8	2.7	17.2
	용산구	101,431	8.9	1.8	2.6	1.9	2.7	17.9
	성동구	126,658	8.8	1.7	2.2	2.1	2.8	17.6
	광진구	160,944	8.4	1.7	2.1	1.8	2.8	16.9
	동대문구	158,899	8.3	1.8	1.9	2.2	2.4	16.7
	종랑구	167,617	11.5	2.3	2.1	2.7	4.3	22.9
	성북구	184,871	9.3	1.6	2.4	2.4	2.9	18.6
	강북구	131,884	12.4	2.6	2.3	3.1	4.4	24.9
	도봉구	128,378	11.9	2.4	2.3	2.8	4.4	23.8
	노원구	204,210	11.9	1.9	2.9	3.0	4.1	23.8
	은평구	192,581	11.6	2.4	2.4	2.7	4.1	23.2
	서대문구	138,528	9.4	1.8	2.7	2.3	2.7	18.9
	마포구	166,007	8.7	1.7	2.3	2.0	2.7	17.4
	양천구	168,184	10.4	1.8	2.8	2.3	3.5	20.8
	강서구	247,202	10.4	2.0	2.4	2.3	3.8	20.9
	구로구	182,636	8.3	1.7	1.9	2.0	2.8	16.6
	금천구	115,254	8.7	1.5	1.8	2.0	3.5	17.4
	영등포구	178,217	7.1	1.4	2.1	1.6	2.0	14.2
	동작구	174,572	8.9	1.8	2.4	2.1	2.6	17.8
관악구	259,822	7.5	1.7	1.6	1.7	2.4	14.9	
서초구	158,582	8.6	1.3	3.4	1.4	2.4	17.2	
강남구	212,582	9.1	1.4	3.6	1.7	2.4	18.2	
송파구	259,785	9.3	1.6	2.9	1.8	3.1	18.6	
강동구	179,794	10.4	1.8	2.7	2.3	3.6	20.7	
부산	중구	21,101	10.1	1.9	1.5	2.9	3.7	20.2
	서구	47,829	10.7	2.2	2.2	3.2	3.1	21.5
	동구	40,501	10.9	1.9	1.9	3.1	3.9	21.8
	영도구	51,276	11.4	1.7	2.2	3.9	3.5	22.7
	부산진구	158,049	10.3	1.8	2.3	2.9	3.3	20.6
	동래구	106,443	11.0	1.6	3.1	2.8	3.5	22.0
	남구	112,568	10.1	1.8	2.5	2.6	3.2	20.3
	북구	113,727	10.9	1.8	2.7	2.7	3.7	21.9
	사하구	129,762	10.9	1.6	2.5	3.0	3.8	21.9
	금정구	103,542	9.9	1.6	2.5	2.6	3.2	19.8
	강서구	52,737	7.8	1.0	3.1	1.6	2.1	15.6
	연제구	86,043	11.1	1.8	2.7	2.9	3.6	22.1
	수영구	77,302	10.7	2.0	2.4	2.7	3.6	21.4
	사상구	92,172	10.9	1.6	2.2	3.2	3.9	21.7
기장군	67,189	10.5	1.6	3.3	2.2	3.5	21.0	

지역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	미혼 (%)	배우자있음 (%)	사별 (%)	이혼 (%)	소계	
대구	중구	35,114	9.0	1.4	2.7	2.0	2.7	17.9
	동구	142,473	11.0	1.8	2.8	2.8	3.6	22.0
	서구	75,132	11.9	1.8	2.4	3.2	4.4	23.7
	남구	69,654	11.3	1.8	2.4	2.7	4.4	22.5
	북구	181,778	10.9	1.5	3.1	2.6	3.7	21.9
	수성구	160,984	11.5	1.2	4.3	2.4	3.6	23.0
	달서구	230,703	10.8	1.4	3.2	2.4	3.8	21.6
인천	달성군	101,578	9.0	1.2	3.0	1.9	2.9	18.0
	중구	61,142	8.5	1.6	2.2	1.4	3.2	16.9
	동구	25,606	11.7	2.5	2.3	3.2	3.8	23.5
	연수구	147,391	9.0	1.3	3.1	1.5	3.1	18.0
	남동구	211,978	11.9	2.2	2.3	2.2	5.1	23.8
	부평구	201,550	11.9	2.2	2.4	2.5	4.7	23.7
	계양구	114,972	12.8	2.2	2.7	2.6	5.3	25.6
	서구	205,791	10.6	1.7	2.8	1.9	4.2	21.3
	미추홀구	173,122	12.0	2.4	2.2	2.3	5.0	23.9
	강화군	28,145	7.0	1.2	1.7	2.0	2.1	14.0
광주	옹진군	8,867	4.8	0.6	1.5	1.3	1.3	9.6
	동구	48,193	9.3	1.3	3.2	2.0	2.7	18.5
	서구	124,973	11.8	1.3	4.6	2.1	3.9	23.6
	남구	87,579	13.3	1.8	4.8	2.9	3.8	26.6
	북구	183,018	11.4	1.5	3.8	2.3	3.9	22.8
	광산구	164,553	11.4	1.3	4.2	1.9	4.0	22.8
대전	동구	104,650	10.0	1.6	2.4	2.3	3.7	20.0
	중구	98,346	11.6	1.9	3.1	2.4	4.3	23.3
	서구	204,879	10.3	1.3	3.6	2.0	3.4	20.5
	유성구	156,839	8.1	1.1	3.4	1.1	2.5	16.2
	대덕구	74,306	10.5	1.4	2.7	2.3	4.1	21.0
울산	중구	87,519	9.8	1.2	2.5	2.4	3.6	19.5
	남구	132,915	8.8	1.1	2.8	1.9	3.1	17.6
	동구	62,485	7.8	0.8	2.1	2.0	2.9	15.6
	북구	80,063	8.0	1.0	2.5	1.6	3.0	16.0
	울주군	90,013	8.3	0.9	2.6	1.9	2.9	16.7
세종시	141,133	8.3	1.0	3.9	1.1	2.3	16.5	
경기	수원시	488,201	9.3	1.5	2.7	1.7	3.4	18.6
	성남시	379,640	9.6	1.7	2.6	1.8	3.5	19.2
	의정부시	180,351	12.0	2.2	2.7	2.2	4.8	23.9
	안양시	207,634	10.6	1.9	3.1	2.2	3.4	21.2
	부천시	329,594	11.5	2.1	2.6	2.4	4.5	22.9
	광명시	114,422	11.0	2.1	2.7	2.5	3.8	22.1
	평택시	224,080	9.1	1.5	2.5	1.5	3.5	18.2
	동두천시	39,055	11.7	2.3	2.1	2.3	5.0	23.4
안산시	291,294	10.1	1.6	2.3	1.8	4.5	20.3	

지역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소계
		일반가구 (%)	미혼 (%)	배우자있음 (%)	사별 (%)	이혼 (%)		
고양시	404,705	10.7	2.0	3.1	1.8	3.8	21.5	
과천시	20,629	8.7	1.7	3.3	1.6	2.1	17.4	
구리시	73,909	11.6	1.9	2.5	2.6	4.6	23.2	
남양주시	255,575	10.6	1.8	2.8	2.0	4.0	21.1	
오산시	98,336	8.5	1.5	2.2	1.4	3.4	17.0	
시흥시	213,850	8.9	1.5	2.3	1.4	3.6	17.8	
군포시	107,215	10.3	1.7	3.0	2.1	3.5	20.6	
의왕시	59,922	9.7	1.8	2.6	2.0	3.3	19.4	
하남시	113,584	8.6	1.7	2.4	1.6	2.9	17.2	
용인시	394,636	8.4	1.4	2.8	1.5	2.7	16.7	
파주시	174,764	9.6	1.7	2.4	1.8	3.6	19.2	
이천시	86,215	7.9	1.2	2.1	1.6	3.1	15.8	
안성시	82,928	8.0	1.2	2.1	1.8	2.9	16.0	
김포시	179,106	8.6	1.5	2.5	1.5	3.1	17.2	
화성시	336,715	7.4	1.2	2.4	1.1	2.7	14.8	
광주시	147,712	9.7	1.9	2.2	1.9	3.7	19.3	
양주시	88,985	10.2	1.8	2.4	1.9	4.1	20.4	
포천시	63,701	8.8	1.6	1.8	2.2	3.2	17.5	
여주시	45,457	8.2	1.3	2.3	2.2	2.5	16.5	
연천군	18,368	7.0	1.1	1.4	2.3	2.2	14.1	
가평군	26,056	7.2	1.1	1.5	2.6	2.0	14.4	
양평군	48,197	7.1	1.0	2.3	1.9	1.8	14.2	
강원	춘천시	119,722	9.4	1.1	3.4	1.8	3.1	18.8
원주시	151,688	9.5	1.2	3.2	1.8	3.3	19.0	
강릉시	99,109	8.6	1.2	2.5	1.9	2.9	17.1	
동해시	37,871	8.8	1.3	2.7	2.3	2.6	17.6	
태백시	18,688	8.8	1.4	2.2	2.6	2.7	17.6	
속초시	35,922	9.6	1.5	2.6	2.1	3.4	19.2	
삼척시	31,016	7.1	1.1	1.8	2.5	1.7	14.3	
홍천군	29,533	6.5	0.8	1.7	2.2	1.8	13.1	
횡성군	19,775	6.4	1.0	1.7	2.0	1.7	12.8	
영월군	17,175	5.7	0.9	1.9	1.5	1.4	11.5	
평창군	18,519	6.0	0.9	1.8	2.0	1.3	11.9	
정선군	16,375	7.2	1.0	1.9	2.5	1.8	14.4	
철원군	17,244	6.6	1.0	1.7	2.3	1.6	13.2	
화천군	9,997	5.6	0.8	1.5	2.3	1.0	11.3	
양구군	8,606	6.3	1.0	1.9	2.0	1.5	12.7	
인제군	12,698	6.3	1.2	1.9	2.0	1.2	12.6	
고성군	12,096	6.3	1.1	1.2	2.6	1.4	12.6	
양양군	12,445	7.2	1.0	1.7	2.6	1.8	14.3	
충북	충주시	95,281	8.0	1.3	2.3	1.8	2.7	16.0
제천시	60,173	8.2	1.0	2.3	1.9	2.9	16.5	
청주시	355,294	9.3	1.2	2.8	1.9	3.3	18.5	

지역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	미혼 (%)	배우자있음 (%)	사별 (%)	이혼 (%)	소계	
충청	보은군	14,464	5.5	0.9	1.1	2.0	1.5	10.9
	옥천군	20,937	7.6	1.4	1.8	2.4	1.9	15.2
	영동군	21,303	7.1	1.1	1.9	2.6	1.4	14.1
	진천군	37,427	6.8	1.2	1.6	1.7	2.3	13.6
	괴산군	18,470	5.7	0.9	1.5	2.1	1.1	11.4
	음성군	43,664	6.2	1.0	1.6	1.7	1.9	12.3
	단양군	12,845	6.4	0.9	1.8	2.4	1.3	12.8
충청	증평군	16,090	9.1	1.3	2.6	2.5	2.7	18.3
충남	천안시	284,818	8.7	1.1	2.7	1.7	3.3	17.5
	공주시	46,981	7.6	1.0	2.2	2.3	2.1	15.2
	보령시	43,181	7.9	1.2	2.1	2.3	2.2	15.7
	아산시	136,783	7.7	1.1	2.3	1.5	2.9	15.3
	서산시	74,847	7.6	1.1	2.4	1.6	2.5	15.2
	논산시	51,800	7.4	1.1	1.9	2.0	2.5	14.9
	계룡시	15,207	9.8	1.0	5.1	1.3	2.4	19.6
	당진시	71,690	7.1	1.0	2.2	1.8	2.2	14.1
	금산군	24,102	7.2	1.2	1.8	2.3	1.8	14.3
	부여군	28,671	6.8	0.9	2.0	2.4	1.5	13.7
	서천군	23,143	6.3	0.9	1.4	2.2	1.8	12.5
	청양군	13,745	5.8	0.7	1.3	2.6	1.2	11.6
	홍성군	44,090	7.9	0.9	2.5	2.0	2.5	15.8
	예산군	34,488	7.2	1.1	1.7	2.7	1.6	14.4
	태안군	28,521	6.0	0.9	1.8	1.8	1.5	12.0
전북	전주시	274,810	10.7	1.3	3.9	2.1	3.4	21.4
	군산시	114,147	9.9	1.4	3.0	2.1	3.3	19.7
	익산시	121,413	9.9	1.2	2.8	2.4	3.5	19.7
	정읍시	46,850	9.2	1.1	2.3	3.0	2.8	18.5
	남원시	34,331	8.5	1.0	2.7	2.5	2.3	17.0
	김제시	35,247	8.3	1.4	2.1	2.5	2.4	16.7
	완주군	39,629	8.0	1.0	2.3	2.4	2.3	16.0
	진안군	10,774	6.6	0.9	1.9	2.8	1.0	13.2
	무주군	10,539	6.6	0.8	1.7	2.4	1.6	13.1
	장수군	9,497	6.4	0.9	1.4	2.7	1.4	12.8
	임실군	12,380	6.6	1.5	1.7	2.3	1.1	13.2
	순창군	11,750	6.4	1.1	1.6	2.1	1.5	12.8
	고창군	23,845	6.7	1.4	1.8	2.1	1.4	13.4
	부안군	22,591	7.7	1.2	1.9	2.9	1.8	15.4
	전남	목포시	95,492	12.0	1.3	4.0	2.4	4.2
여수시		113,780	9.4	1.3	2.4	2.8	3.0	18.8
순천시		110,833	10.0	1.1	3.6	2.3	3.0	19.9
나주시		49,264	9.4	1.4	3.5	2.2	2.4	18.9
광양시		58,325	9.5	1.0	3.3	1.9	3.3	19.0
담양군	18,333	7.7	1.5	1.8	3.0	1.3	15.3	

지역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소계
		일반가구 (%)	미혼 (%)	배우자있음 (%)	사별 (%)	이혼 (%)		
곡성군	12,833	5.8	0.9	1.5	2.4	1.0	11.6	
구례군	11,089	6.8	1.1	1.7	2.5	1.4	13.6	
고흥군	29,852	5.0	0.9	1.5	1.9	0.8	10.1	
보성군	17,980	5.4	0.8	1.5	2.1	1.0	10.8	
화순군	25,608	10.1	1.5	3.0	2.7	2.9	20.3	
장흥군	16,646	5.7	0.7	1.8	1.8	1.3	11.3	
강진군	15,398	6.7	1.0	1.6	2.6	1.5	13.5	
해남군	29,535	7.0	0.9	2.0	2.2	1.8	14.0	
영암군	25,307	5.9	0.8	2.1	1.5	1.6	11.8	
무안군	36,094	9.0	1.3	3.5	2.1	2.2	18.1	
함평군	13,720	7.4	1.4	1.7	3.1	1.3	14.8	
영광군	22,102	7.9	1.2	2.5	2.6	1.6	15.8	
장성군	17,583	7.7	1.3	2.4	2.6	1.4	15.4	
완도군	22,006	5.7	1.1	1.5	2.0	1.1	11.5	
진도군	13,883	6.1	0.9	1.6	2.4	1.2	12.2	
신안군	16,997	5.5	0.7	1.2	2.8	0.7	10.9	
포항시	209,373	9.0	1.2	2.6	2.2	3.0	18.0	
경주시	116,452	8.3	1.0	2.2	2.6	2.4	16.6	
김천시	60,013	8.7	1.3	2.6	2.6	2.3	17.5	
안동시	71,424	8.0	1.0	2.6	2.3	2.0	16.1	
구미시	171,496	8.7	0.9	3.1	1.7	2.9	17.3	
영주시	45,970	7.2	0.8	2.1	2.4	1.9	14.5	
영천시	45,647	7.9	1.2	1.7	2.4	2.6	15.7	
상주시	44,043	6.4	0.9	1.9	2.2	1.4	12.9	
문경시	30,839	6.6	1.2	1.9	2.0	1.6	13.2	
경산시	120,756	9.0	1.4	2.6	2.2	2.8	17.9	
군위군	10,850	5.2	0.8	1.0	2.6	0.9	10.5	
의성군	24,312	5.1	0.8	1.2	2.2	0.8	10.1	
청송군	11,797	4.9	0.7	1.4	1.9	0.9	9.8	
영양군	7,725	5.4	0.7	1.5	2.3	0.9	10.8	
영덕군	17,206	6.1	1.0	1.3	2.3	1.4	12.1	
청도군	19,004	6.5	1.0	1.5	2.7	1.3	13.0	
고령군	13,917	7.5	1.4	1.6	2.8	1.7	15.0	
성주군	18,713	6.4	1.0	1.3	2.9	1.2	12.9	
칠곡군	47,953	8.7	1.0	2.7	1.9	3.0	17.5	
예천군	24,213	7.1	1.1	2.7	2.2	1.2	14.3	
봉화군	14,189	6.0	1.0	1.3	2.7	1.0	12.0	
울진군	22,006	6.6	1.0	2.0	2.4	1.3	13.3	
울릉군	4,199	4.5	0.5	1.4	1.4	1.1	9.0	
진주시	148,396	9.7	1.1	3.2	2.4	3.0	19.4	
통영시	54,922	9.7	1.2	3.0	2.3	3.2	19.3	
사천시	47,359	8.2	1.1	2.2	2.4	2.5	16.4	

지역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	미혼 (%)	배우자있음 (%)	사별 (%)	이혼 (%)	소계	
경남	김해시	214,170	9.9	1.3	2.9	1.8	3.8	19.8
	밀양시	46,860	7.4	0.9	1.8	2.8	1.8	14.8
	거제시	98,586	7.8	0.8	2.6	1.4	3.0	15.5
	양산시	141,072	9.7	1.5	2.8	2.0	3.4	19.4
	창원시	415,535	9.2	1.2	2.7	2.2	3.2	18.5
	의령군	12,535	6.2	0.9	1.6	2.7	1.0	12.4
	함안군	27,594	7.8	1.1	2.0	2.7	2.0	15.6
	창녕군	27,754	7.9	1.0	1.9	3.1	1.8	15.7
	고성군	22,436	7.4	1.0	1.9	2.6	1.9	14.9
	남해군	19,721	5.8	0.8	1.1	2.9	1.0	11.6
	하동군	19,600	6.6	0.8	1.5	2.7	1.5	13.1
	산청군	15,823	5.1	0.9	1.2	2.0	1.0	10.2
	함양군	17,501	6.6	1.0	1.6	2.4	1.6	13.2
	거창군	26,054	7.7	1.1	1.5	3.0	2.1	15.5
합천군	20,322	5.8	1.1	1.3	2.5	1.0	11.7	
제주	제주시	196,808	10.7	1.2	3.4	2.3	3.8	21.5
	서귀포시	73,627	9.3	0.9	3.3	2.6	2.6	18.6

자료: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부록표 2-7 | 2022년 시군구별 인구이동 통계

(단위: 명)

행정구역별(읍면동)	총전입(명)	총전출(명)	순이동(명)
전국	6,152,155	6,152,155	0
서울특별시	1,201,527	1,236,867	-35,340
종로구	19,123	20,556	-1,433
중구	16,738	17,465	-727
용산구	31,046	32,325	-1,279
성동구	34,138	38,153	-4,015
광진구	45,983	47,193	-1,210
동대문구	44,531	43,365	1,166
중랑구	45,183	45,343	-160
성북구	52,764	50,725	2,039
강북구	31,243	34,364	-3,121
도봉구	28,791	32,358	-3,567
노원구	48,607	53,482	-4,875
은평구	55,986	59,509	-3,523
서대문구	43,478	39,904	3,574
마포구	49,721	52,169	-2,448
양천구	44,539	49,292	-4,753
강서구	70,228	73,672	-3,444
구로구	44,870	45,359	-489
금천구	30,153	30,370	-217
영등포구	53,661	53,953	-292
동작구	53,359	56,607	-3,248
관악구	87,212	83,760	3,452
서초구	51,077	57,143	-6,066
강남구	75,316	76,819	-1,503
송파구	88,263	86,137	2,126
강동구	55,517	56,844	-1,327
부산광역시	383,848	397,410	-13,562
중구	5,564	5,869	-305
서구	14,194	12,978	1,216
동구	11,203	11,267	-64
영도구	10,116	11,195	-1,079
부산진구	51,922	47,241	4,681
동래구	40,283	32,624	7,659
남구	28,971	33,128	-4,157
북구	24,845	28,129	-3,284
해운대구	38,998	46,453	-7,455
사하구	30,184	32,311	-2,127
금정구	23,614	28,692	-5,078
강서구	16,828	16,988	-160
연제구	23,083	25,763	-2,680
수영구	24,820	24,297	523
사상구	19,151	22,152	-3,001
기장군	20,072	18,323	1,749

행정구역별(읍면동)	총전입(명)	총전출(명)	순이동(명)
대구광역시	265,354	276,873	-11,519
중구	19,165	13,132	6,033
동구	37,985	38,121	-136
서구	14,872	17,894	-3,022
남구	20,799	20,986	-187
북구	43,648	48,498	-4,850
수성구	46,423	50,135	-3,712
달서구	55,850	61,818	-5,968
달성군	26,612	26,289	323
인천광역시	395,140	367,039	28,101
중구	31,093	21,525	9,568
동구	7,755	9,570	-1,815
미추홀구(남구)	57,506	56,415	1,091
연수구	43,535	47,477	-3,942
남동구	51,950	62,308	-10,358
부평구	61,728	57,460	4,268
계양구	25,922	31,406	-5,484
서구	105,257	71,755	33,502
강화군	7,140	6,282	858
옹진군	3,254	2,841	413
광주광역시	182,924	190,566	-7,642
동구	19,282	16,386	2,896
서구	36,939	39,926	-2,987
남구	25,613	28,066	-2,453
북구	56,351	57,808	-1,457
광산구	44,739	48,380	-3,641
대전광역시	198,705	201,701	-2,996
동구	29,574	30,632	-1,058
중구	28,739	30,564	-1,825
서구	66,018	68,458	-2,440
유성구	55,324	51,309	4,015
대덕구	19,050	20,738	-1,688
울산광역시	107,747	117,283	-9,536
중구	17,781	21,783	-4,002
남구	35,940	38,786	-2,846
동구	13,354	15,384	-2,030
북구	19,669	20,221	-552
울주군	21,003	21,109	-106
세종특별자치시	65,529	55,401	10,128
세종시	65,529	55,401	10,128
경기도	1,645,990	1,602,108	43,882
수원시	166,718	159,012	7,706
성남시	118,431	124,564	-6,133
의정부시	58,522	56,206	2,316
안양시	67,755	66,080	1,675

행정구역별(읍면동)	총전입(명)	총전출(명)	순이동(명)
부천시	67,341	80,966	-13,625
광명시	31,599	35,911	-4,312
평택시	96,524	81,821	14,703
동두천시	10,251	11,144	-893
안산시	69,280	79,699	-10,419
고양시	131,575	131,684	-109
과천시	16,724	12,063	4,661
구리시	18,307	20,814	-2,507
남양주시	75,909	71,078	4,831
오산시	25,445	25,723	-278
시흥시	59,558	58,836	722
군포시	26,366	28,342	-1,976
의왕시	13,950	16,870	-2,920
하남시	43,908	38,559	5,349
용인시	117,756	119,483	-1,727
파주시	69,258	56,191	13,067
이천시	27,796	27,739	57
안성시	22,305	22,129	176
김포시	52,771	55,725	-2,954
화성시	119,306	98,368	20,938
광주시	32,864	24,958	7,906
양주시	48,883	44,457	4,426
포천시	15,297	16,419	-1,122
여주시	14,730	12,902	1,828
연천군	4,488	4,676	-188
가평군	6,596	6,020	576
양평군	15,777	13,669	2,108
강원도	194,864	187,370	7,494
춘천시	43,233	39,950	3,283
원주시	51,960	47,993	3,967
강릉시	25,320	25,598	-278
동해시	9,882	9,945	-63
태백시	3,616	4,416	-800
속초시	11,850	11,393	457
삼척시	8,170	7,596	574
홍천군	6,802	6,574	228
횡성군	4,473	3,862	611
영월군	3,443	3,138	305
평창군	3,954	3,457	497
정선군	2,908	3,198	-290
철원군	3,646	4,442	-796
화천군	2,743	3,449	-706
양구군	2,091	2,360	-269
인제군	4,180	4,011	169
고성군	3,269	2,968	301

행정구역별(읍면동)	총전입(명)	총전출(명)	순이동(명)
양양군	3,324	3,020	304
충청북도	185,419	180,218	5,201
충주시	24,920	24,727	193
제천시	15,301	14,870	431
청주시	105,123	102,642	2,481
보은군	2,555	2,390	165
옥천군	3,515	3,441	74
영동군	3,921	4,062	-141
진천군	4,358	3,405	953
괴산군	9,586	8,505	1,081
음성군	3,924	4,447	-523
단양군	10,075	9,459	616
증평군	2,141	2,270	-129
충청남도	260,488	246,174	14,314
천안시	87,446	88,402	-956
공주시	12,102	11,590	512
보령시	10,742	10,999	-257
아산시	51,166	40,751	10,415
서산시	19,763	19,532	231
논산시	10,935	11,518	-583
계룡시	9,037	7,855	1,182
당진시	20,826	18,981	1,845
금산군	4,351	4,080	271
부여군	4,557	4,859	-302
서천군	3,979	3,881	98
청양군	2,851	2,595	256
홍성군	9,009	9,446	-437
예산군	8,182	6,624	1,558
태안군	5,542	5,061	481
전라북도	199,432	204,547	-5,115
전주시	80,500	84,656	-4,156
군산시	30,032	31,361	-1,329
익산시	29,946	32,296	-2,350
정읍시	10,387	10,675	-288
남원시	7,570	8,208	-638
김제시	8,913	7,449	1,464
완주군	12,141	10,074	2,067
진안군	2,124	2,218	-94
무주군	1,816	1,712	104
장수군	1,582	1,660	-78
임실군	2,803	2,672	131
순창군	2,680	2,403	277
고창군	4,552	4,758	-206
부안군	4,386	4,405	-19
전라남도	191,956	192,301	-345

행정구역별(읍면동)	총전입(명)	총전출(명)	순이동(명)
목포시	27,306	27,691	-385
여수시	32,884	33,628	-744
순천시	30,495	32,442	-1,947
나주시	14,733	14,335	398
광양시	16,560	14,700	1,860
담양군	4,681	4,523	158
곡성군	2,387	2,330	57
구례군	2,414	2,617	-203
고흥군	4,993	4,704	289
보성군	2,832	3,058	-226
화순군	5,436	5,278	158
장흥군	2,582	2,876	-294
강진군	2,637	2,687	-50
해남군	4,615	4,997	-382
영암군	5,136	4,985	151
무안군	9,935	9,988	-53
함평군	2,571	2,532	39
영광군	5,189	4,539	650
장성군	5,210	4,807	403
완도군	3,290	3,624	-334
진도군	2,414	2,542	-128
신안군	3,656	3,418	238
경상북도	263,156	270,822	-7,666
포항시	46,708	52,079	-5,371
경주시	23,992	24,336	-344
김천시	14,882	14,844	38
안동시	15,782	16,682	-900
구미시	42,533	46,870	-4,337
영주시	10,510	10,554	-44
영천시	11,666	11,537	129
상주시	10,039	9,529	510
문경시	8,609	8,304	305
경산시	31,622	31,296	326
군위군	2,423	1,652	771
의성군	4,055	3,494	561
청송군	2,031	1,886	145
영양군	1,149	1,175	-26
영덕군	2,858	2,836	22
청도군	4,026	3,603	423
고령군	2,746	2,591	155
성주군	3,794	3,584	210
칠곡군	9,935	10,558	-623
예천군	5,815	5,209	606
봉화군	2,349	2,465	-116
울진군	4,001	4,315	-314

행정구역별(읍면동)	총전입(명)	총전출(명)	순이동(명)
울릉군	1,631	1,423	208
경상남도	323,211	341,758	-18,547
진주시	37,511	39,746	-2,235
통영시	11,395	13,037	-1,642
사천시	12,850	12,521	329
김해시	52,257	54,109	-1,852
밀양시	11,160	10,607	553
거제시	23,676	27,779	-4,103
양산시	34,913	35,502	-589
창원시	101,272	110,046	-8,774
의령군	2,438	2,226	212
함안군	5,182	5,572	-390
창녕군	5,009	5,827	-818
고성군	4,683	3,994	689
남해군	3,413	3,356	57
하동군	3,403	3,734	-331
산청군	3,128	2,806	322
함양군	3,047	3,017	30
거창군	4,553	4,580	-27
합천군	3,321	3,299	22
제주특별자치도	86,865	83,717	3,148
제주시	61,348	60,072	1,276
서귀포시	25,517	23,645	1,872

자료: 통계청(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부록표 2-8 | 2020년 시군구별 사회복지시설 통계

지역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	사회복지시설수(개)
전국	15.5	8,026
서울특별시	8.0	775
종로구	12.0	18
중구	7.2	9
용산구	4.8	11
성동구	3.1	9
광진구	6.9	24
동대문구	9.6	33
중랑구	13.4	53
성북구	9.8	43
강북구	13.3	41
도봉구	18.1	59
노원구	9.0	47
은평구	8.8	42
서대문구	10.6	33
마포구	4.0	15
양천구	7.9	36
강서구	7.9	46
구로구	7.4	30
금천구	13.4	31
영등포구	7.9	30
동작구	5.6	22
관악구	9.3	46
서초구	2.4	10
강남구	2.4	13
송파구	5.8	39
강동구	7.4	34
부산광역시	6.4	218
중구	4.8	2
서구	15.7	17
동구	6.7	6
영도구	6.2	7
부산진구	3.6	13
동래구	5.5	15
남구	5.6	15
북구	5.3	15
해운대구	4.5	18
사하구	4.5	14
금정구	9.9	23
강서구	9.4	13
연제구	7.2	15
수영구	4.5	8
사상구	6.1	13
기장군	13.8	24

지역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	사회복지시설수(개)
대구광역시	14.9	361
중구	20.9	16
동구	18.4	63
서구	26.4	45
남구	34.8	51
북구	15.7	69
수성구	8.0	34
달서구	7.9	44
달성군	15.0	39
인천광역시	19.2	566
중구	22.2	31
동구	19.2	12
미추홀구(남구)	16.3	67
연수구	12.1	47
남동구	20.2	106
부평구	17.6	87
계양구	20.9	62
서구	17.5	95
강화군	76.6	53
옹진군	29.3	6
광주광역시	10.2	148
동구	20.4	21
서구	7.1	21
남구	12.6	27
북구	9.8	42
광산구	9.1	37
대전광역시	14.4	211
동구	19.7	44
중구	18.3	43
서구	13.4	64
유성구	8.5	30
대덕구	17.0	30
울산광역시	8.8	100
중구	6.6	21
남구	4.5	7
동구	7.3	16
북구	17.1	38
울주군	8.6	21
세종특별자치시	8.6	21
세종시	18.1	2,432
경기도	9.9	118
수원시	8.4	79
성남시	24.3	112
의정부시	10.7	59
안양시	18.0	147

지역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	사회복지시설수(개)
부천시	6.0	18
광명시	11.4	61
평택시	45.6	43
동두천시	24.6	161
안산시	20.9	226
고양시	4.7	3
과천시	13.7	27
구리시	25.9	185
남양주시	8.7	20
오산시	23.2	116
시흥시	18.6	51
군포시	13.4	22
의왕시	8.9	26
하남시	13.9	149
용인시	28.6	133
파주시	16.9	37
이천시	38.0	71
안성시	14.1	67
김포시	12.9	110
화성시	12.6	48
광주시	48.6	112
양주시	60.4	89
포천시	37.5	42
여주시	36.8	16
연천군	36.9	23
가평군	51.3	61
양평군	29.0	447
강원도	32.9	93
춘천시	25.4	90
원주시	46.4	99
강릉시	13.2	12
동해시	9.4	4
태백시	19.4	16
속초시	13.8	9
삼척시	46.2	32
홍천군	55.9	26
횡성군	23.3	9
영월군	21.6	9
평창군	27.1	10
정선군	15.7	7
철원군	40.2	10
화천군	22.4	5
양구군	9.5	3
인제군	22.4	6
고성군	25.0	7

지역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	사회복지시설수(개)
양양군	25.0	400
충청북도	30.0	63
충주시	29.3	39
제천시	17.5	148
청주시	15.4	5
보은군	9.9	5
옥천군	59.0	28
영동군	21.5	18
진천군	35.5	14
괴산군	29.0	27
음성군	48.0	14
단양군	32.6	12
증평군	21.1	447
충청남도	15.9	105
천안시	31.6	33
공주시	19.0	19
보령시	16.1	51
아산시	18.2	32
서산시	36.9	43
논산시	25.7	11
계룡시	16.2	27
당진시	56.4	29
금산군	30.6	20
부여군	25.1	13
서천군	22.6	7
청양군	16.0	16
홍성군	33.3	26
예산군	24.1	15
태안군	19.9	359
전라북도	9.4	62
전주시	16.4	44
군산시	24.1	68
익산시	30.4	33
정읍시	21.1	17
남원시	35.2	29
김제시	30.6	28
완주군	39.4	10
진안군	29.1	7
무주군	18.1	4
장수군	33.0	9
임실군	28.8	8
순창군	23.8	13
고창군	21.1	11
부안군	24.6	455
전라남도	16.1	36

지역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	사회복지시설수(개)
목포시	13.9	39
여수시	12.0	34
순천시	20.8	24
나주시	13.2	20
광양시	41.1	19
담양군	39.2	11
곡성군	19.4	5
구례군	25.0	16
고흥군	17.3	7
보성군	25.6	16
화순군	13.2	5
장흥군	23.1	8
강진군	29.1	20
해남군	20.5	11
영암군	18.6	16
무안군	46.8	15
함평군	22.6	12
영광군	18.0	8
장성군	24.0	12
완도군	12.8	4
진도군	28.3	11
신안군	21.6	571
경상북도	9.3	47
포항시	10.7	27
경주시	33.4	47
김천시	12.6	20
안동시	12.2	51
구미시	23.3	24
영주시	21.6	22
영천시	22.6	22
상주시	29.4	21
문경시	22.4	59
경산시	21.5	5
군위군	36.7	19
의성군	24.0	6
청송군	30.0	5
영양군	11.0	4
영덕군	37.9	16
청도군	31.9	10
고령군	20.7	9
성주군	26.1	30
칠곡군	10.8	6
예천군	19.1	6
봉화군	8.2	4
울진군	33.1	3

지역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	사회복지시설수(개)
울릉군	12.9	430
경상남도	12.6	44
진주시	18.7	24
통영시	21.6	24
사천시	5.9	32
김해시	23.8	25
밀양시	10.2	25
거제시	8.8	31
양산시	10.2	106
창원시	41.0	11
의령군	28.0	18
함안군	17.9	11
창녕군	29.2	15
고성군	21.0	9
남해군	24.6	11
하동군	34.4	12
산청군	30.7	12
함양군	19.5	12
거창군	18.2	8
합천군	15.7	106
제주특별자치도	15.6	77
제주시	15.9	29

자료: 통계청(2020).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방향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의뢰로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방향성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센터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귀 센터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센터 사업에 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예를 들어,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께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센터가 가지고 있는 성과 보고서나 자료를 참조해서 응답해주셔도 좋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가족센터의 사업을 개선·발전시키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연구책임자 :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 조주희(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본 조사는 전국의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센터당 1부 작성)

1. 다음은 센터 기본 질문입니다.

1-1. 귀하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 센터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1-2. 귀하가 근무하는 센터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① 가족센터(통합)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 귀하가 근무하는 센터의 SOC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① SOC 개원하여 사용중            ② SOC 공사중으로 입주예정  
③ SOC 규모의 건물사용 중        ④ SOC 해당사항 없음

1-4. 귀하가 근무하는 센터의 최초 설립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가족센터인 경우 먼저 생긴 기관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시범사업기간 제외)

1-5. 귀하의 현 센터 경력은 몇 년입니까? \_\_\_\_\_년

\* 2~3번은 현재 센터 이용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최근 1~2년 동안 귀 센터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아이돌봄 서비스 제외)을 고려할 때, 아래 대상 중 어떤 가족(가구)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가장 많거나 가장 적습니까?**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1. 가장 서비스 대상이 많이 되는 유형의 가족      1순위:                      2순위:

2-2. 가장 서비스 대상이 적게 되거나 안되는 가족      1순위:                      2순위:

- |                        |                               |
|------------------------|-------------------------------|
| ①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        | ⑥ 중장년 1인 가구                   |
| ② 학령기(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 ⑦ 노년 1인 가구                    |
| ③ 청소년기(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 ⑧ 미(비)혼 청년                    |
| ④ 성인자녀를 둔 가족           | ⑨ 자녀가 모두 독립한 노년기 부부           |
| ⑤ 청년 1인 가구             | ⑩ 기타 (                      ) |

3. 최근 1~2년 동안 귀 센터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아이돌봄 서비스 제외)을 고려할 때, 어떤 인구층이 가장 많이 참여합니까?

개인 단위 프로그램은 개인으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인 경우 성인 중심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2) 연령대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⑦ 알 수 없음

3-3) 결혼 지위            ① 미(비)혼 ② 기혼 ③ 알 수 없음

3-4) 자녀 연령대        ① 없음(무자녀) ② 미취학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성인

3-5) 가구 유형            ① 개인 단위 ② 부부 단위 ③ 부모+자녀 단위

3-6) 다문화/이주민    ① 내국인가족 ② 다문화(결혼이주)가족 ③ 외국인가족

**\* 4~13번은 지역 인구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최근 5년 동안 귀 센터가 있는 지역의 인구변화를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문    항	많이 감소하였다	조금 감소하였다	변화 없다	조금 증가하였다	많이 증가하였다
1) 총 주민 수	①	②	③	④	⑤
2) 18세 이하 아동 인구	①	②	③	④	⑤
3) 청년 인구	①	②	③	④	⑤
4) 중장년 인구	①	②	③	④	⑤
5) 노년 인구	①	②	③	④	⑤
6) 외국인이나 다문화 인구	①	②	③	④	⑤
7) 청년기 1인 가구	①	②	③	④	⑤
8) 중장년 1인 가구	①	②	③	④	⑤
9) 노년 1인 가구	①	②	③	④	⑤

5. 이러한 인구변화가 귀 센터의 사업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편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변화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참여자의 개별 욕구가 다양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해져 전문강사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5) 실무자를 재교육하기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의 종류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 연계나 협력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주민 리더 발굴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서비스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간 활용 사업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비대면 서비스의 요구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3) 관할 지방정부의 요구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최근 5년 동안 귀 센터가 있는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어떠한 인프라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까?

문항	많이 감소하였다	조금 감소하였다	변화 없다	조금 증가하였다	많이 증가하였다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	①	②	③	④	⑤
2) 초등학교 수	①	②	③	④	⑤
3) 중고등학교 수	①	②	③	④	⑤
4) 다함께돌봄센터, 키움센터 등 초등돌봄 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대상 유관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6) 청년센터 등 청년 관련 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7) 중장년 관련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8) 노인복지관 등 노인 대상 유관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외국인 대상 유관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1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11) 도서관 등 문화시설 수	①	②	③	④	⑤
12) 공용부엌, 공용 오피스, 공용주택단지 내 공용공간	①	②	③	④	⑤

7. 이러한 지역사회 인프라 변화가 귀 센터의 사업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편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변화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 다양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의 종류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의 타 기관과 연계나 협력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주민 리더 발굴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서비스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9)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간 활용 사업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관할 지방정부의 요구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관할 지방정부의 예산이 감소하였다.					

8. 귀 센터에서는 지역의 인구변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변화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에 맞는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가원에서 실시하는 관련 주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가원 외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주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센터 내부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관련 주제를 공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 센터는 인구구조 변화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잘 되어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귀 센터가 있는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변화를 고려할 때 귀 센터에서는 향후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가족사업지침 사업임)

문 항		축소가 필요하다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다	확대가 필요하다
가족 관계 영역	임신출산 부모지원	①	②	③
	영유아기 부모지원	①	②	③
	학부모지원	①	②	③
	가족가치교육지원	①	②	③
	아버지 역할 지원	①	②	③
	부부역할 지원	①	②	③
	이혼전후 가족지원	①	②	③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①	②	③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①	②	③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①	②	③
	가족상담	①	②	③
	손자녀 조부모 역할 지원	①	②	③
	노부모 부양가족지원	①	②	③
가족 돌봄	가족희망드림(정보제공, 상담, 돌보미파견, 사례관리)	①	②	③
가족 생활	일·가정양립지원	①	②	③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①	②	③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①	②	③
	1인 가구 생활 지원	①	②	③
	1인 가구 상담	①	②	③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①	②	③
지역 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 봉사단)	①	②	③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①	②	③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	①	②	③
	가족사랑의 날	①	②	③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①	②	③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지원	①	②	③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①	②	③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①	②	③
	다함께 프로그램	①	②	③
지역주민간 교류 프로그램(식사공유, 교류 모임 지원 등)	①	②	③	

11. 귀 센터가 있는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변화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감소할 것이다	조금 감소할 것이다	변화 없을 것 같다	조금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1) 센터에서 하는 집합교육(예: 센터에서 하는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센터에서 하는 상담	①	②	③	④	⑤
3) 센터에서 하는 문화체험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내 다른 기관으로 찾아가는 집합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6)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이나 Webex 활용)	①	②	③	④	⑤
7) 실시간 비대면 상담(Zoom이나 Webex 활용)	①	②	③	④	⑤
8) 실시간 비대면 문화체험 활동	①	②	③	④	⑤
9) 동영상 교육	①	②	③	④	⑤
10) 동영상 문화체험 활동					
11)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사업	①	②	③	④	⑤
12) 다문화교류소통공간을 활용한 사업	①	②	③	④	⑤
13) 개별 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14) 대면으로 하는 자조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④	⑤
15) 비대면으로 하는 자조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④	⑤

12.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해야 할 다음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제의 실무자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 개발	①	②	③	④	⑤
3) 미래에 맞는 새로운 기술 활용 지원(예: 비대면 상담 플랫폼, 실적시스템과 이용자 자동 연계, 실적시스템 결과 시각화 등)	①	②	③	④	⑤
4) 미래에 맞는 센터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 방안 제시	①	②	③	④	⑤
5) 각 지역에 맞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 보장	①	②	③	④	⑤
6) 각 지역에 맞는 실적 목표 설정 및 관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7) 각 지역에 맞는 사업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제공	①	②	③	④	⑤







## (저출생)고령화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방향성 연구

발행일 | 2023년 11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21, 24층  
전화 | 02-3479-7600  
팩스 | 02-3479-7798  
홈페이지 | [www.kihf.or.kr](http://www.kihf.or.kr)  
기획·편집 | 소통협력실 가족정책연구센터  
수행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쇄처 | 스마일기획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